

Jeonbuk State Institute

기초연구

2024-03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llenges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in Jeonbuk State

고희운 정미선



설립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지역 시·군의 지역발전 등에 관련된 체계적인 조사·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

주요기능

- 도정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 지역경제,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및 정책대안의 모색
-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의 연구 용역 수탁
- 연구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학술대회 및 정보교류 협력
- 국내외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연구진 소개

고희운

부산대학교 경영학(재무관리) 박사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정미선

성신여자대학교 지리학 석사
전북연구원 전문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llenges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in Jeonbuk State

고희운 정미선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 책임	고희운	연구위원	연구총괄
공동 연구	정미선	전문연구원	제3장 3절

연구관리 코드 : 24GI02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1.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3고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정성 점검이 필요함
- 효율적인 기업지원 정책 시행을 위해 한계기업의 현황 및 생존패턴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지원 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방법

-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한정함
-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나, 한계기업의 정의(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에 따라 분석에 사용되는 관측연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임
- 내용적 범위는 한계기업에 초점을 두고자 함.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계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함
- 문헌 및 정책조사, 데이터 구매, 통계분석을 수행함
 - 국내외 한계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식별 방법을 검토하고, 한계기업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수행,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검토함
 - 데이터는 따로 외부 자료 제공업체(Value Search)를 통해 구매하되, 전북자치도 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봄
 - 통계분석은 구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 그리고 생존패턴 및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고, 재무비율에 따른 중소기업의 재무 현황과 추이를 지역별·업종별로 나눠 현황을 비교·분석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계기업의 발현은 저수익·고부채·저성장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한 특성을 통해 기업이익의 한계와 비용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지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재무 분석)한계기업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높은 부채의존성과 함께 높은 이자비용의 부담, 낮은 유동성, 낮은 영업효율성과 동반한 저수익성, 저성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생존패턴 분석)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의 진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관리와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매출 성장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함
- (결정요인 분석) ROA, 부채비율, 매출액, 평균차입비율이 한계기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함
- 구조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이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계기업의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복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 정책 수혜 기업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및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 (평가체계 구축) 정책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부실 전염을 통한 연쇄 반응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데 기여
 -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 부실기업 조기 발견 및 신속한 대응 정책 시행으로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 수행 가능
-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선별적 지원
 - 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제 상황 혹은 산업(업종) 특성에 맞게 한계기업 혹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도 함께 마련 필요함
- 정책-금융기관 연계 강화 및 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 부실 위험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의 관리와 금융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관계형 금융 강화하여 기업 특성과 니즈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지원

요 약	i
-----------	---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가. 연구 배경	3
나. 연구목적	5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6
가. 연구 범위	6
나. 주요 연구 내용	6
다. 연구 방법	8
라. 연구 기대효과	9
3. 연구 추진체계	10

제2장 한계기업의 정의와 연구 동향

1. 한계기업의 정의	13
2. 한계기업 관련 연구 동향	16
가. 한계기업이 미치는 경제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16
나. 한계기업 결정요인 및 진입(탈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
다. 한계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24
3. 소결	27

제3장 전북 한계기업의 현황

1. 분석대상의 설정	31
2. 한계기업의 현황	32
가. 한계기업의 비중	32
나. 전북 한계기업의 현황	40
3. 중소기업 정책 동향	51
가.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동향	54
나. 전북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동향	64
4. 소결	73

제4장 한계기업의 생존패턴과 결정요인 분석

1. 변수의 정의	77
2.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78
가. 분석 방법론	78
나. 분석 결과	79
3. 결정요인 분석	83
가. 분석 방법론	83
나. 분석 결과	84
4. 소결	87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종합	91
2. 정책적 제언	93

참고문헌	97
------------	----

영문요약 (Summary)	103
----------------------	-----

부록	107
----------	-----

표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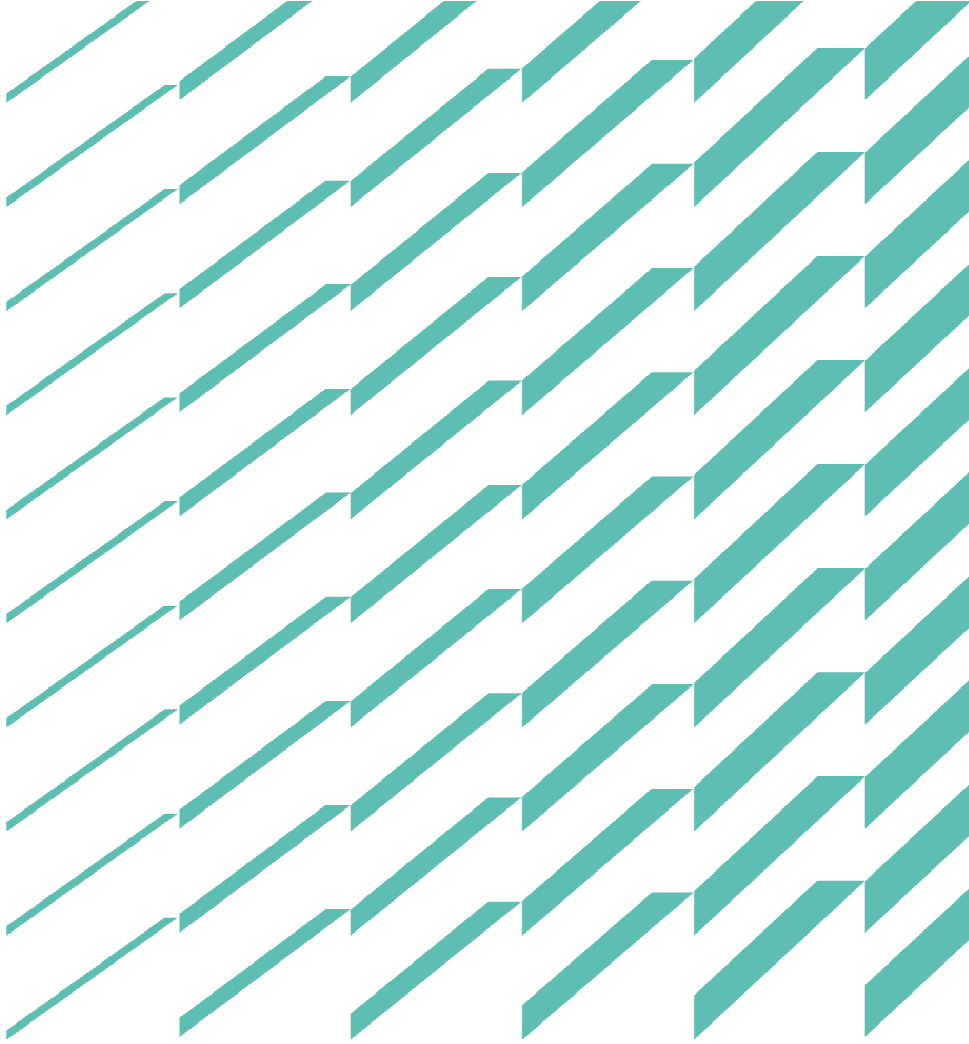
LIST OF TABLES

[표 1-1]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변화(2017~2021)	7
[표 1-2] 금리변동에 따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변화(2021)	8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한계기업 정의	15
[표 3-1] 지역별 한계기업의 업체 수와 비중	33
[표 3-2] 대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35
[표 3-3] 대분류 업종별·지역별 한계기업의 비중	36
[표 3-4] 전북 중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39
[표 3-5] 전북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50
[표 3-6]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2023.1.) 세부 추진 과제	54
[표 3-7] 신용위험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60
[표 3-8]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2024) 세부 추진 과제 중 금융지원 사업	60
[표 3-9]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세부 추진 내용	62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내 금융지원 정책 현황(2024년 기준)	65
[표 3-11] 성장단계별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금융 지원사업	67
[표 3-12]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 세부내용	70
[표 4-1] 변수의 정의	77
[표 4-2] 기초통계량	78
[표 4-3]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85
[표 4-4]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제조업)	86
[표 4-5]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비제조업)	86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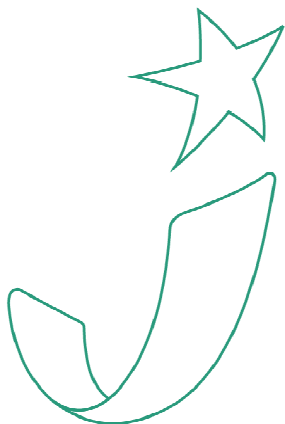
[그림 1-1] 거래소별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3
[그림 1-2] 상장사의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율 추이	3
[그림 1-3] '23년말 5대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4
[그림 1-4] '23년 5대 지방은행의 누적 상·매각 규모	4
 [그림 2-1] 한계기업의 구분	13
 [그림 3-1] 지역별 한계기업의 비중 추이(%)	32
[그림 3-2] 최근 3년(COVID-19 기간)의 한계기업 비중 변화	34
[그림 3-3] 전북의 대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37
[그림 3-4] 전북 업종별 한계기업의 분포	44
[그림 3-5] 전북 기업의 재무비율 시계열 추이	48
[그림 3-6]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 흐름	51
[그림 3-8]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도	66
[그림 3-9]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기업군 현황	66
 [그림 4-1]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결과	81



제 1 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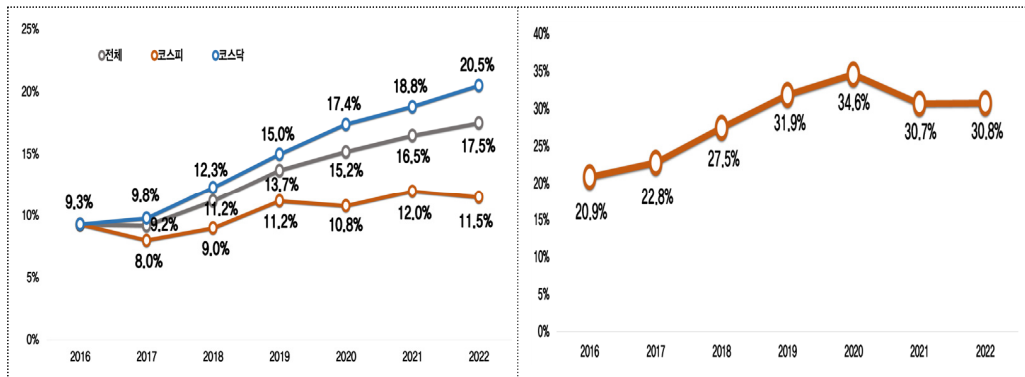


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 배경

코로나19 이후 이어지는 3고현상(고금리, 고물가, 고환율)과 글로벌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한계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한계기업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며 '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일시적 한계기업은 '22년 30.8%를 기록하며 상장사 3개 중 1개는 일시적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2023.0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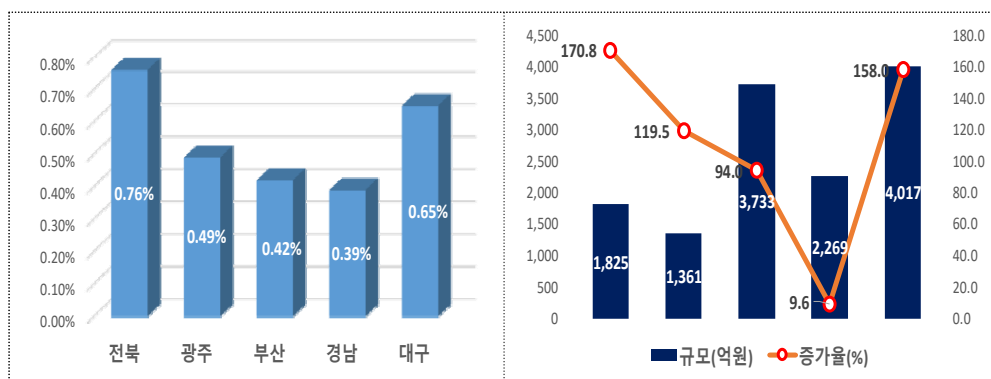
[그림 1-1] 거래소별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그림 1-2] 상장사의 일시적 한계기업의 비율 추이

한계기업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며 이로 인한 시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전 세계 79개국의 평균 한계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05년 4.6%에서 '16년 8.6%로 크게 증가하였고 저소득·중소득 국가에 비해 고소득 국가에서 이 현상이 더 심화된(El Ghoul et al., 2020). 14개 OECD 회원국의 한계

기업 비중은 '80년대 평균 4%였으나, '17년에는 15%로 증가하고 있다(Banerjee and Hofmann, 2020).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으로의 자원의 이동을 제한하여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들의 증가는 전체 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키는 경향을 보인다(McGowan et al., 2018; Caballero et al., 2008). 한계기업은 주로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에 집중되어 증가하고(조재한 외, 2020),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김원규·최현경, 2017; 송상윤, 2020). 김원규·최현경(2017)은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하면 해당 업종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계기업은 금융 부문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 시중은행 대비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의 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중에서도 전북은행은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Acharya et al.(2021)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국가들의 정부보증 확대로 인한 시장 유동성 공급이 부실을 야기하였고, 부실로 인한 상각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을 오히려 확대했음을 비판하였다. 최근 국내 5대 지방은행(BNK부산·BNK경남·DGB대구·광주·전북)의 '23년 누적 상·매각 규모는 1조3,250억원으로 전년대비 93.6%(6,405억원) 증가하였고, 이중 전북은행이 가장 높은 전년대비 증가율(170.8%)을 보이고 있다. 은행의 전체 대출에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전북은행(0.76%)이 5대 지방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은행별 실적 자료(금융통계정보시스템)

[그림 1-3] '23년말 5대 지방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

[그림 1-4] '23년 5대 지방은행의 누적 상·매각 규모

나. 연구목적

최근 불안한 대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고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가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중소기업은 매출 감소와 더불어 비용부담이 커지며 수익성 악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기에 위험 요인을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 과제를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재무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현시점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한계기업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계기업의 생존패턴과 결정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한계기업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한계기업은 다양한 식별 방법이 존재하기에 선행연구에서 다뤄진 방법들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 사용될 한계기업의 식별법을 채택하고 한계기업을 정의한다. 그리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에 적용하여 식별된 한계기업과 그 외 정상기업의 재무변수를 통해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현황과 특성을 점검한다.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을 통해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되는 패턴을 살펴보고 한계기업화 전후에 기업 특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한다. 또한 한계기업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기업의 부실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요인들을 도출한다.

한계기업의 존속과 증가는 국가의 전체 생산성을 저해시키고, 나아가 기업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기에 이들의 관리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다. 하지만 대체로 그 논의는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왔다. 중소기업 대상의 구조조정 혹은 자금지원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되어 개별 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는 다소 소극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한계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에 한정하여 설정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나, 한계기업의 정의(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에 따라 분석에 사용되는 관측연도는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한계기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문헌조사를 통해 수집된 한계기업의 정의를 살펴보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식별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부실기업, 부실징후기업, 한계기업 등 다양한 용어들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2015년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 및 식별로써 사용하고 있다.

나. 주요 연구 내용

1) 한계기업의 정의

한계기업은 일반적으로 자력으로 생존과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즉, 경쟁력이 낮아 기업의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익 창출마저 어려운 상태에 이른 기업을 한계기업이라 일컫는다. 연구를 위해 한계기업을 정의하고 이를 식별하는 것은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가장 일반적인 식별의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한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한계기업의 정의는 수익성을 기준으로 식별하였고, 그 외 다양한 연구에서 다른 식별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최현경·안지연(2021)은 한계기업을 식별하는데 한국은행의 정의(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를 사용하였고, 당해 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송상윤(2020)은 이자보상배율이 연속 3년 이상 1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박준호(2023)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되, 설립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대체로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특성을 한계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식별조건으로 보고 있으나,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토빈q를 활용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Caballero et al.(2008)은 기업이 신용도가 가장 높은 기업보다 이자율이 낮게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면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계기업으로 식별하였다. Banerjee and Hofmann(2018)은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지속되고, 업력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Banerjee and Hofmann(2022)은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으로 2년간 지속되고 토빈q가 산업 내 중앙값보다 낮은 기업으로 보았다.

2) 한계기업의 현황

한계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최근 5년간 일시적 한계기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이고, '21년 기준 외감기업 대상 3개 중 1개가 일시적 한계기업이며 그 비중이 34.1%를 차지한다. 산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이 7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기업(27.6%)에 비해 중소기업(35.5%)의 비중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변화(2017~2021)

(단위 : %)

		2017	2018	2019	2020	2021
외감기업(17,827)		28.1	31.2	33.0	36.6	34.1
규모별	중소기업(14,656)	28.8	32.1	33.9	37.4	35.5
	대기업(3,171)	25.2	27.3	28.6	32.9	27.6
산업별	제조업(8,995)	23.8	28.1	28.8	32.5	30.8
	숙박음식업(292)	57.2	55.8	53.8	86.3	76.4
	사업시설관리업(385)	51.7	52.5	57.9	59.7	59.5
	부동산업(1,919)	48.7	48.8	51.6	55.1	52.2

* 주 : 비금융기업, ()는 해당 기업수

자료 : 전경련 보도자료('23.5.24)

금리 상승시에는 한계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지고, 그 비중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가 3%p 인상시 제조업(14.9%p),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4.6%p), 부동산업(16.7%p),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4.8%p) 등에서 일시적 한계기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도 금리가

3%p 인상되면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이 35.4%인 것으로 나타나 10개 중 3개 이상의 대기업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 금리변동에 따른 일시적 한계기업 비중 변화(2021)

(단위 : %, %p)

		-3%p	-2%p	-1%p	base	+1%p	+2%p	+3%p
외감기업		-9.5	-7.2	-4.5	34.1	5.4	9.5	13.1
규모	중소기업	-10.2	-7.8	-4.8	35.5	5.9	10.5	14.2
	대기업	-6.0	-4.4	-2.8	27.6	2.9	5.2	7.8
산업	제조업	-7.6	-5.7	-3.4	30.8	6.0	10.8	14.9
	전기·가스	-13.9	-11.3	-4.6	29.8	4.0	8.6	14.6
	부동산업	-18.3	-13.2	-7.8	52.2	8.0	12.7	16.7
	사업시설관리업	-42.1	-39.2	-33.0	59.5	10.9	12.7	14.8

자료 : 전경련 보도자료('23.5.24)

다. 연구 방법

1) 정보조사 및 분석 방법

문헌 및 정책조사, 데이터 구매, 통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국내외 한계기업의 정의에 대한 논의와 식별 방법을 검토하고, 한계기업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수행, 그리고 전북자치도 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검토한다. 데이터는 따로 외부 자료 제공업체(Value Search)를 통해 구매하되, 전북자치도 내 외감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계분석은 구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황 분석, 그리고 생존패턴 및 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한다. 현황 분석은 재무비율에 따른 전북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재무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 산업군별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생존패턴 및 결정요인 분석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방법론을 설정하고 전북의 분석결과와 선행연구의 분석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전북 내 한계기업의 특성을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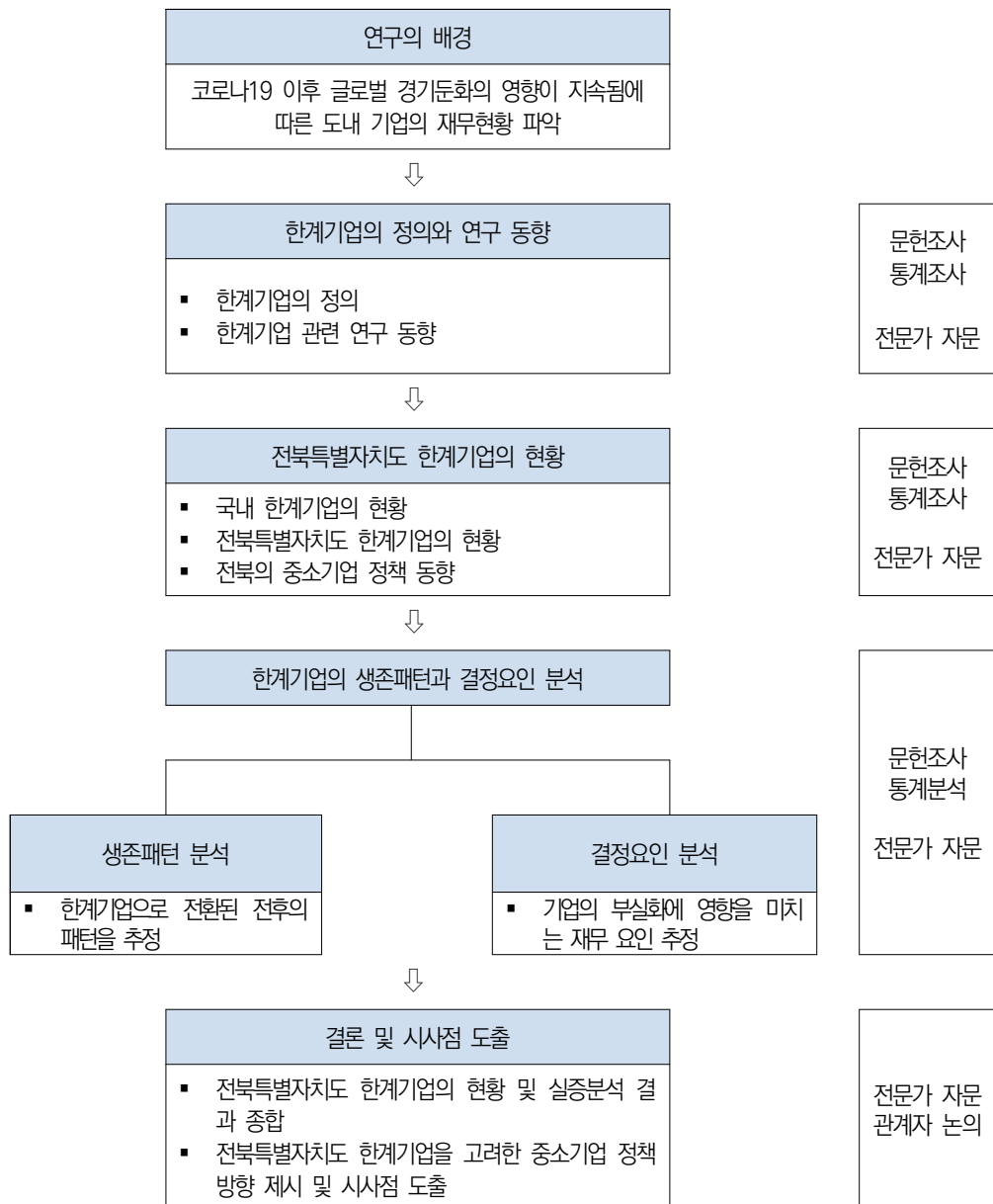
2) 전문가 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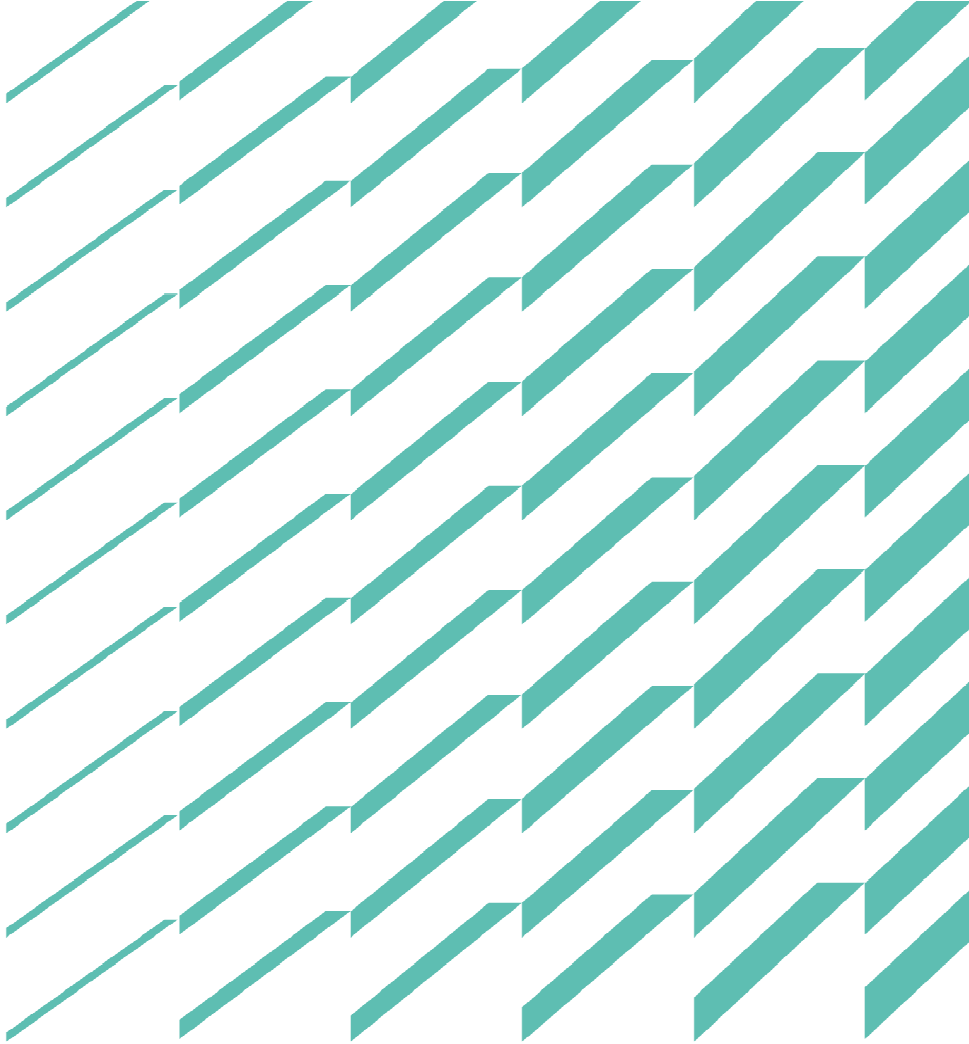
전북자치도 내외 중소기업 연구 및 정책 관련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다. 특히, 한계기업의 정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통계분석 활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자문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한계와 보완을 위한 정책적 자문도 함께 실시한다.

라. 연구 기대효과

본 연구는 전북자치도 내 중소기업의 재무실태 파악을 통해 기업지원 정책의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 위기 대응 정책 및 선별 지원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기업의 사업 전환 및 구조개선의 제도적 지원 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산업 패러다임의 급변에 맞춰 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전략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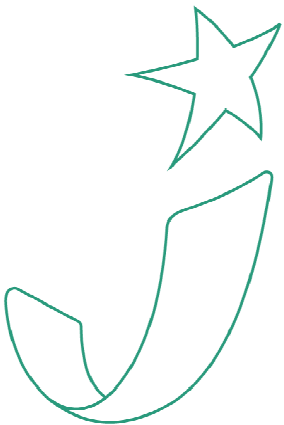




제2장

한계기업의 정의와 연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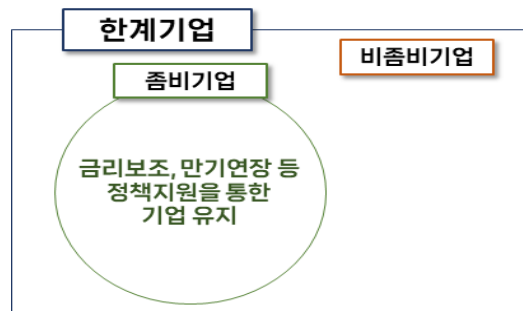
1. 한계기업의 정의
2. 한계기업 관련 연구 동향
3. 소결



제 2 장 한계기업의 정의와 연구 동향

1. 한계기업의 정의

한계기업은 일반적으로 이자보상비율¹⁾이 3년 연속 1(100%)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된다. 이는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2015.6.)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비금융법인 25,452개(2009~14년 중 폐업 업체 포함)를 대상으로 분석해 정의한 이후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한국은행 경남본부(2015)에서는 한계기업을 일반적인 한계기업과 다중 한계기업, 만성적 한계기업 등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하고 있으며, 한계기업 중 외부자금의 보조를 받아 사업을 지속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다시 좀비기업과 비좀비기업으로 분류한다. 다중 한계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 측면의 취약성이 중첩되고 있는 기업을 말하며, 세 가지 측면이 모두 취약한 기업은 악성 한계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성적 한계기업은 3년 이상 연속적으로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2020년에는 제조업 분야 한계기업 현황과 노동생산성을 분석하기 위해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인 반면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자료 : 한국은행 경남본부(2015)를 참고하여 저자 재구성

[그림 2-1] 한계기업의 구분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한계기업의 정의는 주로 수익성을 기준으로 식별하였고, 대부분 이를 준용하여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장승제·송민섭(2018)은 한계기업을 재무곤경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되는 기업으로 정의하였으며, 재무곤경은 이자보상비율 1미만 또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의 값인 상태로 구분하였다. 최현경·안지연(2021)은 한계기업을 식별

1)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하는데 한국은행의 정의(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를 사용하였고, 당해 연도에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은 일시적 한계기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구정한(2021)은 팬데믹 시기 한계기업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 위해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최현경(2021)는 국내 제조업 분야 한계기업 실증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한계기업의 증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 3년이상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산업은행(2022)은 외부 자금 지원 없이 자력으로 기업활동 유지 및 성장이 어려운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며, 한국은행의 정의를 차용해 구분하였다.

그 외 다양한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용하되, 추가적인 다른 식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연구는 대체로 기업의 성장주기를 고려하여 업력을 포함하여 식별하였다. 송상윤(2020)은 이자보상배율이 연속 3년 이상 1 미만이면서 업력이 10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박준호(2023)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되, 설립된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송단비 외(2021)은 한국은행의 기준에 더불어 신생기업의 구분을 위해 업력이 5년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였고, 9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1 미만인 기업은 장기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이상호(2021)은 한계기업을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 보는 전통적인 정의 외에 저금리·고차입의 특성을 고려하여 더욱 구체적인 식별 방법을 제안하였다.²⁾

대체로 해외 선행연구들도 마찬가지로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특성을 한계기업의 가장 일반적인 식별조건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한계기업을 식별하는 조건들은 더욱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다. Caballero et al.(2008)은 기업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받고 있으면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보아 한계기업으로 식별하였다. Banerjee and Hofmann(2018)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하여 1미만이고, 업력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다. McGrowan et al.(2018)은 3년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고 10년 이상 업력을 유지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allak et

2) Acharya et al.(2020)의 연구에서 제시한 한계기업을 식별하는 기준을 차용하였는데, 저금리·고차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자세하게는, 이자보상배율이 산업 내 하위 50%이고, 고차입 특성(순유동자산을 제외한 부채총자산비율이 산업 내 상위 50%), 저금리 환경에 따른 저비용 자금 조달 특성(신용등급이 AA-이상의 우량등급 기업이 부담하는 평균차입이자율보다 부채조달비용이 낮은 경우)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식별하였다.

al.(2018), McGrowan et al.(2018), 그리고 Ghoul et al.(2021)은 3년 연속 이자보상 비율이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는 바는 동일하나, 추가로 업력이 10년 혹은 5년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식별하였다. Blažková and Dvoutely(2020)은 체코 음식료산업계 기업을 분석하기 위해 3년 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Chang et al.(2021)은 중국 내 한계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비정상 수익 및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이 3년 연속 손실상태를 지속하는 경우에 한계기업으로 정의하였다. Banerjee and Hofmann(2022)은 2년간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고 토빈q가 산업 내 중앙값보다 낮으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처럼 한계기업을 식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심지어 동일한 연구자임에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한계기업의 정의를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이자보상비율 1미만 혹은 3년 연속의 지속성에 따른 조건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적용과 정책적 활용을 위해 식별의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은 없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표 2-1] 선행연구에서의 한계기업 정의

정의	관련 선행연구
3년 이상 이자보상비율 1(100%) 미만인 기업	한국은행(2015), 최현경·안지연(2020), 최현경·안지연(2021), 구정환(2021), 자본시장연구원(2021a, 2021b), 산업은행(2022),
3년 이상 이자보상비율 1(100%) 미만이며, 영업현금흐름이 음의 값인 기업	장승제·송민섭(2018)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3년 이상 10만1천원 이하인 기업	박준호(2023)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3년 이상 10만1천원 이하인 기업	송상윤(2020), McGrowan et al.(2018)
이자보상비율이 연속 3년 이상 10만1천원 이하인 기업	Banerjee and Hofmann(2018)
가장 신용도가 높은 기업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받는 기업	Caballero et al.(2008)
3년 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된 기업	Blažková and Dvoutely(2020)
2년간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고 토빈q가 산업 내 중앙값보다 낮은 기업	Banerjee and Hofmann(2020)
비정상 수익 및 손실을 제외한 순수익이 3년 연속 손실상태를 지속하는 기업	Chang et al.(2021)

자료 : 저자 작성

2. 한계기업 관련 연구 동향

본 장에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을 통해 한계기업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한계기업의 존재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한계기업의 결정요인과 진입(탈출) 요인, 그리고 한계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로 분류하여 알아본다.

가. 한계기업이 미치는 경제사회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연구

한계기업은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생산성 저하, 산업 경쟁력 약화, 경제 성장 지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다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aballero et al.(2008)은 일본의 한계기업 문제를 중심으로 한계기업의 생존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의 생존이 전체 경제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한계기업의 생존이 정상기업의 성장과 진입을 억제하며, 산업 전반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여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의 주된 원인을 은행들이 부실한 한계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현상으로 지적하며 부실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관행 변화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최현경 외(2017)의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를 이용하여 한계기업의 증가가 노동과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이 1% 증가할 때 노동생산성이 0.280.54%p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은 0.340.5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한계기업을 분석한 Caballero et al.(2008)의 결과와 유사하며, 경기 침체와 부실 기업의 유지가 정상기업 및 국가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김원규·최현경(2017)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통계청 기업활동조사를 활용해 한계기업 증가에 따른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업종별 한계기업 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0.23% 감소하였다. 연구자는 과거 두 차례(1980년대 초, 1990년대 말)의 구조개혁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조정이 때로는 경제 및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Andrews et al.(2017)은 한계기업이 시장에

서 퇴출되지 않을 경우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지를 검토하였고, 한계기업의 증가가 자본과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상기업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 기업 도산 절차 개선, 비효율적 기업의 시장 퇴출 촉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Hallak et al.(2018)은 19개 유럽 국가의 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계기업의 확산이 정상기업의 자산, 고용, 총요소생산성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을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하였고, 추가로 '업력이 10년 이상이고 5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으로도 한계기업을 정의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계기업 비율이 증가할수록 정상기업의 성장률이 감소하며, 반대로 한계기업 비율이 감소할수록 정상기업의 성장성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자는 은행이 자금을 조달할 때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고,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보조금이 산업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McGowan et al.(2018)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OECD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산업 내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본 비중이 높을수록 일반적인 비한계기업의 투자 및 고용 성장이 억제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재분배가 감소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노동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생존율 증가가 정상기업의 성장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시사하였다.

배한영 외(2019)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한계기업 증가가 산업 전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는 해당 산업의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한 기업들은 생산요소 조달의 다변화와 강한 경쟁 압력으로 인해 한계기업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감소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연구자는 한계기업의 비중이 증가하더라도 국제화를 통해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송상운(2020)은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계기업 증가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을 정의하였으며, 분석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만성한계기업의 증가가 노동생산성 저하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만성한계기업의 비중이 최저로 유지될 경우 정상기업의 유형자산 증가율, 고용 증가율, 노동생산성이 상승할 것이라고 시사하였다.

유기환·허정(2022)은 2006~2019년 기업활동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계기업 여부에 따른 생산성 차이와 한계기업 비중이 수출기업의 진입 및 퇴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대비 총요소생산성이 낮았으며,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는 수출기업의 진입 및 퇴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체 수출기업의 생산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한계기업의 부가가치와 이윤 측면에서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이다. 감주식·정태현(2018)은 2013년과 201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R&D 지원사업에 참여한 7,575개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한계기업 여부에 따른 과제 성공률과 매출 성장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정상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한계기업보다 우세하였고, 한계기업 중 과제에 성공한 경우 매출 성장률이 실패한 기업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재(2021)은 2010~2018년 기업활동조사를 통해 한계기업 비율 증가가 기업 마진율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가격 인하 압력으로 작용하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연구자는 한계기업 비율이 높아지면 대출 경로와 가격 경쟁이 상호작용하여 마진율 감소를 유발한다고 설명하며, 정부지원 대상을 내재가치를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이상호·유지연(2021)은 외부감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와 고차입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을 정의하고, 이들이 산업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한계기업의 증가는 고용과 설비투자를 위축시키고, 저비용 차입 자본을 통한 한계기업의 저마진 구조가 시장 경쟁을 왜곡하여 정상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자는 저비용 차입자본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정한성·임희석(2022)은 2012~2014년 코스피 상장사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한계기업의 탐지 및 그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및 신규 시장 진출 기업에 배분되어야 할 자원을 점유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측하여 경영 전략을 재수립하는 데 필요한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증가에 따른 비효율성과 국가 차원의 인플레이션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양대천·조정호(2024), Acharya et al.(2020), Cheung and Imai(2024) 등이

있다. 양대천·조정호(2024)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계기업과 재무보고 품질 및 투자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은 재무보고 품질이 낮아질수록 비효율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

Acharya et al.(2020)은 12개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한계기업의 신용이 저물가의 원인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의 신용 감소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관련이 있었으며, 한계기업의 과잉 생산능력이 가격 인상 압력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밝혔다. 연구자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금융 마찰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Cheung and Imai(2024)는 1992년부터 1996년까지의 일본 47개 현의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은행의 대출 에버그리닝 정책이 자원 배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은행의 한계기업 대출 지속은 저기술 산업에서 생산 및 고용 성장 감소로 이어졌으며, 결과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연구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 에버그리닝 정책이 국가 산업 전반을 침체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와 같이 한계기업을 주요 변수로 하여 이들의 성과나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은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부가가치, 마진을 등 다양한 성과 지표를 활용하여 한계기업의 영향력을 검토하였다. 연구마다 한계기업의 정의와 분석 방법에 따라 일부 추정 결과에 차이는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의 증가는 고용,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자산, 매출, 부가가치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효율성을 높이며, 국가적 차원의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비교적 일치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 한계기업 결정요인 및 진입(탈출)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계기업에 미치는 요인은 금리, 대출, 레버리지, 혁신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한계기업의 진입(탈출) 가능성, 진입(탈출) 예측, 수명, 대출 및 임금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먼저, 한계기업 진입가능성을 다룬 연구이다. Tan et al.(2016)의 연구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매출이 500만 위안을 넘는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투자가 한계기업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지원은 한계기업 발생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정상 기업의 성장성(매출액, 자본, 고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Tan은 정부 투자가 기업 안정화에 기여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한계기업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chivardi et al.(2017)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동안 은행과 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유럽 금융 위기 동안 은행들이 자금을 어떻게 배분했는지를 분석하고, 신용 할당의 왜곡이 한계기업의 성장과 전체 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을 부채, 자산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정의하였고, 자본이 부족한 은행은 생존 불가능한 기업(한계기업)에 대한 신용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적게 줄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 결과 무분별한 신용은 건강한 기업의 실패율을 증가시키고 한계기업의 발생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연구자들은 은행 대출이 한계기업을 촉진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 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한계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백철우 외(2021)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NICE평가정보(주)의 KISVALUE 데이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개발활동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DB)를 결합하여 기술 혁신 관점에서 창업기업 여부, 연구전담조직 보유,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혜 등의 특성이 한계기업의 정상기업으로의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창업기업 여부 자체는 한계기업 탈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한계기업이 연구전담조직을 보유할 경우 정상기업으로 전환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R&D 집약도가 높을수록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조현창(2021)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KISVALUE(NICE 신용평가정보) 데이터

를 이용하여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한계기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은 독립기업보다 한계기업 상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특히 고기술 산업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했다. 연구자는 한계기업의 지속성은 기업집단 소속 여부나 산업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한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송단비 외(2021)는 2001년부터 2019년까지 KISVALUE가 제공하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자료를 이용해 제조업 부문 한계기업의 결정 요인, 탈출 요인, 만성적 기업에 대한 실증 분석을 수행했다. 연구는 백철우 외(2021)와 조현창(2021)이 정의한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업력이 5년 이상인 기업을 조건으로 추가하여 정의하였다. 분석 결과, 업력이 높고 소규모이며 타인 자본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노동비용 감소와 담보 자산 비중 감소와 같은 기업 구조조정 노력은 한계기업 탈출 가능성을 높였다. 정부 자금 수혜와 금융기관의 비효율적 자금 지원이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관찰되었다. 연구자는 한계기업 관련 정책에서 규모 중립적 접근, 업력 고려, 기업 단위의 구조조정 촉진 및 산업 특성에 따른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Ghoul et al.(2021)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79개국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 한계기업 발생률의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계기업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지만, 고소득 국가에서는 한계기업 발생률이 덜 두드러졌다. 또한 한계기업과 정부의 채권자 보호 정책, 채무 집행 효율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자는 채권자 권리와 채무 집행이 약한 경우 한계기업 청산이 어려워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음을 설명했다.

홍용기(2024)는 기업집단 소속 여부와 한계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분석 결과, 기업집단에 속한 한계기업은 비소속 기업보다 생존율이 높고 정상화율이 낮았으며, 이는 기업집단 소속 여부가 성과보다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Albuquerque와 Iyer(2023)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간동안 63개국, 32개 신흥국, 31개 경제대국에 대한 비금융 상장 기업의 데이터를 통해 한계기업 발생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했다. 분석 결과, 기업의 업력이 짧고, 종사자 수가 적으며, 자본과 유동자산이 적고, 부채 비중이 높고 이자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한계기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나흔 외(2023)은 한국평가데이터(KoData)를 이용해 1,045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해 한계기업 전략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성이 떨어질수록 한계기업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수익성 및 활동성 지표가 상승할수록 전략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타인자본 비중 증가와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경우 한계기업으로의 전략 가능성이 높았으며, 기업의 유동성 역시 한계기업 전략 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발생률을 제어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Zhaxi와 Yasuda(2024)는 Bureau van Dijk의 Orbis DB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2015년부터 2021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계기업 발생의 결정 요인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부가가치 생산이 높은 국가와 파산법이 시행된 국가에서는 한계기업 발생률이 낮아졌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가 높은 국가일수록 한계기업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연구자는 파산법의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것이 한계기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한계기업 진입 가능성에 관한 예측 연구이다. 문종건·황보운(2014)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동안 코스닥 상장 제조업체의 부실기업 예측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였다. 장승제·송민섭(2018)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의 상장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계기업으로의 전환 현상을 분석했으며, 이자보상비율을 사용해 비정상 제조회가와 비정상 판매 및 일반관리비가 유의미한 양(+)의 부호를 나타냈다. 반면 재량적 발생이익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조재혁 외(2021)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KISVALUE 데이터로 딥러닝 기반 부실기업 예측 모형을 연구했으며, RNN-LSTM, RNN-GRU, CNN 모델들이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이 전체적인 예측 성능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이찬호 외(2023)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한국기업데이터(KED)를 이용해 기업 경영 악화 요인이 한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K-NN 알고리즘이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예측에 있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이규태(2023)은 수도권 5성급 호텔 재무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력을 비교했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한계기업의 탈출 또는 퇴출 비용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유진(2020), 주문석(2023), 이병문 외(2023)이 있다. 김유진(2020)은 한계기업 회피 의심 기업이 원가 조정을 통한 이

의 조정을 시도하는지 검토했으며, 이러한 기업들은 매출 감소 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를 더욱 축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문석(2023)은 퇴출 비용이 유지 비용보다 클 경우 기업이 시장에 잔존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병문 외(2023)은 한국기업혁신조사(KIS) 데이터를 이용해 한계기업의 혁신활동 및 성과가 한계기업 탈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혁신 활동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한계기업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한계기업의 수명과 점유율을 연구한 이기영·우석진(2015)은 기술보증을 받은 한계기업의 수명이 비한계기업에 비해 짧았으며, 공적 신용보증을 받은 경우에도 생존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자는 한계기업에 대한 보증을 제한 및 축소하는 정책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Banerjee와 Hofmann(2018)은 명목 이자율이 낮아지면 한계기업 점유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은행 건전성 개선이 한계기업 점유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한계기업의 비용, 대출 및 임금을 다룬 연구로는 Jaskowski(2015), 전기영 외(2022), 안하은·홍준용(2023)이 있다. Jaskowski(2015)은 한계기업의 대출과 담보가격, 부채 상환 간의 관계를 검토했으며, 담보가치와 부채가격이 한계기업 대출에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전기영 외(2022)는 충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 수익성 개선보다는 비용 증가에 유의미하게 기여함을 밝혔다. 안하은·홍준용(2023)은 한계기업과 한계 후보기업 내에서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며, 후보기업이 임원 보수와 성과 간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한계기업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한계기업의 발생률, 점유율, 수명, 퇴출률, 대출, 임금 등 여러 관점에서 한계기업에 미치는 다양한 재무적 요인과 특성을 검토하였다. 연구마다 한계기업 정의 및 분석 방법에 따라 일부 요인의 계수 및 부호에 차이는 있으나, 업력, 종사자 수, 규모, 유동자산, 매출액 등이 작을수록, 정부 지원, 담보 자산, 고용 임금 등이 높을수록 한계기업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또한, 발생률이나 예측 관점에서 한계기업 예측 모형의 적합성을 강조하며, 사전 예측을 통해 한계기업을 제어하는 공통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다. 한계기업 특성에 관한 연구

한계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주로 한계기업의 변화를 고찰하거나 이들 기업의 재무적 특징 변화를 분석하였다.

송신근 외(2014)는 경영이 부실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며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는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정의하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법정관리 및 화의 신청 기업과 워크아웃 기업 중 기업 회생에 성공한 11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기업의 회생 노력과 성과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제품 및 서비스 변화, 재무관리 변화, 재무능력은 총부채비율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구개발 변화는 부채비율 감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사업구조 변화, 연구개발 변화, 채권단 노력은 영업이익률을 증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반면 제품 서비스 변화, 재무관리 변화, 생산환경 변화, 경영자 교체는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연구자는 부실기업의 다양한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 이들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Storz et al.(2017)은 12개 유럽 국가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은행과 한계기업의 관계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계기업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경기 충격을 받은 유로 국가에서는 중소기업(SME)의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유로 지역의 주변 국가들에서는 한계기업의 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도 발견되었다. 연구자는 기업 부문 부채 축소 과정에서 안정적인 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은행의 취약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은행 자본 강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박문수 외(2019)는 중소기업 간 경쟁력 양극화 확대를 분석하였다. 이자보상배율,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회전율 등 경영 지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간 변화를 고찰한 결과, 2005년 대비 2017년 이자보상배율이 3 이상인 중기업의 비중은 증가하였으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부실 소기업은 증가하고 중기업에서는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매출액 증가율은 30% 이상 또는 -10% 미만의 기업이 많아 중소기업 내 양극화가 존재함을 나타냈다. 총자산회전율이 0.5 미만인 저효율 중소기업의 비중은 2005년 9.7%에서 2017년 18.3%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5 이상의 높은 효율성을 가진 중소기업의 비중은 19.1%p 감소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부실기업 문제를 제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김윤경(2020)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하고,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현황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제조업 중소기업에서 한계기업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으며, 2019년 한계기업은 대기업 413개, 중소기업 2,596개로 2017년 대비 각각 23.28%, 36.42% 증가하였다. 또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의 비중이 2018년 이후 30%를 넘어서 2019년에는 6,817개로 32.8%를 차지하였다. 연구자는 제조업의 한계기업 증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지은 외(2021)은 혁신 역량 관점에서 국내 한계기업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을 혁신 역량에 따라 고혁신 기업과 저혁신 기업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의 진입/퇴출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고혁신 한계기업이 저혁신 한계기업보다 한계기업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높았다. 고혁신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 비율이 71.23%로, 저혁신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 비율인 67.95%보다 높았다. 연구자는 혁신 역량이 한계기업에서 탈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시사하였다. 또한 고혁신 역량 기업이 저혁신 역량 기업보다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도 발견되었으며, 이는 혁신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인한 단기적 재무 제약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고혁신 역량 기업은 저혁신 역량 기업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음을 결과로 제시하였다.

Banerjee and Hofmann(2022)은 14개 선진국의 상장된 비금융 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한계기업의 특징을 비한계기업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한계기업은 비한계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레버리지가 크며, 실물 및 무형 자본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자산, 부채, 고용을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한계기업이 되기 전부터 재무 상태가 열악하다는 특징을 기초 통계로 제시하였다.

Honda et al.(2023)은 일본 경제산업연구원(RIETI)의 기업 조사(8,310개)와 TSR DB 자료를 이용하여 COVID-19 팬데믹 동안 일본 정부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동안 매출이 하락한 기업일수록 정부의 대출, 보조금, 지원금을 더 많이 받았으며, 신용 점수가 낮은 한계기업일수록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연구자는 팬데믹 이전에 성과가 좋지 않았던 기업들에게 정부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처럼 한계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한계기업 자체의 재무적 변화를 탐색하거

나 정상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이들 기업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는 한계기업의 증가와 이들의 변화가 영업이익, 매출액, 자본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일부 연구는 한계기업의 특징을 기업의 혁신 역량과 연계해 분석하며, 혁신 역량에 따라 한계기업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위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먼저 한계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기업의 업력, 종사자 수, 자본, 유동자산, 영업이익, 매출, 자본투자 효율, 총자산이익률 등이 낮을수록 한계기업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은행의 채권자 보호 정책, 채무 집행 효율성, 담보 자산의 증가 등은 한계기업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의 역량이 나 성과가 약화되거나, 은행의 신용 정책이 강화될 경우 한계기업의 수가 증가한다는 비교적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한계기업의 증가가 기업(산업) 또는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전반적으로 한계기업의 증가는 정상기업의 비율, 고용률, 생존율 등을 감소시키며, 기업의 마진율, 매출 성장률, 부가가치 등을 낮추는 원인이 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한계기업의 증가는 산업의 고용 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나타났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한계기업의 증대가 물가 상승 및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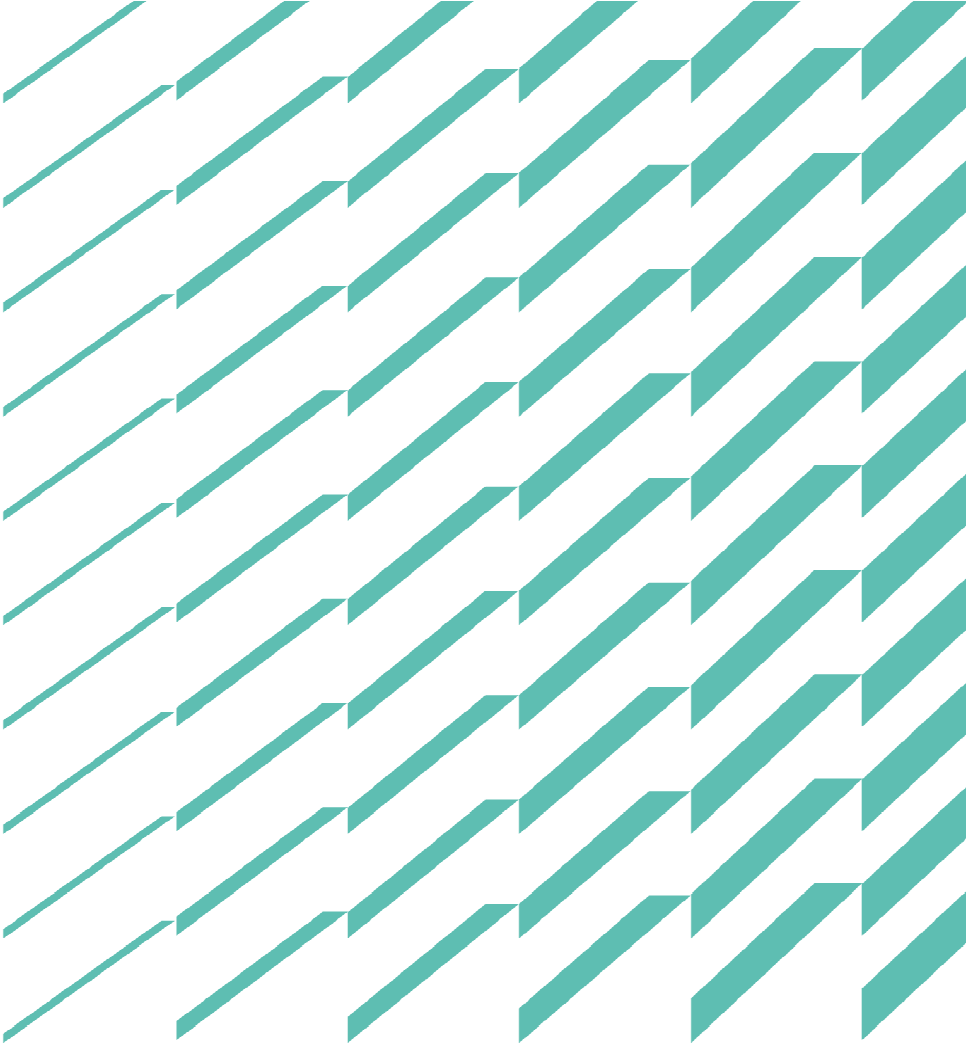
3. 소결

한계기업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인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상태를 3년간 지속되는 기업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한계기업을 정의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한계기업을 식별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심지어 동일한 연구자임에도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한계기업의 정의를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과거에는 한계기업을 정의할 때, 이자보상배율 1미만 혹은 3년 연속의 지속성에 따른 조건으로 일관되게 적용했다면, 현재에 이르러서는 실질적인 적용과 정책적 활용을 위해 식별의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대체로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공시된 정보를 이용하여 일반적 식별 방법에 토빈q, 자본잠식 상태, 감사거절이력 등을 추가 적용하여 식별하고 있다. 그 외에는 기업의 업력을 고려하여 5년, 7년, 10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식별방법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을 정의하기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은 없으며 여전히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런 한계기업에 대한 연구가 오랜기간 지속적으로 다뤄지는 이유는 경제적인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계기업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생산성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전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들에서 한계기업은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부가가치, 고용, 매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비효율성을 높이며 국가 차원의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한계기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도 많이 이뤄졌다. 대체로 한계기업의 발생 확률은 업력, 종사자수, 규모, 유동자산, 매출액 등이 작을수록, 정부 지원, 담보 자산, 고용 임금 등이 높을수록 커진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더불어, 한계기업의 증가는 고용률, 생존률 등을 감소시키고, 기업의 마진율, 매출 성장률, 부가가치 등을 낮추는 원인이 되어 결국 산업의 고용생산성 및 총요소생산성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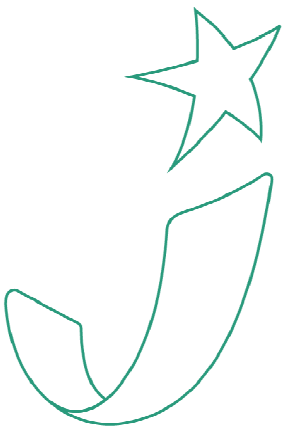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난제로 분류될 수 있는 한계기업의 존재와 증가로 인한 부정적 효과들은 지역에서부터 밀착하여 관리하고 정책수단을 활용한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에도 관련 연구들은 지역 차원에서 이뤄진 적이 없다.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한계기업의 현황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

전북 한계기업의 현황

1. 분석 대상의 설정
2. 한계기업의 현황
3. 중소기업 정책 동향
4. 소결



제3장 전북 한계기업의 현황

1. 분석대상의 설정

본 연구에서는 (주)나이스평가정보의 VALUESearch³⁾에서 제공하는 기업자료를 활용하였고, 그 대상은 외부회계감사법인(외감기업) 중 금융업을 제외한 중소기업⁴⁾에 한한다. 제공된 개별 기업의 재무 정보 중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재무 항목에 1개년도 이상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이자보상배율 등 재무비율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그 나머지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기간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총 7,929개 기업(N=95,148)의 누적된 재무 기반 정보를 활용한다. 이 중 전북의 기업은 총 146개(N=1,752)이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 활용된 기간은 2009년부터이지만 한계기업의 정의에 따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되는 연도는 2011년부터임을 알려둔다.

본 연구에서는 한계기업의 식별을 위해 업력을 고려하였다. 이는 신생기업이 향후의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창업 초기의 자원 부족 또는 영업 미숙 등으로 인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El Ghoul et al., 2020; McGowan et al., 2018).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업력 5년 이상의 기준을 추가하여 적용하였다. 설립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와와의 차이를 업력으로 정의하여 산출하였고 설립일이 제공되지 않은 기업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계기업은 업력이 5년 이상이고,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이 3년 연속인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 대상으로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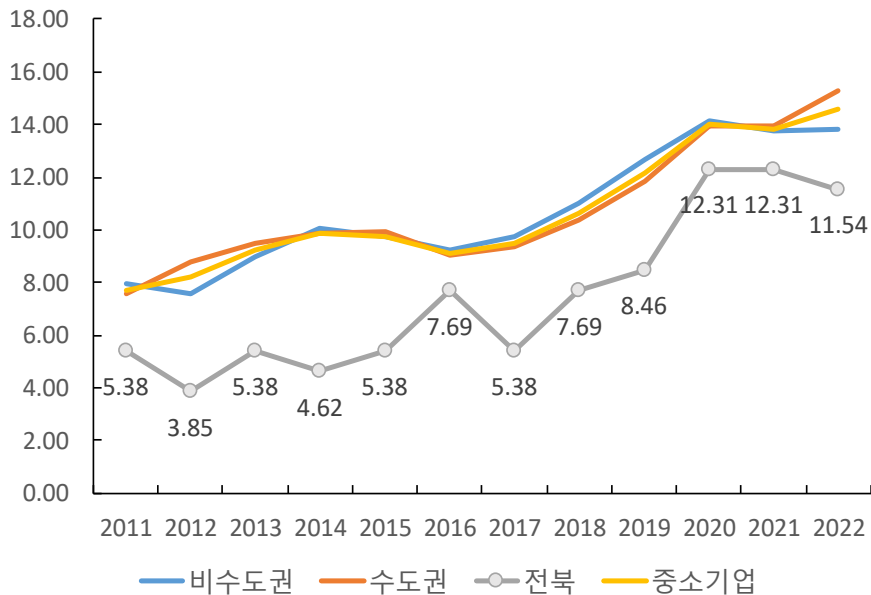
3) <https://valuesearch.co.kr/>

4) 금융업의 경우, 일반기업과의 자본구조가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한계기업의 현황

가. 한계기업의 비중

[그림 3-1]은 한계기업의 비중 추이를 나타낸다. 중소기업 전체 평균과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전북의 한계기업의 비중추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비교해보았다. 전북의 한계기업 비중은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의 비중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전체적인 시계열 추이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전북은 전국과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박스권에서 움직이지만, 비중의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부터 한계기업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북 또한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COVID-19 발생 이후, 첫 회계연도인 2020년은 전국 평균의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났는데, 전북도 동일한 시기에 급격히 상승하며 빠른 속도로 한계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며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1] 지역별 한계기업의 비중 추이(%)

[표 3-1] 지역별 한계기업의 업체 수와 비중

(단위 : 개, %)

연도	비수도권		수도권		전북		전국 중소기업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업체 수	비중
2011	250	7.97	303	7.59	7	5.38	560	7.71
2012	237	7.56	352	8.82	5	3.85	594	8.18
2013	282	8.99	379	9.49	7	5.38	668	9.20
2014	315	10.04	395	9.89	6	4.62	716	9.86
2015	305	9.73	397	9.94	7	5.38	709	9.77
2016	290	9.25	362	9.07	10	7.69	662	9.12
2017	306	9.76	374	9.37	7	5.38	687	9.46
2018	345	11.00	415	10.39	10	7.69	770	10.61
2019	397	12.66	473	11.85	11	8.46	881	12.14
2020	443	14.13	557	13.95	16	12.31	1016	14.00
2021	432	13.78	556	13.92	16	12.31	1004	13.83
2022	433	13.81	611	15.30	15	11.54	1059	14.59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1: 비중은 기업 수로 계산

주2: 비수도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전북을 제외한 지역의 합임

[표 3-1]은 지역별 한계기업의 업체 수와 비중을 보여준다. 전체 시계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국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 수는 2011년 560개에서 2022년 1,05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 또한 7.71%에서 14.59%까지 1.9배가량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살펴보면, 두 지역권의 업체 수는 2011년에 비슷하였으나, 수도권의 한계기업의 수가 꾸준히 상승하며 2022년에는 비수도권(495개)에 비해 수도권(611개)의 절대적 수치가 높아졌다. 한계기업의 비중 또한 수도권이 16.7%로 비수도권 14.3%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매년 146개의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이 2011년에 비해 2022년 들어 2배가량 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준점을 2011년으로 본다면, 전국 대비 전북의 한계기업 비중의 증가세는 더욱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2] 최근 3년(COVID-19 기간)의 한계기업 비중 변화

[그림 3-2]는 최근 COVID-19의 발생 기간 동안 한계기업의 비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최근 3년간의 한계기업 비중의 변화(증가폭)를 분석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한계기업의 증가로 인한 변화가 가장 큰 지역은 세종(7.69%)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광주(7.32%), 강원(4.08%), 경기(3.77%), 서울(3.58%), 울산(3.49%), 전북(3.08%)의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한계기업의 비중 변화폭이 큰 곳은 광역시와 특별시의 비중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원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제주와 경북은 한계기업의 비중이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계기업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KSIC 분류별, 지역별로 구분하였다. 우선, [표 3-2]는 전국의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의 기업체 수와 한계기업을 KSIC 대분류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이다. 대분류 업종별로 보면 한계기업 비중이 숙박 및 음식점업 80.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5.2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 농업, 임업, 및 어업 66.67%, 부동산업 64.02%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은 정상기업의 비중이 한계기업보다 높은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대분류 업종 중에서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 훨씬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대체로 생활에 밀접한 업종들이었다.

[표 3-2] 대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단위 : 개, %)				
KSIC 대분류	정상기업	한계기업	총 업체 수	한계기업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7	14	21	66.67
광업	20	9	29	31.03
제조업	2915	1489	4404	33.8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	5	11	45.4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65	21	86	24.42
건설업	432	107	539	19.85
도매 및 소매업	595	233	828	28.14
운수 및 창고업	128	151	279	54.12
숙박 및 음식점업	14	58	72	80.56
정보통신업	180	103	283	36.40
부동산업	118	210	328	64.0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7	40	147	27.2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7	35	82	42.68
교육 서비스업	5	6	11	54.5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3	4	75.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9	88	117	75.2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9	18	50.00
총 계	4678	2581	7259	35.56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1: 비중은 기업 수로 계산

주2: 한계기업(업력 5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된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하였음

지역별로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그리고 전북을 기준으로 대분류 업종별로 한계기업의 비중을 [표 3-3]에서 살펴보았다. 비수도권, 수도권, 전북의 각 지역의 전체 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각각 34.46%, 32.95%, 39.08%로 나타나 전북, 비수도권, 수도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분류상 비제조업과 제조업으로 나눠서 살펴보면, 비제조업은 비수도권이 40.89%, 수도권이 37.21%, 전북이 23.26%로 나타나 비수도권이 비제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었다. 제조업 중 한계기업의 비중은 비수도권이 34.46%, 수도권이 32.95%, 전북이 39.08%로 나타나 전북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대분류 업종별·지역별 한계기업의 비중

(단위 : 개, %)

KSIC 대분류	비수도권		수도권		전북	
	한계기업 수	비중	한계기업 수	비중	한계기업 수	비중
비제조업	397	40.89	685	37.21	10	23.26
농업, 임업 및 어업	10	76.92	4	50.00	-	-
광업	6	35.29	3	25.00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4	50.00	1	50.00	0	0.00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0	28.57	10	20.83	1	33.33
건설업	51	21.70	54	18.95	2	10.53
도매 및 소매업	63	26.81	169	28.84	1	14.29
운수 및 창고업	75	56.39	76	52.05	-	-
숙박 및 음식점업	25	75.76	33	84.62	-	-
정보통신업	16	51.61	87	34.94	0	0.00
부동산업	60	67.42	147	62.29	3	10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22.22	31	28.70	1	33.3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	45.45	25	41.67	-	-
교육 서비스업	-	-	6	54.55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100.0	1	50.00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2	72.22	34	82.93	2	50.0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	50.00	4	50.00	-	-
제조업	746	34.46	709	32.95	34	39.08
총합계	746	34.46	709	32.95	34	3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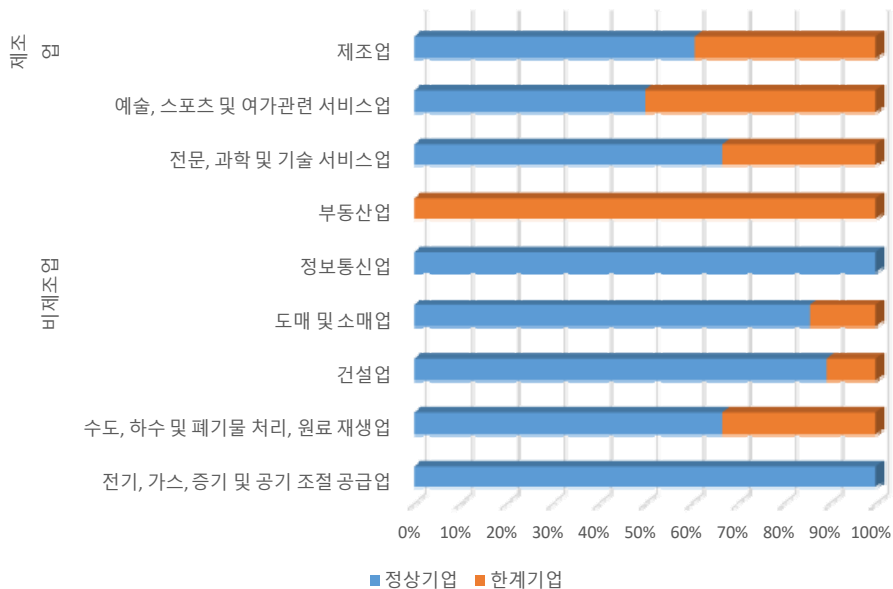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1: 비중은 기업 수로 계산

주2: 비수도권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전북을 제외한 지역의 합임

주3: 한계기업(업력 5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된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한계기업으로 분류하였음

한계기업의 비중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이 가장 한계기업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한계기업의 비중이 50%를 상회하는 업종들이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운수 및 창고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었다. 전북은 타 지역에 비해 업종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업체 수가 적어 상대적 비교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부동산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한계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북의 대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을 차트 형태로 나타낸 것은 [그림 3-3]에서 볼 수 있다.



[그림 3-3] 전북의 대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전북의 업종별 한계기업의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중분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내용은 [표 3-5]에서 볼 수 있으며, 총 130개 업체 중 비제조업의 한계기업은 10개이고 23.26%의 비중을, 제조업의 한계기업은 34개이고 39.08%의 비중을 차지한다. 비제조업 중 부동산업은 모두 한계기업이고,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은 50%, 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은 33.3%, 종합건설업은 16.67%, 도매 및 상품중개업은 14.29%를 기록했다.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정상기업으로 분류되었다. 제조업은 음식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이 모두 한계기업이었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50%가 한계기업이었다. 그 외 나머지 업종들은 정상기업이 한계기업보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3-4] 전북 중분류 업종별 한계기업의 비중

(단위 : 개, %)

전북 중분류	정상기업	한계기업	총 업체 수	한계기업 비중
비제조업	33	10	43	23.2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	0	1	0.00
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	1	3	33.33
종합 건설업	10	2	12	16.67
전문직별 공사업	7	0	7	0.00
도매 및 상품 중개업	6	1	7	14.29
출판업	2	0	2	0.00
방송업	1	0	1	0.00
부동산업	0	3	3	100.00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2	1	3	33.33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2	2	4	50.00
제조업	53	34	87	39.08
식료품 제조업	9	5	14	35.71
음료 제조업	0	1	1	100.0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	1	1	100.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1	2	50.0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3	3	6	5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0	1	0.0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	1	5	20.0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2	2	4	50.00
1차 금속 제조업	2	2	4	50.0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3	10	30.00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	2	5	40.00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1	1	2	50.00
전기장비 제조업(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1	1	2	50.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	2	4	5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4	9	23	39.1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	0	1	0.00
기타 제품 제조업	2	0	2	0.00
총합계	86	44	130	33.85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주1: 비중은 기업 수로 계산

주2: 한계기업(업력 5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으로 분류된 이력이 한번이라도 있으면 한계 기업으로 분류하였음

나. 전북 한계기업의 현황

한계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북 개별 기업들의 연도별 재무비율을 살펴본다. 재무비율은 안정성(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이자보상배율, 현금및현금성자산비율), 수익성(매출액영업이익률, ROA), 성장성(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활용하였다. 또한,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을 분해하여 비교함으로써 특성을 살펴본다.

1) 재무 현황의 지표 정의

한계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은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이자보상배율, 현금 및 현금성자산비율을 통해 살펴본다. 우선, 부채비율⁵⁾은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을 의미하며, 타인의 자본 의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로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이 50% 이하를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채증가율은 전기 대비 부채의 증감을 살펴보는 지표로 타인자본에 의한 자금조달의 추이를 살펴볼 수 있어 부채비율의 보조지표로서 의미가 있다.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뉘서 산출하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 부채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이 비율은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며, 이상적인 비율은 200%로 알려져 있다.

비유동부채비율은 자산 대비 비유동부채의 비율이며, 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여기서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지 않는 장기성 부채들을 의미한다. 정상기업의 경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의 장기성 자금 차입이 일반적이므로 이 비율은 유동비율과 함께 살펴보며 자금

.....
5)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의 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부분의 기업의 자기자본의 규모가 적어서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자산 대비 부채의 비중으로 사용하였다. 참고로, 자기자본 대비 부채의 비중의 적정선은 200%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달과 자산의 효율성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평균차입비용은 차입한 부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하며, 부채 대비 이자비용으로 산출한다. 해당 지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 기업 신용 등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의 변동이 있으므로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에 대한 차입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자보상배율은 한계기업을 구분하는 기업의 대표적인 안전성 지표로 활용되며, 계산식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계산식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지표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고 남은 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며 지표가 1미만일 경우 잠재적 부실기업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이것이 3년 이상 지속될 경우 한계기업으로 시장에서 인식한다. 해당 지표는 현황에서 기업의 구분용도로 활용하도록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비율⁶⁾은 총자산 대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율로 산출되며, 유동자산의 대표적인 당좌자산 중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자산의 비중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많다는 것은 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한 현금화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언제든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지표는 기업가치 판단에 중요한 지표로 쓰인다. 특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 지표는 기업의 안정성 판단에 더욱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다음은 수익성 지표로 매출액영업이익률과 ROA(총자산이익률)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수익의 안정성과 더불어 수익성 측면의 영업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된다. 이 지표는 높을수록 수익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단순 비율은 절대적 판단 수치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산업군 내에서 매출액과 비용 등의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ROA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값의 비율로 산출되며, 기업의 자산 활용이 이익을 창출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를 평가는 지표이다. 즉, 이 지표는 자본의 운용상태를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를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좋으나, 같은 산업

6)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부채에 대한 비중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기 부채에 대한 지급능력을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군 내에서 상호 비교하여 판단하되, 자본이나 부채의 상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ROA의 변동 원인을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 총자산회전율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한다. ROA는 매출액영업이익률과 총자산회전율의 곱으로 분해할 수 있기에 해당 지표를 함께 활용하였을 때 더욱 의미있는 현황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총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자산으로 나뉘서 측정하며 자산의 효율적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성장성 측면에서는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을 사용한다. 고용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의 종사자 수의 증감률을 말하며, 기업의 성장은 고용의 증대 혹은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기업의 성장성 지표로 활용된다. 매출액 및 총자산증가율은 전기 대비 매출액 및 총자산의 증감을 보여주는 성장지표이며, 총자산이 증가했다고 단순히 성장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없기에 매출액증가율과 함께 상호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전북 기업의 재무 현황

본격적으로 전북의 기업 재무 현황 분석을 위해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의 분포를 업종별로 나눠 함께 살펴보고, 시계열 추이를 통해 연도별로 재무비율의 변화를 이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한계기업의 분포는 전북의 정상기업과 한계기업의 분포를 업종별(제조업과 비제조업)로 나눠 분석하였으며 이는 [그림 3-4]에서 볼 수 있다. 전북 기업들의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측면에서 모두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한계기업에 비해 정상기업이 낮게 분포가 되어 있고,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보임으로써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부채의존성이 높고 특히 한계기업이 부채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증가율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유동비율 또한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 반대로 비유동비율은 업종별로 한계기업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차입비용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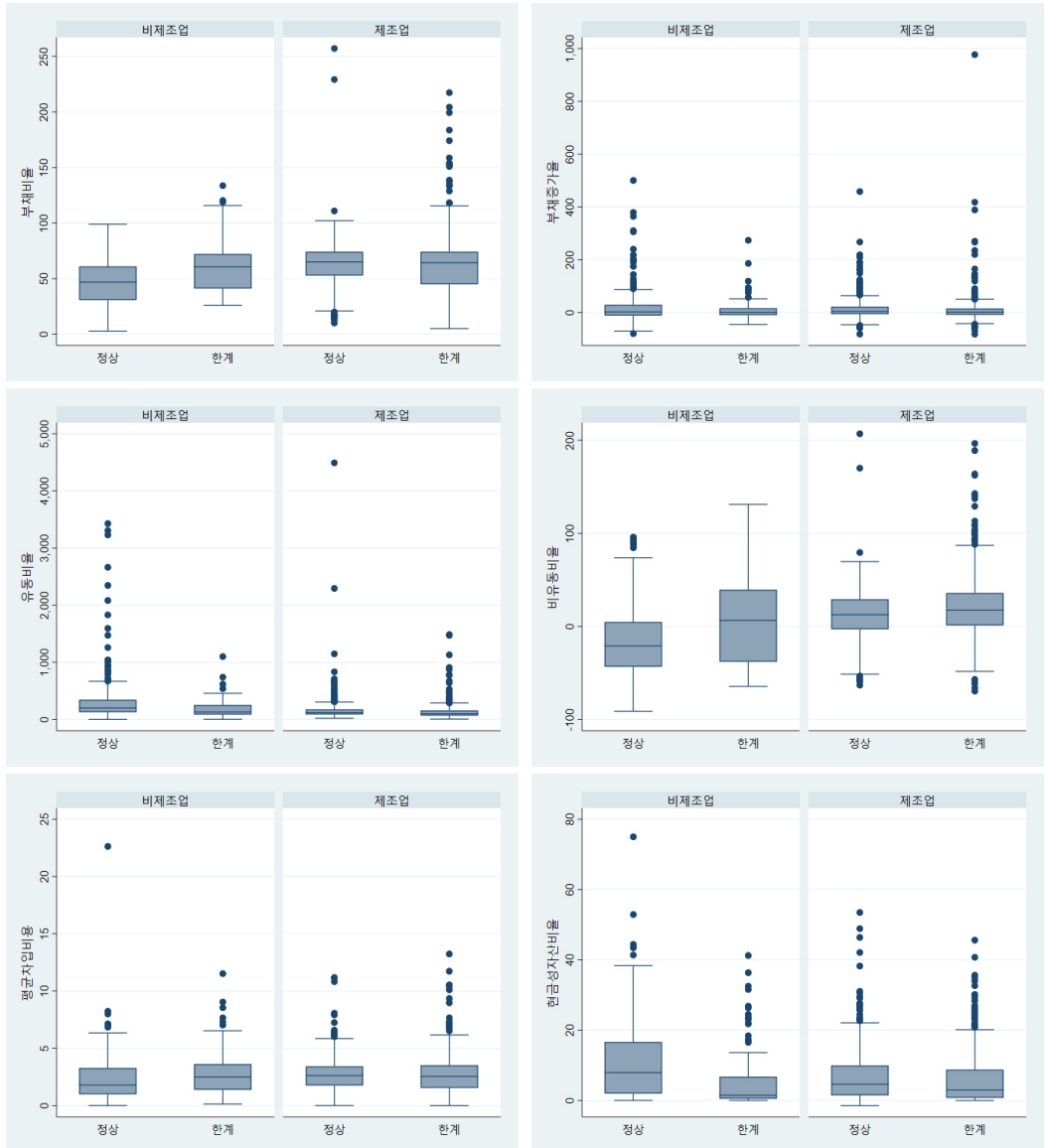
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보인다. 현금성자산비율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낮은 분포를 보인다.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기업은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증가율은 낮으며 유동비율과 현금성자산비율이 낮고 비유동비율과 평균차입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계기업은 높은 부채의존성으로 인해 누적된 이자비용의 부담이 크며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특성을 가진다.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ROA, 매출액영업이익률에서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낮은 모습을 보인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제조업 한계기업의 ROA는 음(-)의 값으로 다수 분포하여 매출액영업이익률과 함께 비교하여 보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추가로 총자산회전율을 살펴보면 한계기업의 지표가 낮게 분포하고 있어 기업의 영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용, 매출, 자산의 증가율이 정상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이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고용증가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한계기업이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감소 구간을 보이는 기업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출액증가율도 마찬가지로의 모습을 보인다. 총자산증가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정상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이 낮은 증가율 분포를 보이지만 증감의 분포가 넓게 두루 분포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추후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면서 다시금 분석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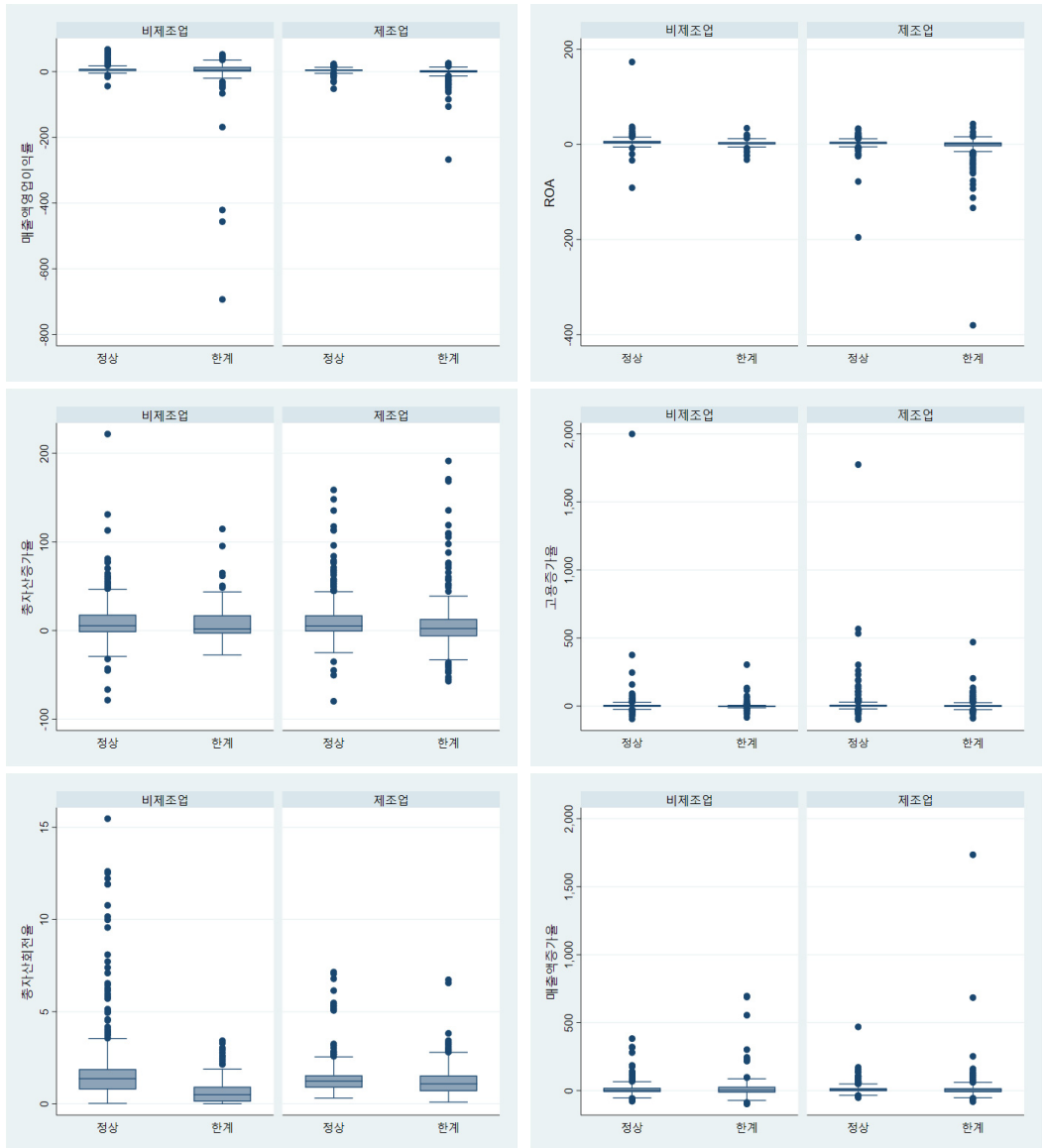
전체적으로 재무비율의 분포를 통해 한계기업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한계기업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높은 부채의존성과 함께 높은 이자비용의 부담, 낮은 유동성, 낮은 영업효율성과 동반한 저수익성, 저성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4] 전북 업종별 한계기업의 분포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4] 전북 업종별 한계기업의 분포(계속)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전북 기업의 재무비율 시계열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른 한계기업의 재무비율 변화를 살펴볼 수 있어 당시 경제 상황에 따른 한계기업의 재무 현황과 이에 따른 대응을 엿볼 수 있으며 정상기업과의 재무적 흐름의 차이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우선,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이 정상기업은 50%대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한계기업은 평균적으로 80%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비유동부채비율이 월등히 높고 유동비율 및 현금성자산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평균차입비용이 정상기업과 비교할 때 평균차입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채에 대한 자본의존성이 높고, 이러한 부채 중 장기성 부채의 비중이 높아 조달비용이 높으며 단기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한계기업은 영업손실로 인해 조달비용을 기업이 스스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태가 매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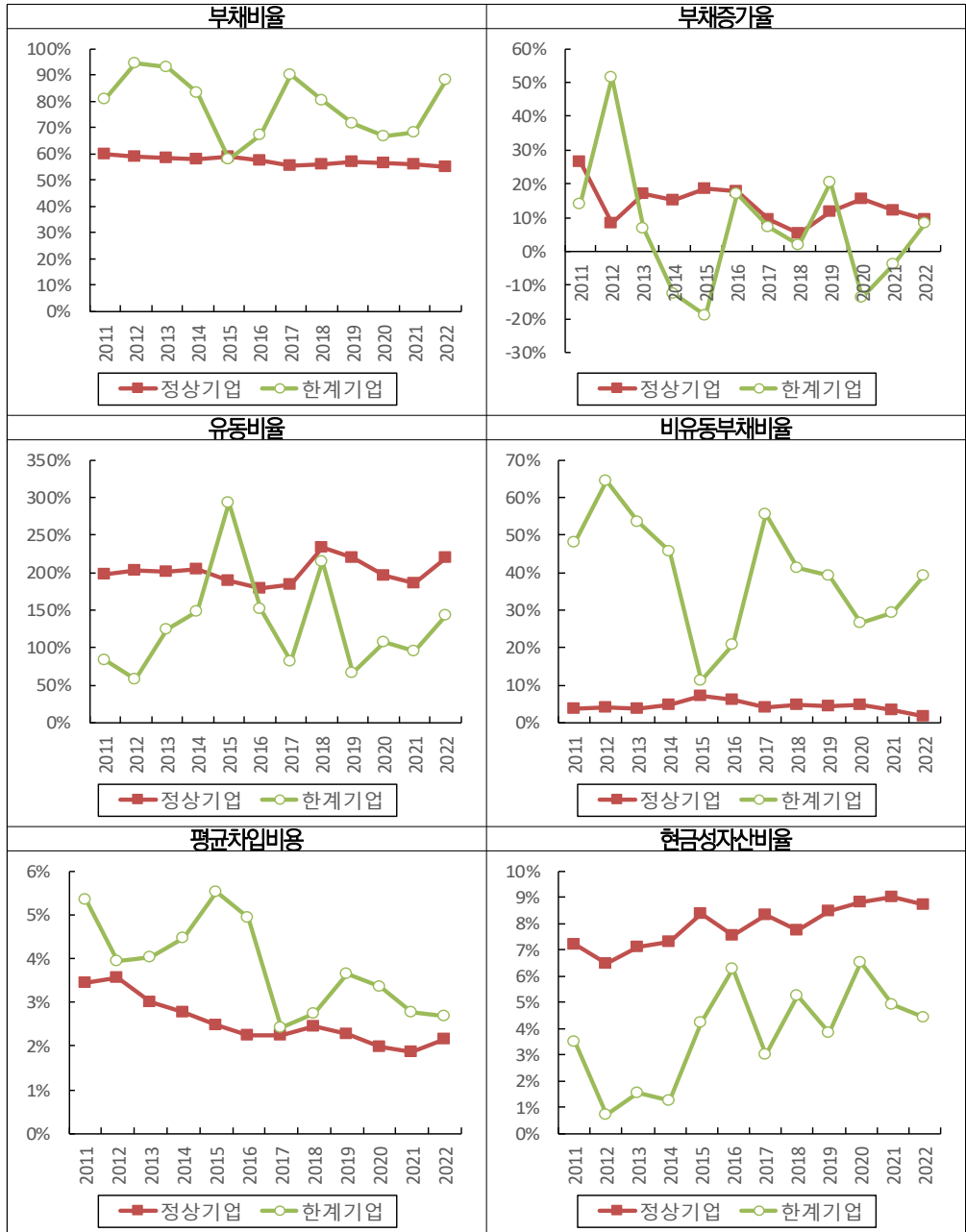
수익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계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모든 기간에서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음(-)의 값을 보였다. ROA는 전 기간에서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음(-)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추이는 한계기업은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점차 커지며 누적되는 현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추가로 총자산회전율을 살펴보면 다른 수익성 지표와 마찬가지로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회전율이 크게 변동하며 점차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자산 대비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며 회전율이 개선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매출액의 증가인지, 혹은 자산의 감소에서 오는 현상인지를 해당 지표만으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성장성 지표를 살펴 보며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보도록 한다.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계기업은 총자산, 고용의 측면에서 정상기업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인다. 자산은 증감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음(-)의 성장을 보인다. 매출액은 2013년에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세가 COVID-19 기간까지 이어지다가 2021년 들어 급격히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은 2014년과 2016년에 일부 고용의 급격한 상승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낮은 고용 혹은

음(-)의 값이 두드러지며 고용의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시기를 살펴보면, 고용과 총자산의 감소가 이전보다 더욱 두드러지나 매출액은 반대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꾸준하고 일정하게 매출액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고용과 자산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총자산회전율을 고려하면, 영업 효율성은 대체로 자산의 감소에 의한 총자산회전율의 개선으로 보이나, 최근 COVID-19 시기에는 급격한 매출 증가와 자산의 감소폭이 줄어든 것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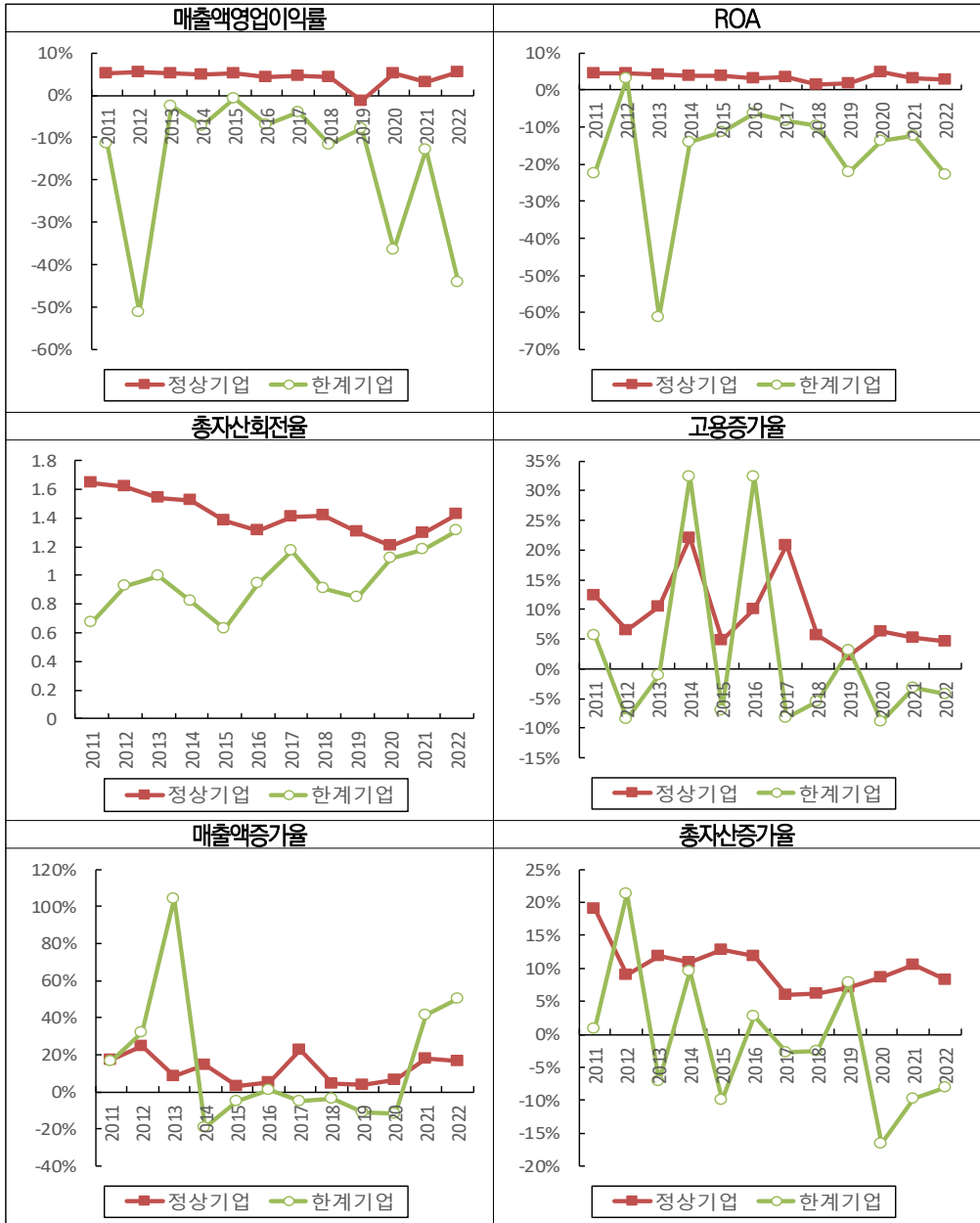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전북의 한계기업은 저수익·고부채의 전형적인 한계기업의 특성을 보이며, 영업손실로 인한 수익성 저하 현상의 지속과 높은 타인자본 의존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자본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출에 비해 영업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원가통제 및 비용관리 능력이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장기성 부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성으로 변하며 유동성 위험 확률이 커지며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 전북 기업의 재무비율 시계열 추이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5] 전북 기업의 재무비율 시계열 추이(계속)



자료: VALUESearch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3-5] 전북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단위 : %, 배)

변수 구분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현금성자산비율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59.8	80.9	26.4	14.1	197.9	82.6	3.6	48.0	3.4	5.3	7.2	3.5
2012	58.8	94.3	8.2	51.7	203.4	58.1	4.0	64.4	3.6	3.9	6.5	0.7
2013	58.5	92.9	17.0	6.7	200.8	124.1	3.7	53.5	3.0	4.0	7.1	1.5
2014	57.8	83.1	15.1	-12.5	203.8	148.9	4.7	45.7	2.8	4.5	7.3	1.2
2015	58.8	57.7	18.5	-18.8	188.8	293.8	7.3	11.4	2.5	5.5	8.4	4.2
2016	57.5	67.0	17.8	17.1	179.1	152.2	6.1	20.6	2.2	4.9	7.6	6.3
2017	55.6	90.3	9.5	7.0	184.7	81.9	4.0	55.4	2.3	2.4	8.3	3.0
2018	56.1	80.1	5.4	1.9	233.7	214.2	4.7	41.3	2.4	2.7	7.7	5.2
2019	56.7	71.5	11.8	20.5	220.3	66.1	4.2	39.3	2.3	3.7	8.5	3.8
2020	56.4	66.9	15.5	-13.7	196.6	106.5	4.7	26.6	2.0	3.3	8.8	6.5
2021	55.9	68.3	12.1	-4.0	186.2	95.6	3.3	29.1	1.9	2.8	9.0	4.9
2022	55.2	88.0	9.5	8.5	220.3	143.7	1.7	39.0	2.2	2.7	8.7	4.4
변수 구분	매출액영업이익률		ROA		총자산회전율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5.0	-11.3	4.5	-22.5	1.6	0.7	12.3	5.7	17.1	16.4	19.0	0.8
2012	5.3	-51.1	4.3	3.0	1.6	0.9	6.4	-8.6	24.6	32.0	9.0	21.3
2013	5.0	-2.4	4.2	-61.2	1.5	1.0	10.4	-1.1	8.5	104.0	11.9	-7.2
2014	5.0	-7.3	3.9	-14.1	1.5	0.8	22.0	32.5	14.6	-19.2	10.9	9.6
2015	5.1	-0.6	3.7	-11.4	1.4	0.6	4.9	-7.0	2.9	-4.9	12.8	-9.9
2016	4.2	-6.9	3.3	-6.3	1.3	0.9	10.2	32.3	5.4	0.8	11.8	2.7
2017	4.5	-3.9	3.4	-8.3	1.4	1.2	20.8	-8.3	22.6	-5.1	6.0	-2.7
2018	4.2	-11.6	1.4	-9.5	1.4	0.9	5.7	-5.5	4.6	-3.4	6.1	-2.6
2019	-1.3	-7.8	1.8	-22.3	1.3	0.8	2.2	3.1	3.9	-10.9	7.0	8.0
2020	5.2	-36.3	4.9	-13.7	1.2	1.1	6.2	-8.9	6.6	-11.9	8.6	-16.6
2021	3.1	-12.9	3.3	-12.4	1.3	1.2	5.3	-3.3	17.7	41.7	10.4	-9.7
2022	5.6	-44.1	2.6	-22.9	1.4	1.3	4.5	-4.2	16.6	50.1	8.2	-8.0

주: 업력이 5년이상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으로 한번이라도 진입한 경우, 한계기업이며, 그 외는 정상기업으로 분류함

1980년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했던 시기로, 중소기업 정책의 기본 방향인 보호정책, 적응정책, 불리시정정책의 시초가 되는 고유업종제도 등이 본격 시작되었다. 1981년 중소기업진흥장기계획을 시작으로 1982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86년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중소기업 보호·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1983년에는 유망중소기업제도, 1985년 중소기업 우선 육성 업종 제도를 마련해 대기업과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중소기업 경쟁 촉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들이 추진되었다. 1993년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고,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1990년대 초반까지의 정책이 중소기업 보호함으로써 육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업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중소기업이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1996년 중소기업청이 설립되었고, 1997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 결과 2000년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270만 개사, 종사자 수 868만 명 규모를 달성하였다(중소기업중앙회, 2016).

2000년대는 혁신형 기업을 육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04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다. 이후, 시장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제도를 시장친화적 선별방식으로 개편하고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통한 민간 투자기능 확대 및 벤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기술창업 활성화와 더불어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기술 중심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대는 융합형 신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하고 대·중·소 기업 간 상생을 강조한 시기로, '11년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지수를 제도화하였고, '14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며 지역별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 기업 간 기술 융합 등을 지원하였다. 2010년대 중반까지의 정책이 중소기업의 양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다면,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등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

화하기 위한 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2020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탄소중립 등 주요 이슈의 변화에 따른 산업대전환, 지역 주도형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년 디지털 전환 및 AI 바우처 제도 도입, '20년 지역스타기업 육성 사업, '21년 녹색전환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이 도입되며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창업과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포함한 제1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며, 현재 제2차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 정책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에서 한계기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995년 한국은행이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한계기업으로 정의한 이후로 볼 수 있다. 이후 한계기업과 관련된 정책은 크게 구조조정(퇴출)과 금융지원(회생)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정책은 외환위기 시기에 시행되었다. 이전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부실기업이나 부실산업을 선정해 존속과 퇴출을 결정하는 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현행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60년대부터 제정되었던 「파산법」, 「회사정리법」과 '00년대 초반 제정된 「화의법」, 「개인채무자회생법」은 2006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다. 2001년에는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⁷⁾을 도입하여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는 기존에 정부에 의한 퇴출기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닌 채권금융기관의 판단에 의한 부실기업 퇴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로는 시장충격으로 인한 시장 기초체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실질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적극 시행되지는 않았다.

한계기업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정책은 자금지원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7) 2021.1.31. 금융감독원은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음. 이 시스템은 기업 부실의 사전 확대 방지와 부실기업의 효과적 처리를 위해 구축됨. 이 시스템의 평가대상요건 중 한계기업을 포함하는데,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금융비용)이 일정수준 미만인 기업'으로 정의함

가.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동향

최근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과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는 2023년 1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24년 6월 관계부처가 합동하여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중소기업→중견기업 중심)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2023.1.)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은 최근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3고현상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의 증가, 경기 위축 진입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가중되는 현상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한 3고현상 대응(22.8조원), 신산업, 창업·벤처기업, 혁신역량 기반을 지원하는 혁신기업 성장지원(52.3조원), 신속금융지원,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 소규모기업을 지원하는 취약기업 재기지원(8.9조원)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세부 대응과제와 추진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6]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2023.1.) 세부 추진 과제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3고 현상에 대응 (22.8조원)	고금리 대응	중소기업	· 저리 고정금리 상품 공급(6.0조원)
		'21.1 이후 설립 중소기업 매출감소 법인소기업, '22년 이후 신설법인 연매출 1억 이하 법인소기업	· 금리감면 상품 공급 (8.5조원) - 금융비용경감 특별대출(0.2조원)
		소상공인	- 법인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0.5조원)
		중신용등급 소기업소상공인	- 보증(6.78조원)
		중소기업	- 중신용자 금리유대 보증부대출(1조원)
	고물가 대응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공정위) 또는 납품대금 연동 시범운영(중기부) 선정기업	· 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지원 (0.9조원)
		중소기업	· 납품단기연동제 확산 지원 (1.0조원)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역 수출입·협력기업, 매출액 대비 재료비 또는 수입금액 비중 20%이상 기업	· 우대조건의 경영안정자금 지원 (5.5조원) - 중소중견 재무안정 프로그램(1조원) - 원자재 위기극복 대출(0.3조원)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중 60%이상, 수출입 실적 10만불 이상 또는 물류비 상승, 고용인원 유지·증가기업	- 3중고 극복 지원대출(0.3조원)
		매출액 감소 또는 신용등급 하락 등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경영애로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0.5조원)
		고용우수기업	- 고용우수기업 우대 프로그램(0.6조원)
		장기 프로젝트 수주, 원자재가격 및 환율변동에 민감한 기업	- 중장기 금리안정 대출(0.5조원)
		유동성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전용 유동성지원 보증(0.5조원)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선정 우수기업(강소기업100+, 스타트업100, 으뜸기업) 및 소부장 분야 R&D 추진기업	- 소부장특례보증(0.27조원)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재해 피해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0.26조원)
	고환율 대응 및 수출 지원	중소기업	· 환헤지 비용 절감, 수입신용장 만기연장 조건 완화
		'22년 수출실적 1천만\$ 이하인 중소기업	· 수출기업 우대조건인 자금지원 (0.9조원)
		중소기업	- 무역협회 이차보전 협약대출(0.1조원) - 수출중소기업보증(0.45조원) - 신시장진출지원자금(0.36조원) * 고정금리 선택제 도입 *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 지원
혁신기업 성장지원 (52.3조원)	신산업 육성	혁신성장공동기준,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 상 신산업 등 미래혁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혁신성장공동기준 또는 미래유망산업 육성 기본계획상 신산업 영위기업
			공통 조건
			공통 조건
			혁신성장공동기준 영위 기업
			10대 초격차분야 및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공통 조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추진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사업전환·재편 승인, 국내복귀 및 스마트화 추진 기업 등		중소기업	-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1조원)	
			정부승인 사업재편기업		
			신산업 진출기업, 국내복귀(리쇼어링) 추진기업	- 턴업기업 지원자금대출(1조원)	
			정부승인 사업재편 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체 사업재편 기업(창업 5년 초과)	-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0.3조원)	
			제조분야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공급기업과 비제조 서비스 분야에서 첨단 ICT를 활용 서비스 스마트화 추진기업	- 스마트제조서비스보증(0.4조원)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 사업전환자금(0.25조원)	
			생산 자동화 추진 중소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0.615조원)	
			미래차 등 혁신분야 전환 중소기업	- (가칭)미래차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스마트 기술 이용, 보유중인 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고용유지창출 사업자	- 스마트·혁신성장 특례보증(0.3조원)	
			ESG 추진 중소기업	ESG 실천 중소기업	- ESG경영 성공지원자금 대출(1.5조원)
				그린기술 사업화, 친환경 제조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 Net-Zero 유망기업지원자금 (0.125조원)
	창업·벤처기업 육성	창업기업	기존·신보의 창업지원센터 선발기업, 혁신성장공동기준영위 기업	· 창업·벤처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공급 (4.7조원) - 혁신창업대출(0.5조원)	
			만39세 이하 청년창업기업	- 청년창업보증(0.5조원)	
업력 7년 미만의			- 창업기반지원자금(1.93조원) * 시설·운전자금 도입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청년전용창업자금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 스타트업 200개 사	- 스케일업 200 프로젝트(1조원)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	- 스케일업보증(0.3조원)
			우수 VC·AC가 투자한 기술관련 유망 스타트업	- 벤처대출(0.1조원)
			AC,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	- 투자연계보증(0.35조원)
			신산업·전략산업 산업제한없는 유니콘기업	· 혁신성장펀드와 모태펀드를 통한 장기 투자자금 공급 (25.0조원) - 혁신성장펀드 조성(15조원) * 혁신산업 대상 5년간 7.5조원 * 성장지원 대상 5년간 7.5조원
			중기부(초격차, 글로벌, 시장과소, 중간화수), 문체부(K-콘텐츠, 스포츠), 환경부(미래환경), 과기부(우주신산업) 등	- 모태자펀드 조성(10조원)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 혁신산업 분야 자금 공급 (4.8조원) - 신성장 경쟁력 강화 지원자금(1조원)
			혁신성·성장가능성 부합기업 * 혁신성장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거나 미래전략이 우수한 업종, 기술력이 우수, 대표자의 신용도가 우량, 신용위험지표 ※에 미해당, 미래 추정 영업 이익까지 고려한 채무부담능력이 우수, 재무제표 비중을 낮추고 최근 금융거래 또는 4대 보험 납입실적 등을 반영한 평가등급이 우수 등	- 성장유망·스케일업 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3.8조원)
	혁신역량 기반 자금공급	성장유망분야		

프로그램	대응과제	자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투자브릿지 보증(400억)
		상거래가 활발한 중소기업 * 상거래편 결재기간 고충, 부가세 등의 실시간 장부를 기반으로 기존의 영수증의 보완자료	- 상거래활동 기반 자금 공급 (0.4조원) - 상거래 신용자수 우대보증(0.3조원)
		중소기업	- 매출채권 팩토링(1,375억원)
		중소·벤처·외감기업	- 매출채권보험
		IP 사업화 성공기업	- 기술금융·IP금융·동산담보대출 활성화(0.8조원)
		보유 지식재산 활용 사업화 성공기업	- 소액IP 특별보증(500억원)
		전문평가기관의 특허기술 가치평가를 받은 우수 IP보유 중소기업	- 지식재산 우대보증(500억원)
		지식재산(IP) 가치 평가 기준 지급	- IP사업화 자금대출(0.1조원) - IP보증(0.6조원)
취약기업 재기지원 (8.9조원)	신속금융지원 효과성 제고	신용공여액 10억원 미만 기업	- 신속금융지원 상시화 및 지원 내실화
	구조조정기업 신규자금 공급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이자보상배율 1.0미만, 부(-)의 자본총계 등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	-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신속금융지원 대상) 또는 C등급(워크아웃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중진공·캠코 자금지원 연계 (0.1조원) - 신속금융지원 또는 워크아웃에 중진공 지원 연계(450억원) - 워크아웃, 화생 등 부실징후기업에 자금 지원(830억원)
	소규모기업 지원	구조조정 기업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활력법 대상기업, 자본시장법상 재무 안정기업 대상기업 등 (사후적 구조조정) 화생, 워크아웃 자율합계에 따른 관리대상 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조성 (4.0조원) - 소규모 취약기업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4.8조원) - 힘내라 중소기업 재기지원(0.5조원)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총여신 30억 미만의 중소기업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폐업 등 실패 경험 기업인	- 폐업 등 실패 경험 기업인 재기 지원
		폐업 등에 따른 부실채권	* 부실채권 상각(2.169조원)
		폐업했던 기업인의 재창업(재창업 후 5년 이내)	* IBK재창업지원대출(0.1조원)
		성실실패자 및 실패법인	* 재기지원보증(350억원)
		재창업기업 또는 재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기업	* 재창업자금(750억원)
		폐업 후 재기 중인 개인	* 브릿지보증(0.35조원)
		코로나 이전 폐업이력 기업	* 재창업 특례보증(0.97조원)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 희망플러스특례보증(0.6조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2023),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특히 취약 기업 재기지원사업은 3년 연속 영업손실 또는 이자보장배율 1 미만이고, 부(-)의 자본총계 등 재무적으로 취약한 한계기업을 대상으로 세부평가를 통해 신용위험등급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지원제도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는 기업(B등급)은 신속금융지원을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규여신 공급 등을 추진하고,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C등급)은 추가적으로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부실징후 가능성이 있으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D등급)은 신속금융지원에 더해 기업회생제도를 제공하여 상거래·보증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표 3-7] 신용위험등급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

신용위험등급		지원제도	
A	정상영업 가능	-	
B	부실징후 가능성	신속금융지원	만기연장, 상환유예, 신규여신 공급 등
C	부실징후&경영정상화 가능성 ↑	워크아웃	+원리금감면, 출자전환
D	부실징후&경영정상화 가능성 ↓	기업회생	+상거래·보증채무 감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2023),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 -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심(2024.6.)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기부,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되었다.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은 기업과 개인의 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집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두 배 이상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공공정보 활용 인프라 조성의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서도 일시적 위기상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전적 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재편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재편 방안에는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의 확대, 「중소기업사업전환법」 상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을 포함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자금 공급, 「기업활력법」 상 성장지향형 사업재편 활성화 등의 세부 사업이 포함된다.

[표 3-8] 기업성장사다리 구축방안(2024) 세부 추진 과제 중 금융지원 사업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규모 증가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초과기간(추가 3년) 이내 졸업 중소기업	· (세제)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및 졸업시 점감 구조 마련
		특례기간(5년) 내 졸업 중소기업 2년 내 졸업 중소기업	· (유예·판로지원)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 및 판로지원 확대 ·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참여 허용
		중소기업 및 상·근로자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건설업 등(일부 중견기업 포함)	· (재정사업) 중소기업 졸업기업 대상 점감구조 및 릴레이 지원체계 도입
(가칭)	(가칭)	유망 중소기업·예비 중견기업 100개	· (가칭)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대응과제	지원대상	추진내용 및 세부사업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 신설	선정	신설 - 오픈형 성장바우처 발급
유망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성장력 제고	유망 중소기업	· (금융) 기업 성장과정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릴레이 지원 강화
		예비·초기 중견기업	- (대출)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 연계
		소부장 및 미래전략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중소기업	- (펀드) 은행권 공동 중견기업 전용 펀드 20% 이상 우선 투자
		중소기업·초기 중견기업	- (보증) 중소기업 스케일업에 5천억원 신규보증 지원
			- (P-CBO) 중소기업 전용 일반 P-CBO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P-CBO로 개편해 6천억 원 공급
		TIPS 특화지원대상(딥테크분야+글로벌 R&D)	· (기술혁신) 민간 선별기능 활용 R&D·AI 확산 등 기술혁신 유도
		기술료 납부 우수 중소·중견 기업 ① 납부 납부액의 70% 이상 납부 또는 ② 발주 종료 후 2-3년 내 납부	- (민간투자연계) 민간투자 연계형 R&D확대
		중소기업	- (기술료 개선) 정부 납부 기술료 하향 조정
	신시장·신사업 진출 지원	중소기업	- (사업화 촉진) 기술사업화 중심 R&D 제도 개편
		중소기업	- 디지털 전환 사업을 One-Shot 방식으로 개편, 스마트 제조 공급기업 육성 추진
		내수·수출초기 기업 * 법률 자문은 초기 중견기업3년까지 적용	· (해외진출) 수출기업의 자금애로 해소 및 해외 판로지원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M&A·기업승계) M&A를 통한 신산업 진출 및 안정적 기업승계 지원
		일시적 위기상태 중소기업 * 기업구조혁신펀드 대상에는 사업전환기업 포함	· (사업재편) 기업의 사전적 구조개선 유도
		중소기업	· (상생협력) 대·중소 협력 생태계 조성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대책

■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와 제67조에 따라 매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게 융자와 이차보전의 형태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융자는 직접 또는 대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융자와 투자를 복합한 투·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2024년 기준 정책자금은 융자 4조 7,332억 원, 이차보전 9,243억원 규모로 구성된다. 자금 용도는 설비구입, 사업장 건축, 사업장 매입 등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운전 자금으로 구분된다.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살펴보면, 시설자금은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기반지원,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7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는 혁신성장지원자금을 지원한다.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수출기업글로벌화 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등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은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는 창업기반지원 자금,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고,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 자금을 융자와 이차보전 형태로 각각 지원한다. 또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Net-Zero 유망 기업 자금, 수출기업 글로벌화 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융자와 이차보전의 형태로 각각 지원한다. 이 밖에 스케일업 금융, 긴급경영안전자금 등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정한 부실징후기업과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3년 연속 이차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인 한계기업을 제외하고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중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기업과 3년 연속 이차보상배율이 1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인 한계기업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표 3-9]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세부 추진 내용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시설 자금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6%p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0.3%p	10년(4)	60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0.2%p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0.3%p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0.3%p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0.2%p	10년(4)	60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 (수출10만불 이상)	△0.3%p	10년(4)	30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	△0.3%p	10년(5)	100	
		구조개선전용 (선제적자율구조개선)		위기징후 중소기업 등	2.5%(고정)	10년(4)	60	
윤전 자금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0.3%p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경영평가 통과기업	기준금리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지 원*	융자	전체 중소기업	+0.5%p	5년(2)	5	
			이차보전	최근 3년내 시설투자 기업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무관	개발기술사 업화	융자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기준금리	5년(2)	5	
			이차보전	정부 R&D '24년 사업비 감액기업으로 협약변경 후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이차보전 최대 5.5%	5년(3)	10	
		제조현장스 마트화*	융자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Net-Zero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등	+0.5%p	5년(2)	5	
			이차보전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1사분기 중 별도 공고 예정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 (수출 10만불 미만)	기준금리 또는 고정금리	5년(2)	5	
		수출기업 글로벌화	융자	수출유망기업	기준금리	5년(2)	10	
			이차보전	수출 10만불 이상	이차보전 최대 3%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0.5%p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1.9%(고정)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금리 (기준금리±@)	대출기간 (거치기간)	대출한도 (억원)
		사업전환	사업전환계획 승인 (5년 이내) 기업	기준금리	6년(3)	5
		구조 개선 전용	일반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기준금리 2.5%(고정)	5년(2)	10
		매출채권팩토링	보유 매출채권 유통화 희망 기업	4% 내외	30~90일	판매기업(10) 구매기업(30)
		동반성장네트워크론	발주기업에 납품하는 수주 중소기업	상반기 중 별도 공고 예정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나. 전북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동향

전북자치도에서도 중앙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 발맞추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등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4년 상반기 티메프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하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안정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시책안내서를 통해 종합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200개이며, 크게 자금지원, 창업지원, 기술지원, 인력 및 고용지원, 수출·판로 지원, 소상공인 지원, 친기업환경 조성 및 인프라구축 등이 있다. 이 중 금융 지원 정책에 관한 96개 사업을 정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3-9]는 관련 정책들을 기술, 설비(운전), 수출, 경영안정 등 4가지 성격별로 세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전북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중 기술은 32건, 설비(운전)은 45건, 수출은 21건, 경영안정은 30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원의 성격이 중복된 부분은 총 25건이며, 대체로 기술과 설비(운전)의 특성이 중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북의 금융 지원 정책의 운영 주체는 중앙정부의 산하 기관, 전북자치도, 도내 기초 지자체 등이며, 대부분의 금융지원 사업의 관리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통합 운영·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 외 전북테크노파크, 전주상공회의소 등에서 협력·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인 시설·운전자금 및 경영안정 지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보증을 통한 정책자금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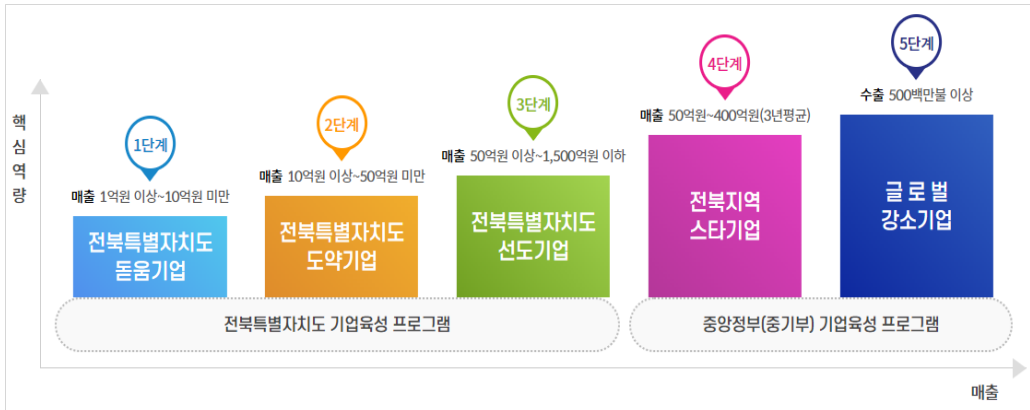
[표 3-10] 전북특별자치도 내 금융지원 정책 현황(2024년 기준)

구분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정책
		기술	설비(운전)	수출	경영안정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 자금지원	-	4	-	-	4
	나. 창업지원	4	5	-	2	5
	다. 기술지원	12	6	-	-	15
	라. 인력 및 고용지원	-	-	-	-	-
	마. 수출·판로지원	3	3	8	-	11
	바. 소상공인 지원	-	-	-	-	-
	사. 친기업환경 조성 및 인프라구축	7	13	2	6	14
도내 기업지원 기관 중소기업 지원시책	아. 자금지원	2	7	2	21	27
	자. 창업지원	-	-	-	-	-
	차. 기술지원	3	3	-	-	6
	카. 인력 및 고용지원	-	-	-	-	-
	타. 수출·판로지원	1	3	9	-	9
	파. 친기업환경 조성 및 인프라구축	-	1	-	1	2
합 계		32	45	21	30	93

자료: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안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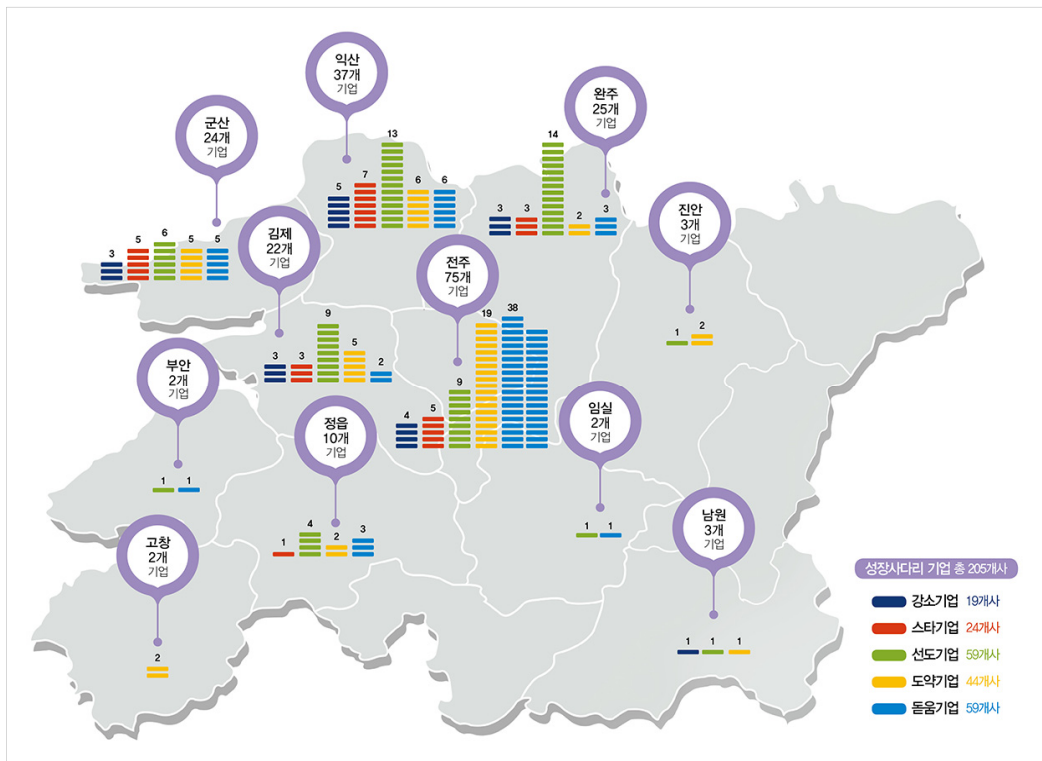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 단계에 기초해 기업을 분류하고 성장 초기의 중소기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장 안정권에 접어든 중소기업은 중앙정부가 육성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육성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추어 전북의 산업구조를 혁신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혁신 성장을 주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에 포함된 기업군은 총 205개사로 이 중 전북자치도가 지원하는 성장 돌봄기업(59개사), 도약기업(44개사), 선도기업(59개사)은 총 162개사이다.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http://www.jbhc.or.kr/web/page.php?pcode=AB>)

[그림 3-7]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도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http://www.jbhc.or.kr/web/page.php?pcode=AB>)

[그림 3-8]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기업군 현황

돈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기술개발, 사업화, 성장촉진 분야의 5개 사업이 있으며, 돈움기업은 도약기업이나 선도기업에 비해 업종 제약이 적은 특징을 갖는다. 도약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기술성장 촉진지원, 사업화 촉진지원, 성장촉진 지원 분야 내 5개 지원 사업이 있으며, 돈움기업 지원사업보다 지원 범위가 크지만 업종 부분에선 더 제한적이다. 선도기업을 대상으로는 기술성장 촉진, 사업화 촉진 지원 분야에 3개 지원 사업이 있으며, 선도기업을 일반트랙과 글로벌트랙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표 3-11] 성장단계별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금융 지원사업

구분	지원대상	분야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돈 움 기 업	· 매출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운영 중인 기업, 연구 소기업 · 전북 내 본사 또는 사업장 소재 기업 · 전북자치도 지역산업 군 산업 영위 기업 · 업종 :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기반산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 (R&D) 지원	· 기술개발(R&D) 역량강화 지원(산학 협력 운영 가능) - (기술융합형) 이(異)업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제품 및 기술개발 - (생산성혁신형) 현(現) 주력제품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품 및 기술개발 - (신기술-제품 창출형) 신기술 적용, 미래 먹거리 창출 등 기술개발	최대 70백만원 (업체 자부담금 20% 〈현금10%+현물10%〉 납부 필수)
		사업화	현장으로 기술해결 지원	· 현장애로 기술해결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발을 통한 공정개선 - 사출(금형), 기성품 등'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등	최대 30백만원 (업체 자부담금 10%~30% 납부 필수)
			사업화 마케팅지원	·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 - (해외)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 지원, 개별 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통/번역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국내)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 홍보비 지원, 홈쇼핑 방송 지원, PPL 광고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등 · 자부담금 및 인증획득 지원	최대 25백만원 (업체 자부담금 10% 납부 필수)

구분	지원대상	분야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 제품 인증/시스템 인증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확보 · 기타 지원 - 녹색기술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 - 녹색기술제품 확인제 지원	
		성장촉진	성장사다리기업 동반성장 지원	· 성장사다리기업 간 납품, 거래에 필요한 투자 비용 지원 - 시제품, 공정개선, 인증 등 바우처 형태 지원	최대 50백만원 (업체 자부담금 10% 납부 필수)
			중장기 성장전략 수립지원	· 기업진단(기술신용평가 및 ESG평가·컨설팅)을 통한 기업 성장전략 수립 지원(신규기업) - 기술신용평가(1회), ESG평가(1회), 연계 컨설팅	컨설팅비용 전액 지원
도 약 기 업	· 매출 : 10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업력 : 3년 이상 · 업종 :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 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 중인 기업, 연구소기업 · 전북자치도 내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	기술성장 촉진지원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사업	· 기업 수요 반영 R&D자원을 통해 제품생산 및 매출 증대로 기업경쟁력 강화	100백만원 이내
		사업화 촉진지원	기업어로 기술해결 지원사업	· 생산성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개선 등 ·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50백만원 이내
			사업화 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사업	· 기술력 확보를 위한 산업재산권, 인증획득 · 신규 시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 제품 세일즈를 위한 홍보지원 등	20백만원 이내
		성장촉진 지원	성장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 기술·경영상 애로사항, 문제점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기술진입 장벽 구축 및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 구축	5백만원 이내
			지속가능 경영확산 지원사업	· 단계별 성장을 위한 로드맵 구축 · 기술신용등급(TCB) 평가지원 · ESG평가 및 개선활동 지원	3백만원 이내 (신규 도약기업)
선 도 기 업	· 업종 : 제조업(C10~C3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 매출 - 일반 : 50억 이상	기술성장 촉진	선도기업 기술개발 역량강화 지원	· 제품생산, 매출 증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	일 반 항 1.5억 원 이내 구매약항 2.0억 원 이내 혁신성장형(2년) : 1.5억/년

구분	지원대상	분야	지원사업명	사업내용	지원규모
	1,500억 이하 - 글로벌 : 최근 3년 평균 매출 100억 이 상, 1,500억 이하 · 규모 : 중소·중견기업 · 업력 - 일반 : 4년 이상 - 글로벌 : 4년 이상 선 도 기업 졸업 후 2년 경과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 구개발부서를 보유/운영 중인 기업 · 전북자치도 내 기업	사업화 촉진지원	선도기업 현장으로 기술해결 지원	· 생산현장의 직무기피 요인 해 소 및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등을 위한 기업애로기술 해결	6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및 규모는 개별 공고문 참조
			제품 및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	· 해외 제품인증, 특허출원·등록 지원 등 · SNS 홍보 및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5천만원 이내 ※지원내용 및 규모는 개별 공고문 참조

자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http://www.jbnc.or.kr/web/page.php?pcode=AB>)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

전북자치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은 2,700억 규모로 예상되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1,000억 원), 벤처기업육성자금(250억 원), 경영안정자금(1,450억 원)으로 구성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투자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으로 기업당 10억 원 이하를 지원하며, 일반 기업은 총 881억 원 규모에서, 지역신산업 분야 기업은 총 119억 원 규모에서 지원한다. 벤처기업육성자금은 벤처기업 창업자금과 벤처기업 성장자금을 분리해 지원하며, 벤처기업 창업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분류해 각 기업 당 각각 4억 원, 2억 원을 지원한다. 반면 벤처기업 성장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통합해 각 기업당 4억 원을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특별 경영안정자금으로 분류한다.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일반기업은 3억 원, 우대기업은 5억 원 내에서 융자를 지원한다. 특별 경영안정자금은 지역 경제 현안을 반영해 지원을 추진하며, 2024년 상반기부터는 티메프 사태에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기업 당 3억 원 한도 내에서 티메프 피해기업과 피해기업 협력기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표 3-12]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융자지원 정책 세부내용

분야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 금	(일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 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희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 시설 투자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증·개축 소요자금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시설의 구매·개체 소요자금	총 881억 원 기업 당 10억원 이하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특별) 지역新산업 육성·지원자금	·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총 119억 원 기업 당 10억원 이하 협약금리 5.00%(도 이차보전 2.18%, 기업 부담 2.82%)
벤처 기업 육성 자금	벤처기업 창업자금	다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시설자금	융자한도 4억 원 5.00% (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분야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적 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 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기업 부담 1.82%)
			운전자금	융자한도 2억 원 5.00% (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
	벤처기업 성장자금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를 충족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 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금융기 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 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 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 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 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으로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이거나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 기관((사)벤처기업협회)	시설·운전 자금	융자한도 4억 원 5.00% (협약금리) (도 이차보전 3.18% 기업 부담 1.82%)
경영 안정 자금	[일반] 경영안정자금	다음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 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 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른」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경영안정 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분야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특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다음의 지원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며, 신용 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 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시외·농어촌버스)	경영안정 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특별] 조선업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면서 아래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 - 2017년~공고일 현재까지 군산조선소 납품 거래실적 보유 기업	경영안정 자금	조선업 3억원
	[특별] 설·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과 동일	경영안정 자금	2억원
	[특별] 재해기업 경영안정자금(상시접수)	· 재해로 인해 매출액의 3% 이상 피해 중소 기업 - (예상)피해 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3% 이상 (예상)피해 입증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재해기업의 협력기업 - 피해기업과의 거래금액이 총 매출액의 3% 이상인 기업 - 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경영안정 자금	3억원
	[특별] 긴급 경영안정자금(대환자금)(상시 접수)	· 신청일 기준 은행권 대출 중 3개월 이내에 분할상환원금 또는 원금 만기일이 도래하는 기업 (2024.12.31.까지 원금(분할원금)상환이 도래 하는 기업) - 티몬·위메프 사태 직·간접 피해기업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 해당기업	경영안정 자금	일반기업 3억원 우대기업 5억원
	[특별] 티메프 피해기업 긴급자금(상시 접수)	· 티몬·위메프 사태 직·간접 피해기업 - 티몬·위메프 사태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 로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 · 피해기업의 협력기업	경영안정 자금	3억원

자료: 전북특별자치도(20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4.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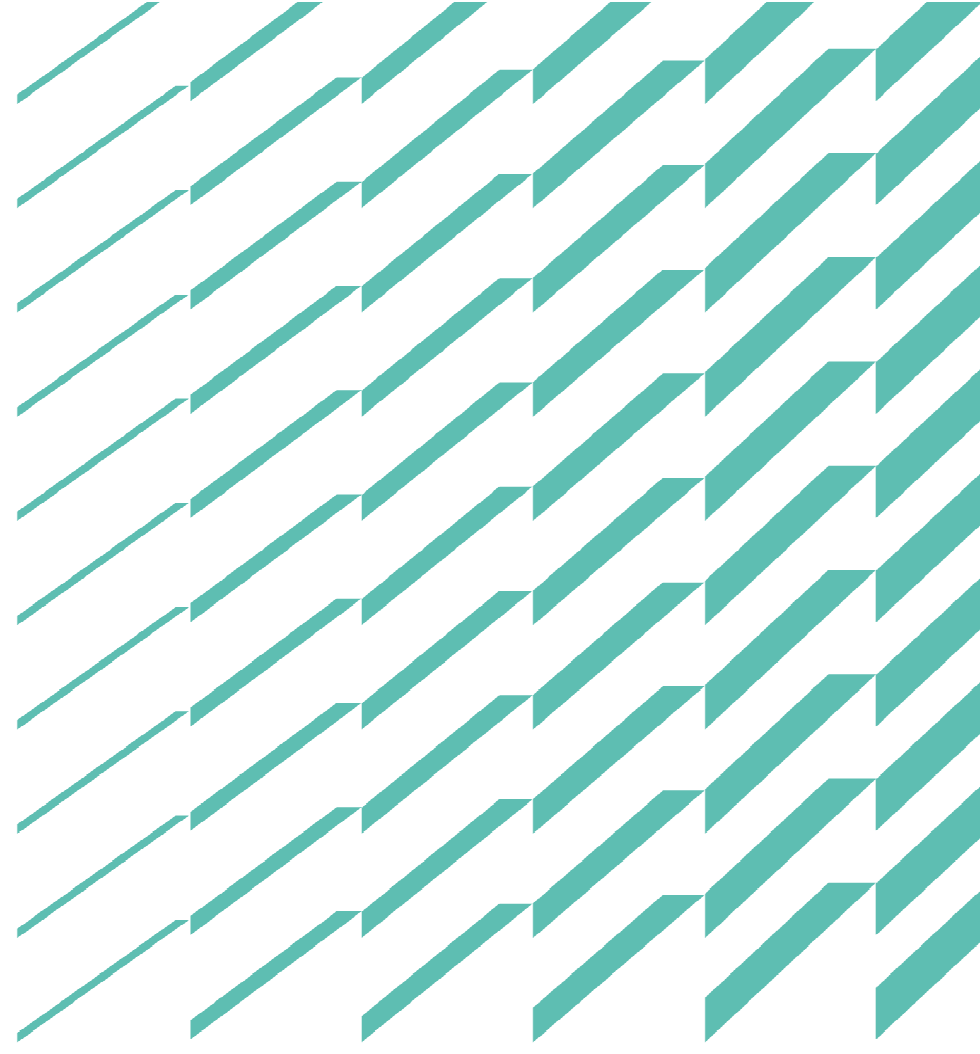
본 장에서는 분석을 위한 한계기업을 정의하고, 한계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은 선행연구의 분류법을 참고하여 창업 초기의 미성숙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5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기업이면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으로 1 미만인 기업으로 식별하였다. 이러한 한계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COVID-19 이후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습을 보였다. 전북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COVID-19 기간을 비교하여 보면, 대체로 한계기업의 비중 변화 폭이 큰 곳은 광역시와 특별시의 비중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비수도권 지역은 강원과 전북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한계기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당되는 대부분의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부동산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이 한계기업에 속하였고,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되었다. 재무비율의 분포와 시계열 추이를 통해 한계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높은 부채의존성과 함께 높은 이자비용의 부담, 낮은 유동성, 낮은 영업효율성과 동반한 저수익성, 저성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업손실로 인한 수익성 저하 현상의 지속과 높은 타인자본 의존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자본의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에 비해 영업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원가통제 및 비용관리 능력이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장기성 부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성으로 변하며 유동성 위험 확률이 커지며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한계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기 위해 관련 정책의 흐름을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의 방향을 보고,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동향을 중앙과 전북으로 나눠 검토하였다.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태동기를 거쳐 보호·육성기, 자율경쟁을 통한 성장기, 혁신역량 강화기, 융합과 상생기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흐름을 거치며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적 논의도 함께 지속되었다. 한계기업과 관련된 정

책은 크게 구조조정과 금융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으며, 관련 법으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 이에 따라, 혁신과 성장의 측면에서 일반 정상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일반적이며, 정상화와 재도약의 측면에서 구조개선전용자금 등이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전북은 오히려 도내 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는 정책적 특성을 가진다. 기업의 정상화나 재도약 측면에서 구조조정이나 회생 등의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르며, 전북의 지원 시책 등은 혁신 성장과 육성에 맞춤으로써 지원 대상 제한의 폭을 줄여 성장과 재도약의 문을 함께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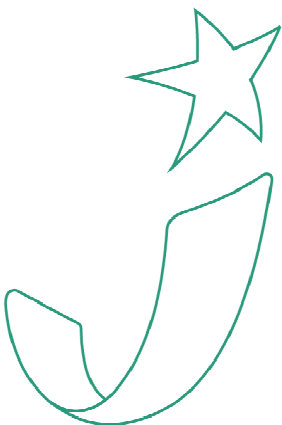
종합해보면, 전북의 한계기업은 제조업의 비중이 크고 높은 부채의존성과 더불어 저수익, 저성장의 특성이 존재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북의 정책은 주로 혁신 성장과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원 대상 제한의 폭이 좁아 효율적 자원 배분과 정책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 한계기업을 고려한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한계기업의 생존패턴과 결정요인 분석

1. 변수의 정의
2.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3. 결정요인 분석
4. 소결



제 4 장 한계기업의 생존패턴과 결정요인 분석

1. 변수의 정의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및 결정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를 사전에 정의하고, 데이터의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전북의 한계기업은 사전에 현황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되,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정보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극단치를 일부 제거하여 활용한다. 극단치 제거는 이자보상배율에 한해서만 시행하였고, 이자보상배율의 분포 상단 5%와 하단 1%를 제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의 개수는 1,261개이고, 업체 수로 환산하면 97개 업체이다.

변수는 [표4-1]과 같이 정의하였고, 각 변수에 대한 의미는 제3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개별 변수들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변수들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표 4-1] 변수의 정의

변수명	산출식
이자보상배율	$\text{영업이익}_t / \text{이자비용}_t$
유동비율	$\text{유동자산}_t / \text{유동부채}_t$
비유동부채비율	$(\text{부채총계}_t - \text{유동자산}_t) / \text{자산총계}_t$
현금성자산비율	$\text{현금 및 현금등가물}_t / \text{자산총계}_t$
매출액영업이익률	$\text{영업이익}_t / \text{매출액}_t$
부채증가율	$(\text{부채총계}_t / \text{부채총계}_{t-1}) - 1$
고용증가율	$(\text{종업원 수}_t / \text{종업원 수}_{t-1}) - 1$
총자산	$\log(\text{자산총계}_t)$
부채비율	$\text{부채총계}_t / \text{자본총계}_t$
ROA	$\text{당기순이익}_t / \text{자산총계}_t$
평균차입비용	$\text{이자비용}_t / \text{부채총계}_t$
$\ln(\text{매출액})$	$\log(\text{매출액})$

[표 4-2] 기초통계량

구분	평균		분위수					
	한계기업	정상기업	한계기업			정상기업		
			25th	50th	75th	25th	50th	75th
이자보상배율	2.15	5.96	-0.51	1.08	2.91	1.61	3.03	6.84
유동비율	1.24	1.47	0.60	0.92	1.40	0.81	1.14	1.65
비유동부채비율	0.30	0.08	0.06	0.25	0.46	-0.11	0.09	0.27
현금성자산비율	0.04	0.07	0.01	0.02	0.06	0.01	0.04	0.09
매출액영업이익률	-0.01	0.05	-0.01	0.02	0.06	0.02	0.04	0.06
부채증가율	0.05	0.12	-0.08	0.00	0.13	-0.08	0.02	0.17
고용증가율	0.04	0.12	-0.06	0.00	0.06	-0.03	0.00	0.10
log(총자산)	24.33	24.34	23.62	24.08	24.77	23.70	24.24	24.90
부채비율	0.70	0.59	0.53	0.69	0.80	0.47	0.60	0.71
ROA	0.00	0.04	-0.02	0.01	0.04	0.01	0.03	0.06
평균차입비용	0.03	0.03	0.02	0.03	0.04	0.02	0.02	0.03
ln(매출액)	23.98	24.56	23.36	23.98	24.56	23.95	24.61	25.16

주1: 업력이 5년이상인면서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한계기업이 한 번이라도 진입한 경우, 한계기업이며, 그 외는 정상기업으로 분류함

주2: 이자보상배율은 분포의 상단 5%, 하단 1%의 극단치를 제거한 것을 사용함

2.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가. 분석 방법론

한계기업의 생존패턴(Life Cycle)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anerjee and Hofmann(2022)의 모형을 이용한다. 이 모형은 한계기업의 진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기업의 성과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해당 모형의 방법론은 국소투영회귀모형(Local Projection Regressions)으로, Jorda(2005)이 개발한 국소투영모형(Local Projection)을 응용한 것이며, 실증모형은 다음과 같다.

$$y_{i,s,t+h} = a_{s,t+h} + \beta_h D(Enterzombie)_{i,s,t} + \gamma_h D(Prezombie)_{i,s,t} + \theta_h X_{i,s,t-5} + \epsilon_{i,s,t+h}$$

여기서, $y_{i,s,t+h}$ 는 $t+h$ 기간의 기업 i 의 성과를 측정한 변수를 의미한다. 성과지표 변

수는 개별기업의 이자보상배율, 유동비율 등이다. h 는 시차(lag)를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는 -3시점부터 +3시점까지 살펴보기로 하여 $h = \{-3, -2, -1, 0, 1, 2, 3\}$ 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s 는 업종을 의미한다.

$D(Enterzombie)_{i,s,t}$ 는 t 기간에서 기업이 한계기업이 되는 경우에 1이 되는 더미 변수이고, 정상기업의 경우에는 0이다. $D(Prezombie)_{i,s,t}$ 는 해당 기업이 t 기간에는 한계기업이 되지는 않지만 t 시점에 한계기업인 경우에 1이 되는 더미변수이다. $X_{i,s,t-5}$ 은 한계기업으로 식별되기 전의 기업규모(총자산)를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서, 총자산에 로그값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끝으로, $\alpha_{s,t+h}$ 는 업종 및 시간의 고정효과(fixed effects)이다.

나. 분석 결과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의 결과는 [그림 4-1]에서 볼 수 있다. 이 그림은 각 변수의 시간에 흐름에 따른 추이를 x축의 0을 기준으로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계기업으로 진입한 이후 재무적 성과지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계기업의 진입 전에 비해 이후의 유의미한 재무적 개선이 나타날 경우, 전복 기업의 한계기업 탈출의 행태를 포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y축은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간의 차이에 대한 계수 값을 의미하는데, 0에 가까워질수록 정상기업과의 차이가 좁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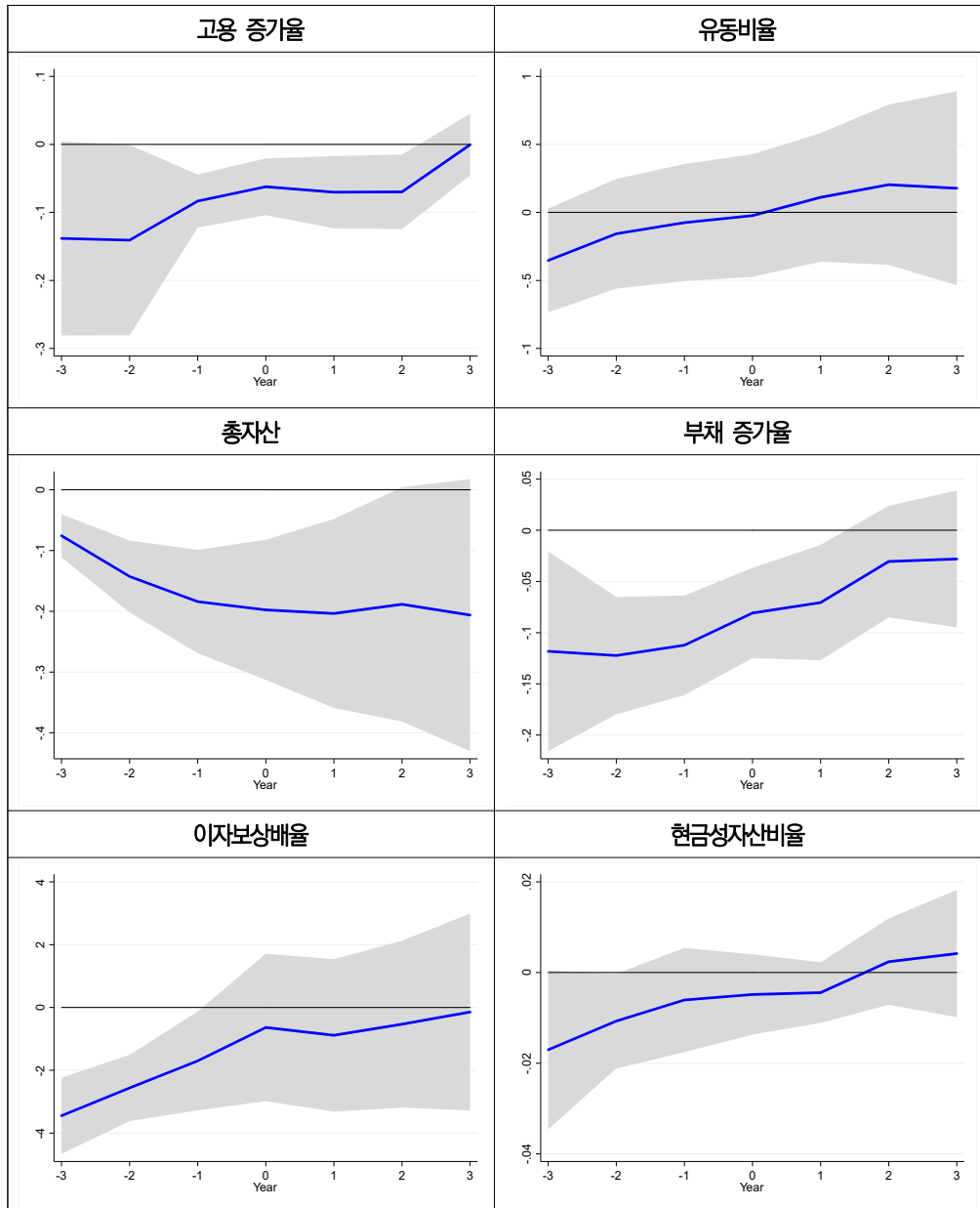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재무적 성과 지표가 대체로 한계기업과 정상기업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계기업으로 진입하는 0시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볼 때, 눈에 띄는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먼저, 안정성 측면의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부채증가율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계기업 전·후 간의 비교에도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부채비율은 정상기업에 비해 높으나, 한계기업 진입 전부터 점진적으로 정상기업에 가까워지고 있고, 유동비율은 한계기업 진입 전부터 점점 증가하여 -1시점부터 유동비율이 정상기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비유동부채비율은 정상기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한계기업 진입 전부터 점진적으로 낮춰 정상기업에 가깝게 근접하는 모습이다. 이자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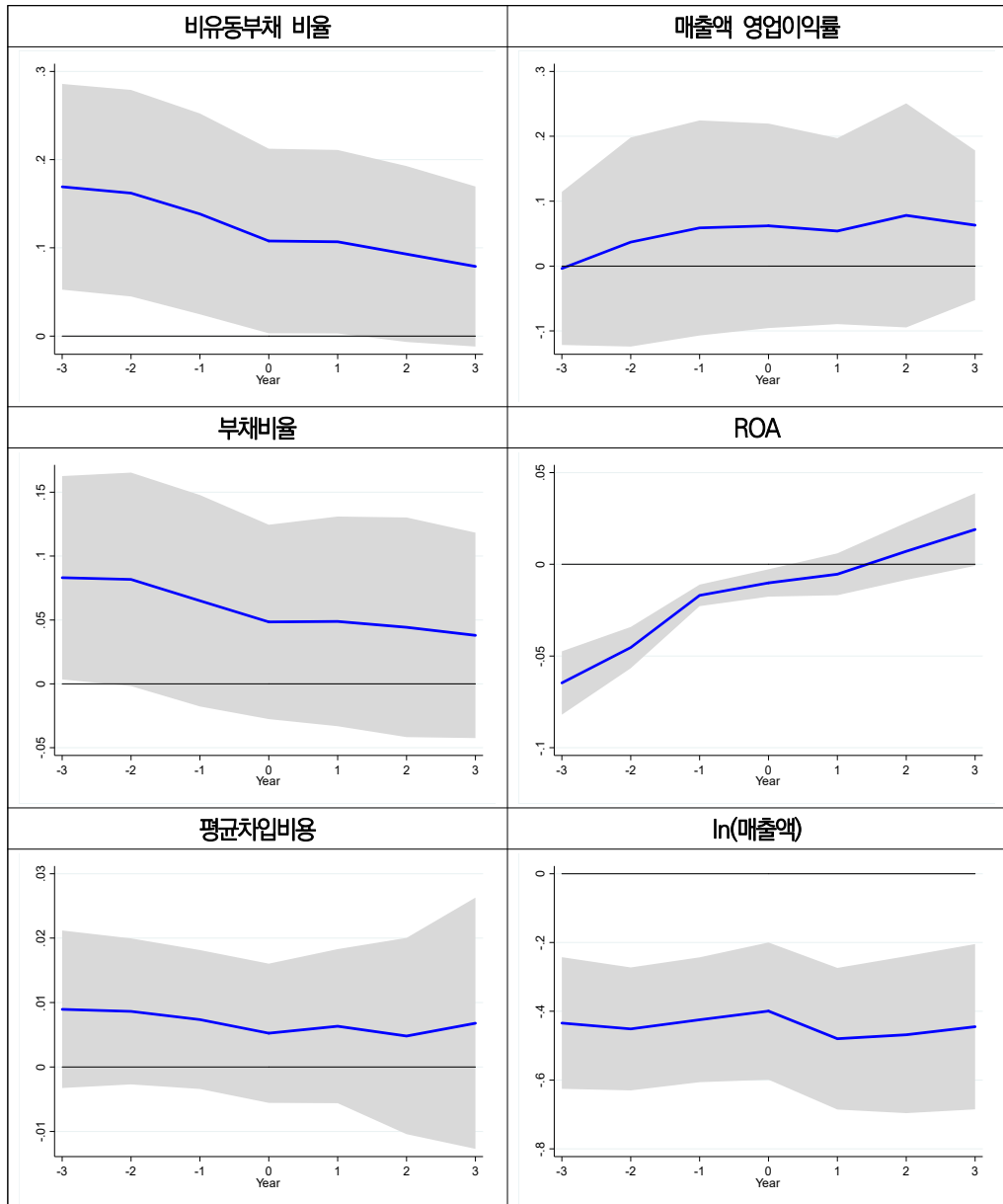
배율은 정상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이 낮았으나, 한계기업 진입 전부터 점진적으로 그 차이를 좁혀가고 있고, 현금성자산비율은 마찬가지로 음(-)의 값을 보이나, 정상기업과의 차이를 다른 지표에 비해 빠른 속도로 좁혀가고 있다. 다만, 평균차입비용은 정상기업에 비해 높으나, 한계기업 전·후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계기업은 정상기업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부채 중에서는 장기성부채인 비유동부채에 대한 선호가 높은 편이며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영업손실 개선과 비용감소, 현금성자산 확보 등을 통한 재무적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익성 및 성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매출액은 정상기업에 비해 낮고 한계기업 진입 전·후가 차이가 없지만, 매출액영업이익률은 정상기업에 비해 높고 한계기업 진입 전이 진입 후보다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ROA는 한계기업 진입 전에는 정상기업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진입 이후에는 정상기업보다 높아진 모습을 보인다. 고용증가율은 정상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이 낮지만, 그 차이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은 정상기업에 비해 한계기업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한계기업 진입 전부터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정상기업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비용감소를 통한 영업이익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의 한계기업은 매출 개선의 어려움을 한계기업으로 진입하기 전부터 비용감소를 통한 영업이익 개선, 타인자본 의존성을 낮추며 현금성자산 확보를 하며 재무적인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결과



주1: 음영처리구간은 95%의 신뢰구간이고, 표준오차는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임

주2: y축은 정상기업과 한계기업 간의 차이에 대한 계수 값으로, 0을 기준으로 양(+)의 값을 가지면 한계기업이 정상기업보다 높은 것을 의미하며 음(-)의 값일 경우엔 그 반대임

주3: x축에서 0을 기준으로 음(-)의 값은 한계기업 진입 전을 의미하고, 양(+)의 값은 그 반대임

[그림 4-2]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 결과(계속)

3. 결정요인 분석

가. 분석 방법론

한계기업의 출현 원인을 찾기 위한 결정요인 분석을 위해 이자보상배율을 다음과 같은 분해식을 생각할 수 있다.

$$\begin{aligned}\text{이자보상배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 &= \frac{\text{영업이익}}{\text{총자산}} \times \frac{1}{\text{총부채/총자산}} \times \frac{1}{\text{이자비용/총부채}} \\ &= ROA \times \frac{1}{\text{레버리지}} \times \frac{1}{\text{평균차입비용}}\end{aligned}$$

이처럼 이자보상배율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의 재무비율로 분해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ROA는 수익성 측면이고, 레버리지 및 평균차입비용은 안정성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한계기업의 결정요인 분석은 ROA, 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으로 결정요인을 분석하며, 추가로 기존의 문헌연구에 따라 매출액도 함께 추가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최현경·안지연(2021)

다음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추정모형으로, 비선형 모형인 프로빗(Probit) 모형과 로짓(Logit) 모형을 사용한다(Tan et al., 2016; Lam et al., 2017). 해당 모형은 다음과 같다.

$$\Pr(Zombie_{i,t} = 1) = \alpha X_{i,t-1} + D_{ind} + D_{year} + \epsilon_{i,t}$$

여기서, $Zombie_{i,t}$ 는 개별 기업 i 에 대한 t 기에 한계기업인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한계기업일 경우 1이고 정상기업이라면 0의 값을 갖는다. $X_{i,t-1}$ 은 결정요인을 보기 위한 설명변수이며, ROA, 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매출액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종속 더미변수와 포함되는 설명변수의 경우, 내생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시차(lag)를 줌으로써 내생성 문제를 해결한다. α 는 파라미터 벡터이고, D_{ind} 와 D_{year} 는 각각 산업(업종) 더미, 연도 더미이다.

나. 분석 결과

본 연구의 결정요인 분석은 전북 전체와 제조업/비제조업으로 나뉘서 실시하였다. 먼저, 전북의 전체 결과는 [표 4-3]에서 볼 수 있다. 먼저,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의 분석에서 추정된 계수 값의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부호의 방향과 유의성에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OA의 값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평균차입비용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한계기업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수익률은 유의미한 음(-)의 값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기업규모(총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기업은 한계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말해준다. 또한 매출액은 유의미한 음(-)의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매출액이 적은 기업이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안정성 측면에서 부채비율은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데, 이것은 기업규모(자산) 대비 부채가 많을수록 이자비용의 부담이 커짐으로써 한계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균차입비용은 다른 변수에 비해 높은 계수 값으로 양(+)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외부로부터 차입한 자금(부채)에 비해 이자비용이 높을수록 한계기업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며, 추가적으로 최현경·안지연(2021)의 연구에서 추정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전북의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구분하여 한계기업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제조업의 결과와 비제조업의 결과에서 프로빗 모형과 로짓 모형의 분석을 통해 추정된 계수 값은 크기에 차이는 존재하지만 부호의 방향과 유의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조업은 ROA와 평균차입비용, 부채비율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반면, 비제조업은 ROA와 매출액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 전북 전체의 결과와 비교할 때 부호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동일하나, 평균차입비용에 대한 영향이 전체에 비해 제조업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조업은 부채 대비 이자비용의 상승이 한계기업 진입에 가장 민감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표 4-3]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설명변수	probit	probit	probit	logit
ROA	-4.581*** (1.041)	-4.635*** (1.057)	-4.372*** (1.083)	-9.424*** (2.636)
부채비율	0.9144** (0.371)	0.8602** (0.383)	0.737* (0.378)	1.250* (0.720)
ln(매출액)		-0.1393** (0.063)	-0.1275* (0.066)	-.2463* (0.132)
평균차입비용			15.98*** (3.469)	30.745*** (7.069)
상수	-2.429*** (0.387)	0.9175 (1.622)	0.0455 (1.689)	0.3369 (3.398)
관측치	1,224	1,224	1,224	1,224
산업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LR chi2	106.93	0.3129	146.34	123.02
Pseudo R2	0.3082	109.31	0.3377	0.3384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비제조업의 경우,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은 ROA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업규모(총자산) 대비 수익률이 낮을수록 한계기업에 진입할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제조업과 비교했을 때, 비제조업은 ROA와 매출액의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한계기업은 모든 설명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ROA가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평균차입비용이 높을수록 한계기업이 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여기서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나눠 분석했을 때는 제조업은 평균차입비용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비제조업은 평균차입비용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ROA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제조업)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설명변수	probit	probit	probit	logit
ROA	-4.627*** (1.120)	-4.632*** (1.132)	-4.239*** (1.193)	-9.274*** (3.103)
부채비율	0.8305* (0.433)	0.826* (0.440)	0.7253* (0.427)	1.169 (0.824)
ln(매출액)		-0.011 (0.084)	-0.014 (0.084)	-0.0355 (0.187)
평균차입비용			21.93164*** (4.302)	43.532*** (8.301)
상수	-2.130*** (0.396)	-1.862 (2.138)	-2.671 (2.185)	-4.734 (4.846)
관측치	936	936	936	936
연도고정효과	NO	NO	NO	NO
LR chi2	YES	YES	YES	YES
Pseudo R2	51.82	52.88	82.63	69.24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표 4-5] 결정요인 분석 결과(전북 비제조업)

구 분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설명변수	probit	probit	probit	logit
ROA	-9.572*** (2.155)	-8.401*** (2.090)	-8.381*** (2.053)	-14.689*** (3.927)
부채비율	1.210* (0.627)	1.008 (0.679)	0.854 (0.748)	1.706 (1.573)
ln(매출액)		-0.447*** (0.125)	-0.444*** (0.135)	-0.814*** (0.277)
평균차입비용			7.345 (6.467)	10.950 (13.863)
상수	-3.019*** (1.017)	7.871** (3.145)	7.255** (3.328)	13.196* (7.140)
관측치	216	216	216	216
산업고정효과	YES	YES	YES	YES
연도고정효과	YES	YES	YES	YES
LR chi2	109.18	114.68	122.06	106.97
Pseudo R2	0.4525	0.4905	0.4949	0.4853

주: 괄호는 표준오차를 의미하며, ***, **, *는 각각 1%, 5%,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함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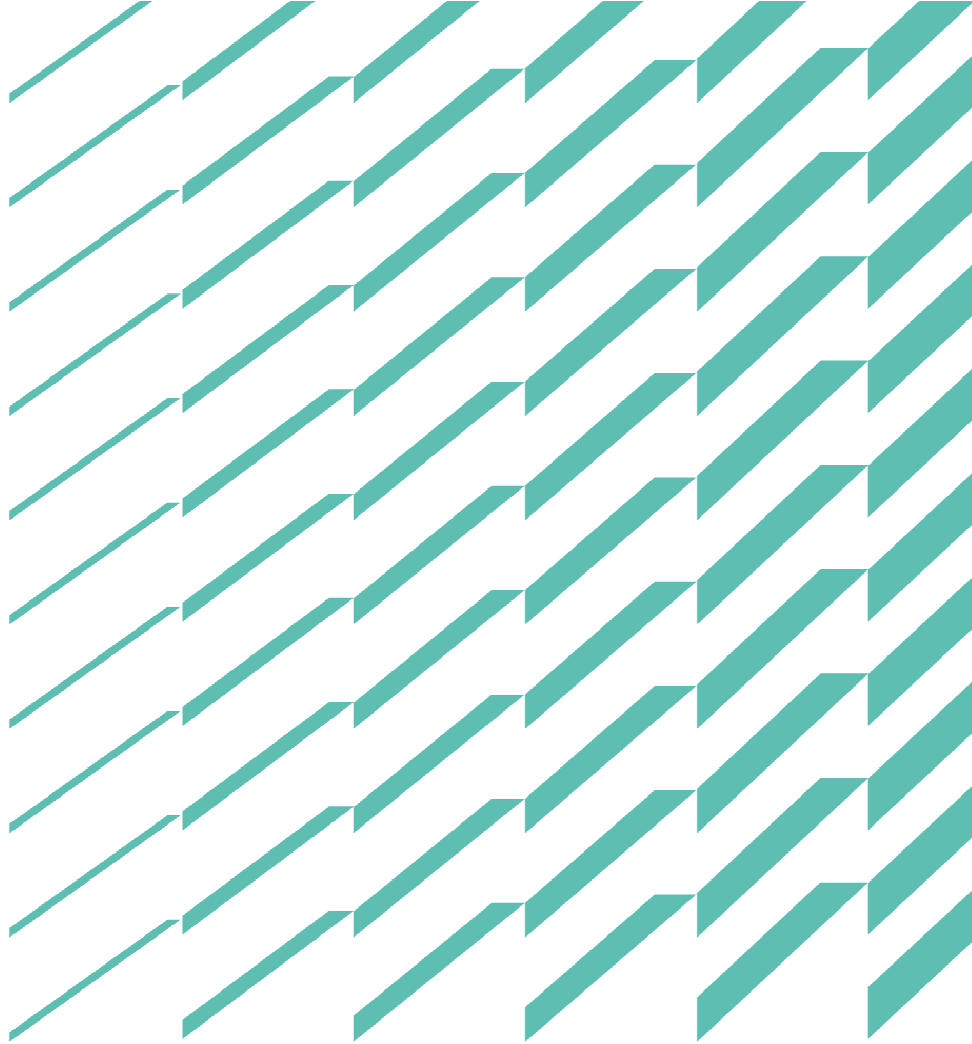
4. 소결

본 장에서는 한계기업의 생존패턴 분석과 한계기업의 결정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생존패턴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계기업은 매출액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과 타인자본의 의존성 축소,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성과지표들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ROA는 한계기업 진입 전에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진입 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용증가율과 총자산은 한계기업 진입 이후에도 정상기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보다 높았으나, 한계기업 진입 이후 점진적으로 그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유동비율은 한계기업 전부터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의 진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관리와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매출 성장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ROA, 부채비율, 매출액, 평균차입비율이 한계기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중 ROA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한계기업에 진입할 확률은 ROA가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평균차입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었을 때에는 제조업의 경우 평균차입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ROA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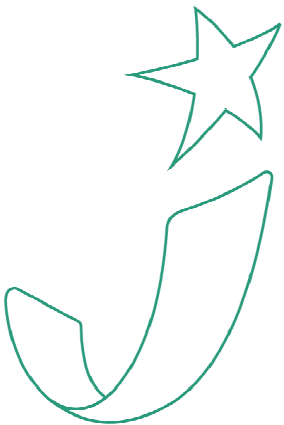
따라서, 전복 한계기업의 발현은 저수익·고부채의 특성에 의해 나타나며 이로 인한 매출 성장의 한계와 비용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지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종합
2. 정책적 제언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연구 종합

본 연구는 전북 내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재무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업종별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생존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정 분석 결과를 제공하였다.

전북의 한계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COVID-19 이후 그 증가속도는 더욱 빨라진 모습을 보였다. 전북은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비해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상승 속도가 빨라지며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업종별로 한계기업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해당되는 대부분의 업종은 생활과 밀접한 업종들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북은 제조업이 비제조업에 비해 한계기업의 비중이 높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부동산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이 한계기업에 속하였고,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이 포함되었다.

업종별 한계기업의 현황을 분포와 시계열 추이를 통해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계기업은 비제조업보다 제조업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높은 부채의존성과 함께 높은 이자비용의 부담, 낮은 유동성, 낮은 영업효율성과 동반한 저수익성, 저성장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영업손실로 인한 수익성 저하 현상의 지속과 높은 타인자본 의존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가가 자본의 감소로 이어지고, 매출에 비해 영업손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원가통제 및 비용관리 능력이 정상기업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장기성 부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기성으로 변하며 유동성 위험 확률이 커지며 기업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존패턴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계기업은 매출액 개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업이익 개선을 위해 비용 절감과 타인자본의 의존성 축소, 현금성 자산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왔다. 성과지표들의 변화 패턴을 살펴보면, ROA는 한계기업 진입 전에

낮은 수치를 보였으나, 진입 후에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용증가율과 총자산은 한계기업 진입 이후에도 정상기업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였다. 부채비율은 한계기업이 정상기업보다 높았으나, 한계기업 진입 이후 점진적으로 그 폭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유동비율은 한계기업 전부터 개선되는 특징을 보였다. 즉, 한계기업은 한계기업의 진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용관리와 자산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나, 매출 성장이나 고용 창출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하였다.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ROA, 부채비율, 매출액, 평균차입비율이 한계기업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며, 이 중 ROA가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다. 한계기업에 진입할 확률은 ROA가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매출액이 낮을수록, 평균차입비율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뉘었을 때에는 제조업의 경우 평균차입비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반면 비제조업의 경우 ROA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기존의 문헌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계기업의 발현은 저수익·고부채·저성장의 특성에 의해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을 통해 기업이익의 한계와 비용의 증가가 재무적 성과지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정책적 제언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유동성 공급과 정부의 금융 지원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자칫 만성 한계기업으로 전환되며 기업의 부실을 야기함으로써 이들의 존재가 장기적으로 자본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여 전체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고, 전형적인 특징으로 저수익, 고부채, 저성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을 넘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할 것이며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한계기업의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과 맞춤형 정책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전북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위해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무원이 직접 전담하여 기업애로를 상시 접수하고 신속 처리하는 원스톱 처리 시스템이다. 전담제를 통해 접수된 내용은 도내 해당 부서와 경제통상진흥원(수출), 전북 테크노파크(R&D) 등의 상시 네트워크를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은 매월 유선 1회나 현장 1회 방문 등으로 기업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전담제와 같은 제도에 더하여 전북 내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와 체질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책 수혜 기업의 지속가능한 평가체계 구축 및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 운영

먼저, 도내 한계기업의 발현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스템 안에서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도내에서 중소기업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실제 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전북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후 수혜기

업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이 미흡하다.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속 가능한 평가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러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정책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실 전염을 통한 연쇄 반응 및 시장 왜곡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더불어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부실기업의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 정책 시행으로 경제 충격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 한계기업의 정상화를 위한 선별적 지원

도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대상 자격 기준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실제 정책 담당자는 한계기업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결국 정상기업이라면 정책적 지원을 열어두되, 한계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낮은 기업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계기업이지만 정상기업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은 기업은 지원의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전환의 가능성을 보고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존패턴 및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한계기업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선별된 기업들에게 기업의 특성에 맞춰 R&D 투자 지원,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대기업 연계 사업 지원 등의 맞춤형 정책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는 정상기업인데 산업의 특성에 따라 한계기업 혹은 만성 한계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지원에 대한 검토가 세세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경제 상황 혹은 산업(업종) 특성에 맞게 한계기업 혹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금융기관 연계 강화 및 기업 금융 접근성 개선

도내 한계기업과 같은 부실 위험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서는 재무 데이터의 관리와 금융 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도내 기업은 상장된 기업의 수가 적고 영세한 기업이 다수 분포되어 있어 재무 데이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도내 금융기관과 정책지원기관 간의 연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의 정책 금융기관과 전북도청, 경제통상진흥원 등의 정책 수행 및 지원 기관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금융 지원의 이력 관리 및 재무 데이터 구성을 동시에 실시하는 식이다. 이것은 향후 부실 위기 대응 시스템의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효율적 정책 지원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추가로 국세청 및 신용평가사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무관리 플랫폼을 구축을 통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 연계의 강화는 필수적이다.

전북의 기업은 본 연구의 분석의 표본에서 본 바와 같이 지역 내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준이다. 따라서 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재무관리 플랫폼과 같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겠으나, 도내 금융기관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 방안으로 도내 금융기관과의 관계형 금융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계기업의 회생 가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기업 환경을 만드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과 금융기관 간의 장기적 관계를 활용하여 일반적인 재무 기반의 정량적 평가 외에 사업 전략, 기업의 비재무적 특성 등의 정성적 지표도 함께 고려되어 기업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참 고 문 헌

REFERENCE

- 김주식, 정태현, (2018), 한계기업과 중소기업 R&D 지원 성과, 기술혁신학회지, 21(4), pp.1474-1492.
- 구정한, (2021), 기업 부실과 구조조정,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30(1), pp.14-17.
- 관계부처 합동, (2024),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대책.
- 금융감독원. (2021).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운용방안.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https://fisis.fss.or.kr/page/main.jsp>.
- 김나흔, 김성용, 유순미, (2023), 우리나라 식품제조업의 한계기업 전략의 영향 요인 분석, 농업생명과학연구, 57(6), pp.141-148.
- 김원규, 최현경, (2017),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아태경상저널, 16(1), pp.126-149.
- 김유진, (2020), 한계기업 회피를 위한 원가조정, 대한경영학회지, 33(10), pp.1861-1876.
- 김운경, (2020),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KERI Brief, 20-08.
- 김운경, (2022), 한계기업 현황과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KERI Brief, 22-10.
- 김천구, 박현준, (2024), 수출기업의 노동생산성 둔화 원인과 시사점, 대한상공회의소 SGI 브리프.
- 나이스 평가정보 VALUESearch. <https://valuesearch.co.kr/>.
- 문종건, 황보윤, (2014), 횡령·배임 및 최대주주변경을 고려한 부실기업예측모형 연구, 벤처창업연구, 9(1), pp.119-132.
- 박문수, 한창용, 박진, 송영진, (2019), 한국의 기업생태계 연구(I),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 박준호, (2023), 좀비기업과 구조조정, 금융연구, 37(2), pp.101-131.
- 배한형, 전현배, 신동한, (2019), 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의 역할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연구, 48(3), pp.69-87.
- 백철우, 정민우, 이현익, 이윤빈, 노민선, (2021), 제조업 한계기업의 정상기업 전환에 대한 실증 분석 : 기업의 R&D 활동과 정부 지원효과를 중심으로, 기술경영경제학회, 29(2), pp.59-85.
- 백훈, (2017),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기술과 경영, vol.411(2017.11), pp.49-51.
- 산업은행. (2022). 한계기업 현황과 시사점.
- 송단비, 조재한, 김한훤, 김인철, (2021), 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1-03.

- 송단비, 조재한. (2021).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한계기업 정상화 과제와 정책시사점,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12호(2021-11).
- 송단비, 조재한, 김한훤, 김인철, (2021), 국내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Issue Paper, 2021-03.
- 송상운, (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BOK 이슈노트, 2020-07호.
- 송신근, 권영국, 원지영, (2014), 부실기업의 회생노력이 회생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8, pp.488-502.
- 안승구, 이장재, 조혜실, 김수지, 나영식, 박종복, 이광훈, 정부일, 정종석, 최종민, (2019),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중소기업에 대한 R&D정책 이슈분 석과 정책과제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안하은, 홍준용, (2023), 임원 보상정책에 대한 외부감시 효과: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32(2), pp.203-240.
- 양대천, 조정호, (2024), 한계기업의 재무보고 품질과 투자비효율성, 아태경상저널, 16(1), pp.126-149.
- 유기환, 허정, (2022),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가 수출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70(4), pp.5-25.
- 이규태, (2023), 머신러닝 기반 한계기업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3개년 간 호텔 재무비율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7(1), pp.123-135.
- 이기영, 우석진, (2015), 공적 신용보증이 한계기업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 재정학연구, 8(4), pp.71-90.
- 이병문, 장필성, 오승환, (2023),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고가 한계기업 탈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국혁신학회지, 18(3), pp.45-68.
- 이상호, 유지연, (2021), 저금리·고차입 한계기업이 정상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와 정책연구, 26(2), pp.125-156.
- 이영재, (2021), 한계기업과 기업의 가격설정, 산업경제연구, 34(3), pp.689-711.
- 이찬호, 최지혜, 김민승, 최정환, 성태웅, (2020), 기업구조조정 혁신을 위한 선제적 한계기업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학회지, 23(4), pp.637-667.
- 이상호. (2021).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포커스, 2021-03호.

- 장승제, 송민섭, (2018), 재무적 곤경, 한계기업으로의 전이, 그리고 이익조정과의 관련성, 회계와 정책연구, 23(4), pp.33-77.
- 장승제·송민섭, (2018), 재무적 곤경, 한계기업으로의 전이, 그리고 이익조정과의 관련성. 회계와 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33-77
- 전국경제인연합회. (2023). 韓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
- 전북은행. (2024). 2023년 실적.
- 전북특별자치도, (2024),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 시책안내서.
- 전북특별자치도. (202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융자 지원계획.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http://www.jblc.or.kr/web/page.php?pcode=AB>
- 전기영, 이종원, 이병희, (2022), 충청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 분석, 경영경제연구, 44(1), pp.145-173.
- 전지은, 정효정, 우청원, 오승환, 강태원, (2021), 혁신역량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한계기업의 진단과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정영우, (2021), 한계기업의 회생개시결정 가능성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 경영경제연구, 43(3), pp.21-49.
- 정한성, 임희석, (2022), 뉴스 데이터를 활용한 한계기업 탐지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9(1), pp.375-378.
- 조재한, 송단비, 김인철. (2020).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산업경제이슈 제86호
- 조재혁, 안은주, 김성수, (2021), 딥러닝 기반 부실기업 예측모형에 관한 연구, 경영연구, 36(1), pp.99-133.
- 조현창, (2021), 한국의 기업집단이 한계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 주문석, (2023), 한계기업의 존속 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경제학연구, 20(2), pp. 217-264.
- 주문석. (2023). 한계기업의 존속 현상에 대한 미시경제학적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법경제학연구, 제20권, 제2호, 217-263.
- 중소기업연구원. (2015). 한계기업 현황 분석과 정책 시사점. KOSBI 중소기업 포커스, 제15-14호
-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2023),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 중소벤처기업부. (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최현경. (2021). 한계기업 현황과 지원기준. 원간 KIET 산업경제.

최현경, 박진, (2016), 산업별 한계기업 현황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보고서.

최현경, 박진, 김영민, 김주영, (2017), 한계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보고서.

최현경, 안지연. (2021). 한계기업 결정요인 분석과 코로나19 이후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시사점-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이슈페이퍼.

한국경제인협회, (2023.05.22.). 상장사 한계기업 비중 추이 분석[보도자료].
https://www.fki.or.kr/kor/news/statement_detail.do.

한국은행 경남본부. (2015). 경남지역 한계기업 현황과 대응방안 - 금융안정 측면에서 분석 -. 경남경제리뷰.

한국은행. (2015).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 (2020), 한계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 이슈노트 2020-7호.

홍용기, (2024), 기업진단 내부거래의 한계기업 지원양상 분석과 정책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allak, I., Harasztosi, P., Schich, S.(2018), Fear the Walking Dead? Incidence and Effects of Zombie Firms in Europe, EuropeanCommission JRC Thechnical Report.

Acharya, V.V., Crosignani, M., Eisert, T., Eufinger, C.(2020), Zombie Credit and (Dis-)Inflation: Evidence from Europe,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Staff Reports.

Albuquerque, B., Iyer, R.(2023), The Rise of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Around the World, IMF eLIBRARY.

Andrews, D., McGowan, M. A., & Millot, V. (2017). Confronting the zombies: Policies for productivity revival. OECD Productivity Working Papers, 2017-21.

Banerjee, R. and Hofmann, B. (2018). The rise of zombie firms: causes and consequences. BIS Quarterly Review

Banerjee, R. and Hofmann, B. (2022). Corporate zombies: anatomy and life cycle. Economic Policy, 2022, 757-803

Banerjee, R., · Hofmann, B. (2022), Corporate zombies:Anatomy and life cycle, BIS Working Papers (282).

- Banerjee, R., Hofmann, B.(2018), The rise of zombie firms: causes and consequences, BIS Quarterly Review, https://www.bis.org/publ/qtrpdf/r_qt1809g.pdf.
- Blažkova, I. and O. Dvouletý. (2020), Zombies: Who are they and how do firms become zombi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1-27
- Caballero, R.J., T. Hoshi, and A.K. Kashyap. (2008), Zombie lending and depressed restructuring in Japan, *American economic review*, 98(5), 1943-1977.
- Chang, Q. et al. (2021). How does government intervention affect the formation of zombie firms?. *Economic Modelling*, 94, 768-779.
- Cheung, J.K. and Imai, M.(2024), Zombie lending, labor hoarding, and local industry growth, *Japan and the World Economy*.
- Ghoul, El., Fu, Z., Guedhami, O.(2021), Zombie firms: Prevalence, determinants, and corporate policies, *Finance Research Letters*, 41(c).
- Honda, T., Hosono, K., Miyakawa, D., Ono, A., Uesugi, L.(2023), Determinants and effects of the use of COVID-19 business support programs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67(10), pp.101-239.
- Ijaskowski, M.(2015), Should zombie lending always be prevented?, *International Review of Economics & Finance*, 40, pp.191-203.
- McGowan, M., D. Andrews and V. Millot (2017),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7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80d80ad-en>.
- Moore, J. F.(1996). *The Death of Competition: Leadership and Strategy in the Age of Business Ecosystems*. New York, NY: Wiley Harper Business.
- Muge Adalet McGowan, Dan Andrews, Valentine Millot. (2018). The walking dead? Zombie firms and productivity performance in OECD countries. *Economic Policy*, Volume 33, Issue 96, 685-736
- Porter, M. E.(1990).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Free Press.
- Schivardi, F., Sette, E., Tabellini, C.(2017), Credit Misallocation During the European Financial Crisis, *The Economic Journal*, 132(641), pp.391-423.
- Shen, G., Chen, B. (2017), Zombie firms and over-capacity in Chinese manufacturing. *China Economic Review*, 44, pp.327-342.

- Storz, M., Koetter, M., Setzer, R., Westphal, A.(2017), Do We Want These Two to Tango? On Zombie Firms and Stressed Banks in Europe, ECB Working Paper No. 2104
- Tan, Y., Huang, Y. and Woo, W.T.(2016), Zombie Firms and the Crowding-Out of Private Investment in China, Asian Economic Papers, 15(3), pp.32-55.
- Zhaxi, Y. and Yasuda, Y.(2024), Determinants of Zombie Firms: The Impact of Corporate Insolvency Efficiency and Cultural Factors, journal of Risk Financial Management, 2024, 17(8), 317.

SUMMARY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llenges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in Jeonbuk State

Hee-Un Ko · Miseon Jeong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Given the ongoing impact of the triple high phenomenon (high interest rates, inflation, and exchange rates) and global economic slowdown following COVID-19, the number of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has been increasing, necessitating an assessment of the financial stability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Jeonbuk State.
- To facilitat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rporate support policies,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and life cycle of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aiming to identify appropriate directions for such policies in Jeonbuk State.

2. Research Scope and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 The spatial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Jeonbuk State.
- While the temporal scope extended from 2009 to 2022, based on the definition of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firms with an interest coverage ratio below 1 for 3 consecutive years), the period analyzed covered from 2011 to 2022.

- In terms of content, this study focused on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Definitions from literature reviews were examined, and based on these findings, SMEs within Jeonbuk State were identified as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serving as subjects for subsequent analysis.
- Literature reviews, policy analysis, data acquisition, and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defining and identifying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were reviewed, research on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was examined, and SME support policies were analyzed.

Data were acquired from an external data provider (Value Search), with a specific focus limited to externally audited firms located within Jeonbuk Stat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acquired data to examine the current conditions, life cycle, and determinants of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Furthermore, SMEs' financial status and trends were comparatively analyzed by region and industry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financial ratios.

3. Conclusion and Policy Suggestion

-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typically exhibit low profitability, high debt, and low growth, which constrain corporate earnings, increase costs, and negatively impact financial performance indicators.
- (Financial Analysis)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ppear more prominently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an non-manufacturing sectors and are characterized by high debt dependence, heavy interest expenses, low liquidity, low operational efficiency, and persistently low profitability and growth.
- (Life Cycle Analysis) Companies in financial distress strive to overcome financial difficulties by enhancing cost management and asset operational efficiency;

however, they still face significant limitations in sales growth and employment generation.

- (Determinant Analysis) Factors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a firm becoming financially distressed include a lower return on assets (ROA), a higher debt ratio, lower sales, and a higher average borrowing ratio, and the significance of these determinants varies by industry.

■ Beyond restructuring, there is a pressing need to fundamentally improve corporate structures.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systematic monitoring and proactive response mechanisms at the provincial level, complemented by selective, tailored policy support, to progressively reduce the proportion of companies experiencing financial distress.

- Establishing a sustainable evaluation framework for firms benefitting from the policy support and operating an insolvency crisis response system

Establishing an evaluation framework will maximize the efficiency of policy resource allocation, ensure corporate sustainability, and effectively prevent market distortions and chain reactions caused by insolvency contagion. Additionally, operating a robust insolvency crisis response system will facilitate the early identific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enabling timely policy interventions that significantly buffer against economic shocks.

- Providing selective support for the normalization of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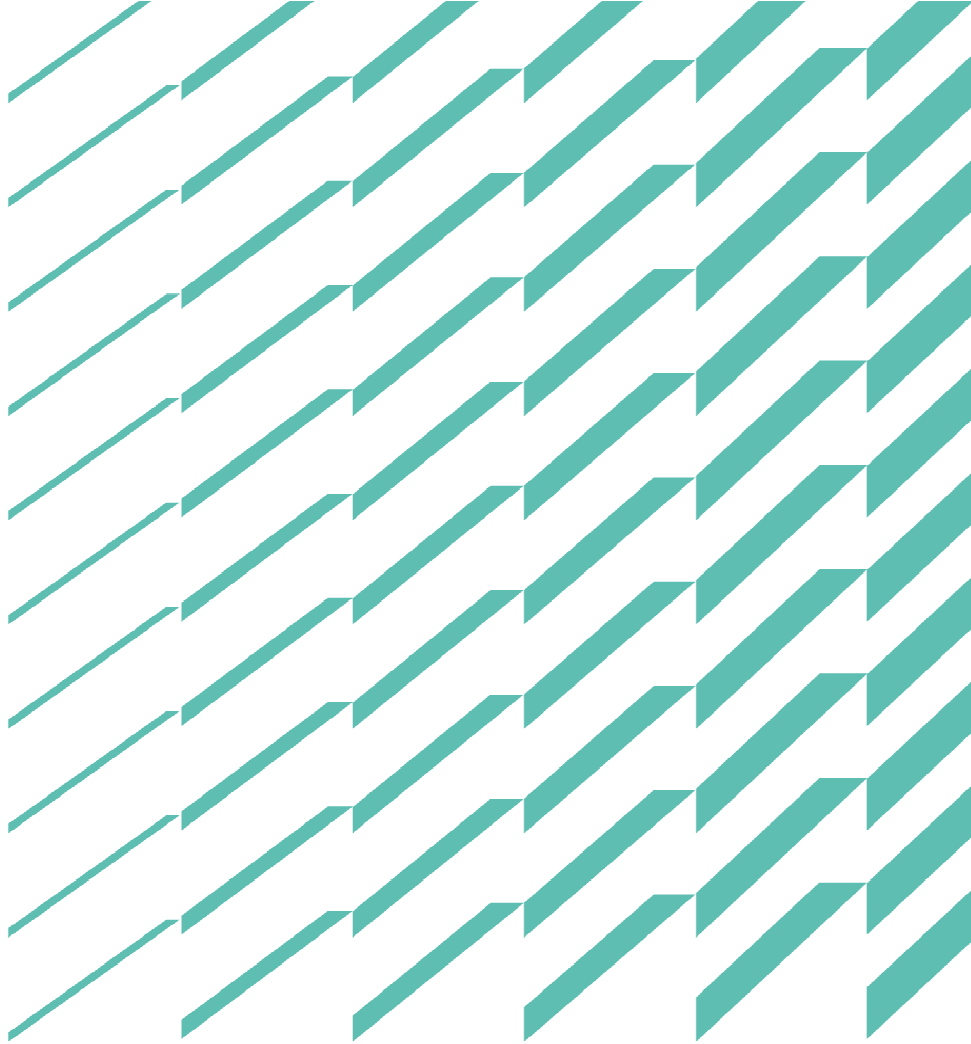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capable of assessing and selectively identifying firms with potential for turnaround must precede other measures. In addition, clear classification criteria distinguishing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from healthy firms should be developed, considering specific economic conditions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Strengthening policy-financial institution linkages and enhancing financial accessibility for firms

To rapidly detect insolvency risks, corporate financial data management must be seamlessly integrated with existing financial systems. Additionally, enhancing relationship banking will support the delivery of tailored financial solutions precisely aligned with corporate profiles and individual business requirem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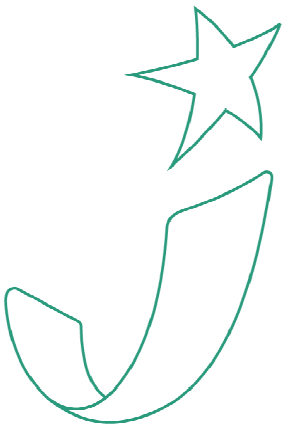
Key Words

Financially Distressed Companies, Jeonbuk State, Life Cycle Dynamics, local linear projection regressions, determinants, corporate support policies



부록

1. 전국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2.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부 록

APPENDIX

1. 전국 한계기업과 정상기업의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전국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단위 : %, 배)

변수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이자보상배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59.9	79.8	21.7	78.0	153.7	139.6	10.3	48.3	3.0	4.0	890.6	-41.9
2012	58.8	78.0	11.5	4.5	168.1	132.9	10.4	46.6	3.0	4.3	34.1	-466.6
2013	57.8	78.1	10.9	3.5	160.6	115.7	9.8	46.0	2.7	3.9	-924.2	-290.7
2014	57.1	78.7	10.7	5.3	158.2	119.0	9.8	47.3	2.4	3.5	1228.1	-305.8
2015	56.4	76.2	9.7	4.5	164.9	118.7	10.2	45.2	2.2	3.3	541.9	-155.0
2016	55.6	75.7	11.5	5.5	160.2	114.4	9.2	44.8	2.0	3.1	815.1	-211.2
2017	54.8	75.9	7.9	9.0	165.1	125.6	8.7	45.5	2.0	3.2	595.2	-174.4
2018	53.8	75.2	8.4	11.9	174.6	197.5	7.9	43.3	2.1	3.1	1542.5	-224.9
2019	53.4	74.6	10.3	12.7	186.2	138.4	7.7	42.4	2.1	3.2	1832.2	-79.8
2020	53.0	75.1	7.3	4.6	179.7	147.5	7.3	41.8	1.8	3.0	4001.8	-180.5
2021	52.9	72.6	14.4	7.8	177.0	129.3	6.0	39.1	1.6	2.9	2438.0	-362.0
2022	51.9	73.6	8.1	6.1	185.2	181.6	4.3	39.1	2.1	3.4	6043.6	-704.5
변수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ROA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5.4	2.8	5.4	-35.2	4.1	-4.9	11.0	10.9	25.9	548.6	15.8	6.6
2012	5.3	2.9	5.3	-11.3	3.8	-5.1	9.5	2.6	17.2	21.0	10.1	1.9
2013	5.7	3.0	5.1	-19.7	3.5	-6.7	11.0	4.5	9.4	26.0	9.4	0.8
2014	5.7	2.9	5.7	-21.1	3.3	-6.8	9.4	3.0	8.7	10.0	8.9	-0.2
2015	6.3	3.4	5.7	-34.8	3.1	-6.1	8.5	-0.5	7.2	1.2	8.2	1.3
2016	6.5	3.8	5.8	-25.6	3.5	-6.0	5.4	12.8	6.7	32.2	8.8	1.1
2017	6.6	4.1	1.6	-20.9	2.9	-6.7	6.2	3.2	14.7	27.8	6.6	1.1
2018	6.5	4.6	-1.1	-130.2	2.6	-8.6	4.6	-0.5	5.4	14.8	6.0	1.9
2019	7.1	4.3	-41.4	-32.6	2.4	-7.8	1.8	-0.8	124.3	55.8	6.4	1.6
2020	8.2	4.9	3.6	-65.3	2.3	-8.1	0.3	-1.8	5.6	54.2	5.2	0.1
2021	8.3	5.1	4.5	-203.7	3.6	-5.8	3.6	-1.2	23.0	122.4	10.3	4.2
2022	7.5	4.5	4.7	-220.4	3.5	-7.2	4.1	-0.7	16.0	68.0	8.3	1.4

전국 제조업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단위 : %, 배)

변수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이자보상배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59.6	76.8	19.9	14.1	140.0	85.3	10.6	36.3	3.1	3.9	1365.1	-39.0
2012	58.3	72.1	8.1	0.0	158.0	102.9	10.7	32.0	3.1	4.3	116.8	-1182.9
2013	57.2	73.6	10.7	3.8	147.2	103.4	10.0	33.9	2.7	3.7	173.9	-656.2
2014	56.5	74.3	10.4	1.6	148.6	102.2	10.0	36.3	2.5	3.7	238.3	-648.5
2015	55.7	71.4	7.0	-0.1	153.5	102.3	10.5	33.0	2.2	3.3	405.3	-232.8
2016	55.0	70.4	10.6	2.3	154.0	114.3	9.3	32.9	2.0	3.4	535.4	-424.8
2017	54.5	71.0	8.0	4.6	155.0	106.3	9.1	33.7	1.9	3.5	-50.4	-334.4
2018	53.5	70.3	6.4	8.1	160.4	125.9	8.2	31.1	2.1	3.1	1549.6	-341.5
2019	53.1	70.0	7.9	15.8	163.4	119.0	7.9	32.6	2.1	3.3	2302.0	-137.2
2020	52.8	70.7	7.5	2.3	165.7	119.9	7.3	32.9	1.8	3.1	5053.1	-315.1
2021	52.8	68.2	13.6	5.5	165.1	121.4	6.0	30.4	1.6	2.9	539.5	-643.2
2022	51.4	72.2	6.7	8.9	170.7	117.7	4.1	33.2	2.2	3.6	6903.3	-946.8
변수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ROA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4.9	3.3	5.3	-5.8	4.1	-6.4	10.0	6.4	18.9	16.4	15.6	5.9
2012	5.0	3.3	5.0	-8.3	3.8	-6.2	8.0	-2.2	9.2	7.8	9.0	-1.1
2013	5.5	3.6	4.8	-8.8	3.7	-8.2	10.4	1.2	7.1	3.4	9.5	-2.5
2014	5.3	3.0	4.8	-9.4	3.3	-8.0	8.3	7.4	5.5	4.7	9.1	-2.4
2015	5.9	3.6	4.7	-8.2	3.1	-7.9	7.4	-3.7	4.0	-1.4	7.3	-2.5
2016	6.2	4.3	4.7	-10.9	3.4	-8.5	4.1	18.6	4.9	18.8	8.6	-2.4
2017	6.3	4.6	-0.2	-13.1	2.4	-10.0	4.3	0.2	15.6	1.2	6.1	-3.5
2018	6.1	5.2	3.6	-226.7	2.3	-9.5	5.0	-2.5	4.8	8.4	5.7	1.2
2019	6.7	4.6	3.6	-11.8	2.2	-10.0	1.5	-1.2	3.3	47.3	5.9	-1.4
2020	8.0	5.2	3.5	-14.6	2.0	-8.4	-0.5	-4.4	0.7	-6.4	5.1	-2.6
2021	7.7	5.5	3.8	-19.3	3.3	-7.2	2.0	-4.3	14.0	10.0	9.8	3.6
2022	7.1	4.9	4.6	-25.7	3.5	-9.6	2.0	-1.5	15.9	13.6	7.8	1.3

전국 비제조업 연도별 재무비율 추이

(단위 : %, 배)

변수	부채비율		부채증가율		유동비율		비유동부채비율		평균차입비용		이자보상배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60.5	81.7	24.9	117.6	176.6	173.3	9.9	55.8	2.9	4.1	89.9	-43.7
2012	59.6	81.8	17.3	7.4	185.3	152.3	9.9	56.0	2.9	4.4	-105.8	-3.9
2013	58.7	81.5	11.3	3.4	183.2	124.8	9.5	55.0	2.6	4.0	-2774.4	-17.0
2014	58.1	82.5	11.3	8.4	174.2	133.2	9.5	56.5	2.4	3.4	2885.0	-18.1
2015	57.5	80.3	14.2	8.3	183.9	132.1	9.7	55.3	2.2	3.4	769.5	-90.6
2016	56.6	80.5	12.9	8.3	170.6	114.4	9.0	55.8	2.0	2.9	1274.2	-15.2
2017	55.3	80.6	7.9	13.2	181.4	144.1	8.1	56.7	2.0	2.9	1649.2	-21.0
2018	54.4	80.8	11.6	16.3	197.5	279.5	7.5	57.3	2.0	3.2	1531.2	-91.3
2019	54.0	80.0	14.1	9.1	223.1	161.0	7.3	53.7	2.0	3.2	1073.8	-13.0
2020	53.3	80.4	7.0	7.5	202.1	181.4	7.2	52.8	1.8	2.9	2309.6	-15.3
2021	53.1	78.0	15.7	10.6	196.3	138.8	5.9	49.6	1.6	2.9	5504.5	-24.1
2022	52.8	75.0	10.6	3.1	209.1	250.0	4.8	45.4	1.9	3.2	4621.9	-445.4
변수	현금및현금성자산 비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ROA		고용증가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구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정상	한계
2011	6.3	2.5	5.6	-53.4	4.2	-4.0	12.7	13.8	37.8	879.0	16.0	7.0
2012	5.8	2.6	5.9	-13.2	3.8	-4.4	12.1	5.7	30.7	29.5	11.8	3.8
2013	6.1	2.5	5.6	-27.8	3.3	-5.6	12.0	6.9	13.3	42.9	9.1	3.3
2014	6.2	2.8	7.2	-31.0	3.2	-5.7	11.2	-0.7	14.1	14.4	8.6	1.5
2015	7.0	3.3	7.3	-56.8	3.2	-4.7	10.3	2.1	12.5	3.3	9.8	4.5
2016	7.0	3.3	7.4	-39.1	3.7	-3.7	7.6	7.5	9.7	44.4	9.2	4.3
2017	7.0	3.6	4.5	-28.3	3.7	-3.5	9.4	6.0	13.3	53.3	7.3	5.5
2018	7.0	3.8	-8.6	-19.6	3.0	-7.5	3.8	1.8	6.3	22.1	6.5	2.6
2019	7.7	4.0	-114.0	-56.7	2.7	-5.3	2.2	-0.3	319.5	65.6	7.1	5.1
2020	8.7	4.6	3.7	-127.5	2.6	-7.8	1.5	1.4	13.3	128.7	5.3	3.5
2021	9.1	4.7	5.7	-425.3	4.1	-4.1	6.2	2.7	37.4	257.4	11.2	5.0
2022	8.0	4.2	4.9	-428.5	3.6	-4.6	7.6	0.2	16.1	126.2	9.1	1.5

2.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가	1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 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지원		○			○	도/경진원
가	2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류기기 등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지역신산업 육성·지원자금 지원		○			○	도/경진원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가	3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이고 도내소재 공장 등록된 중소기업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 · 시외 · 농어촌버스) 지식기반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기반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 퓨터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 작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	도/경진원
가	4	가. 벤처기업 창업자금(1,2를 모두 만족)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창업한 날로부터 7 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 - 기타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2. 공장 또는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기업. 단,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영위 기업은 제조업 전업률 및 공장등 등록 보유 여부 적용 제외 - 기존 등록된 공장을 일부 임차사용 하는 경우 : 시·군청에 공장등록 필수 나. 벤처기업 성장자금(1, 2중 하나 만족)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			○	도/경진원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1. 벤처기업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1년 이상 경과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최종대출일 기준)으로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벤처기업 창업자금 대출을 완료하고 사업추진 완료보고서를 도에 제출한 기업 2.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가 성장자금 융자신청일 현재 유효한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발급기관 : 벤처기업 확인기관(사)벤처기업협회							
나	3	○ 전북특별자치도에 창업기반을 둔 (예비)창업자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인 기업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대학에 재학생 또는 휴학생(재학증명서/휴학증명원 증명 필수) · 예비창업자의 경우 1차 사업화지원금 지급전까지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소재지는 전북특별자치도여야 함(사업자등록이 완료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공고일 기준 전북도 내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불임 [참고자료2]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창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참조 ○ (산학연 연계) 연구개발 대학·전문기관 컨소시엄	전북 탄소중립 연계 기술창업 지원	○				○	도/경진원
나	5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투자회사 등 기업투자 및 육성 전문기업 투자실적, 사업화지원 실적, 투자를 통한 회수실적 등 참여인력 전문성이 검증된 투자관련 계량 증빙이 가능한 투자기관 참여기관으로써 사업수행 상주인력 보유 및 밀도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한 기관 *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집식 기업 제외	데이터 기반 서비스·기술기업 창업지원	◆	◆		◇	○	도/TP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나	6	TIPS프로그램 신청가능 기업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TIPS) 활성화 지원	○				○	도
나	7	도내외 기후테크 7년 이내 창업자	기후테크 스타트업 경진대회	◆	◆		◇	○	도
나	15	예비, 초기, 도약기 창업기업	창업중심대학 사업화 지원		○			○	도
다	1	국내외 중소기업 중 도내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립 또는 기보유	기업부설연구소 활성화 지원	●	●			○	도/TP
다	2	전북 소재 중소기업, 당해연도 신기술, 신제품, 조달우수 등 인증을 취득한 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		○			○	도/TP
다	3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도내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사업 지원	○				○	도/전주벤처기 업육성촉진지 구발전협의회
다	4	도내 50인 이하 제조 기반 소기업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			○	도/경진원
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술융합을 통한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기관, 대표자, 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자본잠식 상태에 있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직전년도 부채비율이 500%이상인 경우 제외 (창업 3년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함.)	중소기업 기술융합 활성화 지원	○	○			○	도
다	8	도내 특장차(기자재) 기업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구축	●	●			○	도/JIAT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다	9	전북 내 직전년도 매출규모 100억원 미만 중소·벤처기업	R&D 기술 사업화 지원		○			○	도/TP
다	10	전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다음을 모두 충족 ① 도내 창업(기술)보육센터* 입주기업이거나, 도내에 공장**, 본사, 사업 장, 기업부설연구소 중 1개 이상 소재한 기업 (5가지 요건중 1가지 이 상 충족시 가능)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 국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가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가운영하는 창업?기술보육센터에 입주한 중소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 단, 투자유치형 중 레드바이오 분야는 사업기간내 도내 사업장 확보로 유예하여 신청 가능②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보유하거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 립 예정인 기업 ※ 설립 예정기업 중 본 사업 평가를 통한 지원대상으 로 선정이 됐을 경우,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또는 연구전담부서 인증서 를 협약 체결 시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 시 협약 대상에서 제외 * 최근 2년(2021년~2023년) 연속,유동비율 50%이하 또는 부채비율 500%(CB, BW는 부채에서 제외) 이상인 경우 제외	혁신성장 R&D+지원	○				○	도/TP
다	12	도내에 본사 또는 연구·생산시설을 갖춘 기업 중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 정된탄소 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며 탄소기업 심의위원회1)를 통해 지정된 기업 중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충족기업 1) 직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상 기업 2)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운영 3) 탄소제품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탄소산업 활성화 T2B지원	●	●			○	도/TP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4) 탄소 관련 중앙 R&D과제 수행(주관 및 참여)기업 (최근 3개년)							
다	13	- 전북 내 6대 탄소사업화 기업 - 6대 탄소소재를 응용한 제품 또는 기술 * 6대 탄소소재 : 탄소섬유, 인조흑연, 활성탄소, CNT, 그래핀, 카본블랙 - 우수조달지정을 위한 우수조달 가능 5년 이내 특허보유 기업, NEP(신제품인증)/NET(신기술 인증)준비기업, ISO 품질체계 구축준비기업*, 성능 인증준비 기업, 우수조달 품목 또는 규격 추가 추진기업** * 우수조달지정을 위한 ISO 품질체계 구축비용(컨설팅 및 획득비용 포함) ** 품목 또는 규격 추가는 우수조달 획득 후 제품 확대를 위한 성능시험 비용 지원 - 기 우수조달지정후 후속 우수조달추진 준비기업	탄소기업 우수조달등록 맞춤형 지원	○				○	도/탄소수소 융합산업연구 조합
다	14	○ 전주, 익산, 김제에 소재하는 뿌리산업 및 농기계산업 관련 중소·중견 기업 - 뿌리 및 농기계 관련 생산공정 개선, 제품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기업 - 뿌리 및 농기계 관련 친환경, 지능화, 디지털화, 스마트화, 뿌리 신산업 등 첨단화 관련 제조공정 또는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을 요하는 기업 - 전주, 익산, 김제에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전주, 익산, 김제에 공장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 기업)	농기계·부품 기술고도화 지원	○				○	도/생기연
다	15	도내 조선기자재 및 관련 중소/중견기업	조선기자재 친환경·스마트 기술지원 사업	●	●			○	도/전북새만 금산융합원
다	1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중소기업 중 전북도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한 자동차/특장차(부품) 및 뿌리산업 관련기업 등	제조기반기술 R&D 혁신 지원	○				○	도/JIAT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다	17	최근 2년 이내 전북테크노파크를 통해 기술이전을 받았거나 예정인 전북 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	○				○	도/TP
다	19	도내 벤처기업 중 혁신제품 지정 관련 지원이 필요한 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벤처 혁신제품 지정 지원	●	●			○	도/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사업추진위원회
마	3	도내 소재 중소기업	우수상품 마케팅 다각화 지원		○				도/경진원
마	4	도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있는 중소기업중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 기업 본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온라인 시장진출 및 판로개척과 매출향상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	중소기업 온라인 쇼핑몰 구축지원		○			○	도/전주상의
마	6	운영 실적이 뛰어나고 마을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기업	마을기업 고도화	●	●			○	도/경진원
마	7	사업자등록증 상 도내 소재 중소 및 제조기업	수출기업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	도/KITA
마	8	도내 소재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		○	도/경진원
마	9	도내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활성화 지원			○		○	도/경진원
마	10	도내 소재 중소기업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			도/경진원
마	11	도내 소재 중소제조기업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		●		○	도/경진원
마	13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	수출보험 가입비 지원			○		○	도/K-SURE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마	14	도내 중소기업(EMS 일괄계약 요금제 미참여)이면서 제조업 등록업체	국제특송물류비 지원			○		○	도/전북지방 우정청
마	16	도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전라북도 6대 혁신성장산업(에너지산업, 미래수송·기계, 첨단융복합소재, 라이프케어, 스마트농생명, 정보통신융합) 및 4대 주력산업(스마트농생명 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관련 기업 -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에 따른 애로기업 대상 우대 (단, 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22년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보유기업)	수출새싹기업 지원			○		○	도/TP
사	1	지정 지역 내 중소기업(정읍첨단과학산단/김제지평선산단)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원		○				도/정읍시/ 김제시
사	2	도내 200인 미만 제조업체	중소기업 환경개선		○			○	도
사	3	도내 산단/농공단지	산업(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			X	도
사	4	전북광역새일센터 담당 7개군 소재 기업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창업 후 1년 이내) ※창업기업의 (공동)대표자가 직업교육훈련, 창업동아리, 창업컨설팅 등 새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증빙자료 필요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환경개선 지원이후 6개월이내) 한 업체에 한함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		○			○	도/새일센터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 여성친화일손기업(5~300인 미만) ※ 단, 새일센터와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약정한 업체에 한함							
사	5	도내 SW/IT 기업	융복합 SW 강소기업 육성	◆			◇	○	도/TP
사	6	○ 제조업(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C34) 및 지식기 반산업(별표1)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 (제조업은 공장등록 기준, 지식기반산업은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도내 이 전기업인 경우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장 가동 중인 기업)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 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 - 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존재	유망 중소기업 선정·지원				◇	○	도
사	7	공고일 기준 도내에서 3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대표 (단, 창업기업 분야는 사업을 개시한 지 7년 미만,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우수 중소기업인상 시상				◇	○	도
사	8	전북 돈육기업 ○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23년 결산 기준) *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돈육기업 육성	◆	◆		◇	○	도/경진원
사	9	전북 도약기업 ○ 기술력이 탁월하고 지속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 ※ 전년도 매출액 :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23년 결산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 육성	◆	◆		◇	○	도/경진원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 일반트랙, 지역균형트랙의 신청자격 조건은 동일 *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 제외							
사	10	전북 선도기업 - 미래 경쟁력 확보와 지속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 우수한 기술력과 역량 있는 인재들을 확보한 기업 - 매출 생산능력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 - 기업 경영평가, 사업상미래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비전과 잠재력을 갖춘 기업 *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 제외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	◆	◆		◇	○	도/TP
사	11	전북 스타기업 - 전북지역 내 본사 또는 주사업장 소재 중소기업체 - 지역산업(주력) 전·후방 연관 업종 기업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 400억 원 미만 - 지역고용안정, 수출액, 매출액 증가율, R&D 투자 중 한 개 지표 달성 *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 제외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	●	●			○	도/TP
사	12	강소기업 - 전년도('23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강소기업 육성	●	●			○	도/TP
사	17	수출(예정) 중소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지식재산 창출 지원	●	●	●		○	도/전북지식 재산센터
사	18	전북 뿌리기업(10개 지자체 내)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		○			○	도/JIAT
사	1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 중소기업 중 전북도 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이 소재한 자동차/특장차(부품) 및 뿌리산업 관련기업 등	뿌리산업 생태계 혁신성장 지원		●	●		○	도/JIAT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사	20	전북특별자치도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중, 매출액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제조기업 ① 전북 농공단지 내 입주한 기업 ② 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 1억원 이상 50억원 이하인 기업 ③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함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			○	도/경진원
아	1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도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를 임차사용 하는 경우 시·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및 유휴 공장을 매입하려는 기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레드바이오 종사기업 - 의약품, 치료제, 바이오 의료기기 등 이차전지 및 미래모빌리티 산업 종사 기업 - 이차전지) 핵심소재(양극재, 음극재, 전구체, 원소재, 분리막, 전해질·바인더 등), 전지제조, 재사용/재활용 분야 - (미래모빌리티)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UAM, 로봇, ICT 연계 농기계, ICT 연계 조선·건설 기계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			○	중진공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방위산업 종사기업(국가 방위에 필요한 무기·장비품 등 생산) 지식산업 및 영상산업 - (지식산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 (영상산업)「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산업 중 영상물의 제작업							
아	2	(Track1 고용유지기업) 사업장이 전북도에 소재하고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1년 이상 사용하였으며, 재단의 보증부대출 잔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신 용등급이 7등급 이상(1~7)인 자로서, 보증제한 대상 업종이 아닐 것 (Track2 소상공인) 전북도의 소상공인 자금지원 융자대상으로 선정되었으 며, 사업장이 전북도에 소재하고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1년 이상 사용하였 으며, 재단의 보증부대출 잔액이 5백만원 이상인 개인신용등급이 7등급 이 상(1~7)인 자로서, 보증제한 대상 업종이 아닐 것	징검다리 전화보증 지원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3	대표 개인 신용평점 710점 이상, 업력 3개월 이상 도내 소재 소기업(문화·예술인 자금지원 추천서 발급/영위 중)	예향전북 문·예 진흥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4	공고일 기준 도내 30년 이상 사업 운영 소상공인 및 업체 대표자의 직계 가족으로 가업(동일업)을 승계한 업체, 사업자등록증 업태(종목) 기준 지원 제외대항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전북특별자치도 천년명가 육성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5	업력 3년 이상 도내소재 제조기업	자동차등 기자재·부품산업 활력제고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6	업력 6개월 이상 개인기업(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코로나 금융사각지대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9	도내 3년 이상 군산형일자리사업 참여 기업	전북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10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갑질 피해기업지원				◇	○	전북신보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1. 사업장이 전라북도내 소재하고 업력이 3개월 이상으로 가동(영업)중일 것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갑질 피해기업일 것 3. 전라북도 불공정거래 심의위원회로부터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일 것 4.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CCC"등급 이상일 것 (해당 사항은 재단에서 심사 시 알 수 있음) 5. 타 재단 이용 보증잔액이 없을 것 6. 피해 배상(보상)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소를 제기할 예정일 것 (합의, 조정 등 포함)	특례보증						
아	1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1. 사업장이 전북자치도 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으로 현재 영업(가동)중 일 것. 다만, '청년창업기업'은 업력 3개월 이상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함 2. 대표자(실제경영자 기준)의 개인 신용평점이 710점 이상(710~1,000점)일 것 3.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4. 타 재단 보증잔액이 없을 것 5. "전라북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 영위기업일 것	전북 기술창업 활성화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12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 트랙1 1. 사업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가동(영업)중일 것 2.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재단의 신용보증서를 1년 이상 이용 중인 기보증 업체일 것 # 트랙 2 1.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I' 또는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II'의 트랙1을 1년 이상 이용중인 소기업 등	민생회복 응급구조 119 특례보증				◇	○	전북신보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아	13	① Track1("예비창업자 지원부문")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재단이 정하는 "사업(창업)계획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로 한다.(소기업·중기업 제외)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미만(예비창업자 포함)일 것 2.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일 것 3. 대표자(예비창업자)가 보증신청 기업 외에 다른 기업체의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아닐 것 4.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CCC"등급 이상일 것 5. 재단이 지정하는 (재)창업교육과 (재)창업컨설팅(또는 역량강화컨설팅)을 이수(수진)하였을 것 6. 컨설턴트의 '진단 Solution'을 이행하였을 것 7. 자기부담 50% 이상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증승인 전까지 자금조달 내역을 증빙할 것 8. 예비창업자는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시한 첫 번째 보증상담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② Track2("초기창업자 지원부문") 대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한다.(중기업 제외)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업력 3개월 이상일 것 2.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개인 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일 것 3. 재단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평가등급이"B"등급 이상일 것 4. 재단이 지정하는 역량강화교육과 역량강화컨설팅을 이수(수진)하였을 것 5. 컨설턴트의 '진단 Solution'을 이행하였을 것 6. Track1 또는 '자영업자 다시서기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예비)창업자는 지원 후 2년이 경과하고 재단이 정하는 "성과지표"를 충족할 것	4無 안심자금 지원 특례보증				◇	○	전북신보
아	15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기업 등	군산				◇	○	전북신보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1. 사업장이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 후 현재 영업(가동) 중일 것 2. 대표자 개인 신용평점 710점 이상(710~1,000점)일 것 3. 자동차, 조선 관련 협력제조업체 또는 자동차,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일 것(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포함) 4. 자동차, 조선 고나련 수주실적 잔고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것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 지원 특례보증						
아	16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 공제사업자금		◆		◇	○	중소기업중앙회
아	17	업종제한 없이 개인·법인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보증				◇	○	신용보증기금
아	18	창업일(개업 또는 설립일)로부터 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내 인 창업기업 중 아래 3가지 유형에 속하는 기업 - 전문자격 보유, 교수·박사·연구원 등 - 식재산권 보유, 창업경진대회수상 등 - 차세대 성장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	○	신용보증기금
아	19	지식자산을 개발, 이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지식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해서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사업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	지식재산보증 지원				◇	○	신용보증기금
아	20	규모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단, 중견기업은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대상) 업종 : 제한 없음(보험운용 필요성이 낮은 일부 업종 제외) 매출액 : 제한 없음 영업실적 : 최근 결산일 현재 영업실적 1년 이상 - 간편보험, 창업보험(7년 이내 창업)은 영업실적 요건 없음 - 일석e조보험, 스타트업보험은 2년 이상	신용보험-매출채권보 험				◇	○	신용보증기금
아	21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련 업종 영위기업	소재·부품·장비분야 경쟁력 강화 지원프로그램		○			○	신용보증기금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아	22	- 중소기업 : CPA 감사보고서 보유 시 신보 보증심사등급 K10 이상, 감사보고서 미보유 시 신보 보증심사등급 K9 이상 - 중견·대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BB- 이상	유동화회사보증				◇	○	신용보증기금
아	23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 상기대상기업중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기업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기업 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대출 및 무역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하여는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만 제외됩니다.	기술보증				◇	○	기술보증기금
아	24	기술창업기업/신기술사업자 등	기술창업기업 우대지원 프로그램				◇	○	기술보증기금
아	25	수출 예상/실적/주력/선정 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보증 지원제도		●	●		○	기술보증기금
아	26	일자리 창출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과거 1년전 대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및 20%이상 증가 - 최근 1년 이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장애인,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고용, 일자리안정자금수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유지 등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지원 제도		●			○	기술보증기금
아	27	등록 산업재산권 관련기술, 컴퓨터 프로그램법에 의한 등록 프로그램 등 모든 무형의 기술 또는 기술보유기업, 예비창업자, 비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기술의 권리 보유자가 상이할 경우 동의 필요)	R&D 보증, 지식재산(IP) 평가보증	●	●			○	기술보증기금
아	28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	민간투자 연계보증 등	◆			◇	○	기술보증기금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가장 납입 또는 엔젤투자자와 엔젤투자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아	29	①외부감축기업 : 우수기술 보유 기술혁신형기업 ②자체감축기업 : 中·高탄소 업종 영위 기술혁신형기업 등 ③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 신·재생에너지 발전·산업 영위기업	탄소가치평가보증		●	●		○	기술보증기금
차	1	○ 최소 '3개 이상'의 '기업'(주관기관 포함)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신청	산단 R&BD 역량강화	○				○	산단공
		<table><tr><th>구분</th><th>입지요건</th><th>업종요건</th></tr><tr><td>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td><td>「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td><td>「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로써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td></tr></table>							
구분	입지요건	업종요건							
다년도 중형 R&BD (공동비즈니스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산업집적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및 같은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제6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지식산업 또는 정보통신산업을 운영하는 기업체로써 '붙임1'에 해당하는 업종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다년도 대형 R&BD (대개조산단 협업형)	산단대개조 지역 "거점 단지"에 사업장을 보유 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 기업								
차	2	산단 입주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			○	산단공
차	3	산단 입주기업			R&BD 기획 컨설팅 지원	○				○	산단공
차	4	전국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 완료가능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MC 회원사			기술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술료 지원	○				○	산단공
차	10	전라북도 소재 1년 이상 경영실적 및 현재 생산 중이거나 생산 가능한 제품이 있는 섬유 제조 및 관련 기업			안전보호 융복합섬유 기술개발		○			○	ECO융합 섬유연구원
차	12	- 전북 섬유기업 중 디지털 아이템 검증 및 전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 디지털 전환 관련 성장추진을 위한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기업 제외			전북섬유패션기업 디지털 역량강화		○			○	ECO융합 섬유연구원
타	6	금융기관이 수출자에 대해 아래 대출자금에 해당되는 신용보증부 대출 또 는 지급보증을 실행하는 경우			수출신용보증(선적전)			○		○	K-SURE
타	7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 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수출신용보증(매입)			○		○	K-SURE
타	8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 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수출신용보증(포괄매 입)			○		○	K-SURE
타	9	신용상 문제가 없는 수출자			수출신용보증(선적후)			○		○	K-SURE

분류	번호	대상	정책명	금융지원 분야				한계기업 지원 여부	지원 기관
				기술	설비 (운전)	수출	경영 안정		
		☞ K-SURE 내부규정에 따른 보증금지, 보증제한 및 기타 거절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제한							
타	1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액 규모에 따라 지원트랙을 구분하고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 매출액 규모에 따라 보조비율(50~70%) 차등	수출바우처			○		○	중진공
타	12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	수출인큐베이터지원		○	○		○	중진공
타	14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단지 입주기업	토탈마케팅 지원		○	○		○	산단공
타	15	MC회원사	지식재산권출원, 시험분석, 데이터진단 및 활용비 지원	●	●				산단공
타	20	전년도 수출 2천만달러 이하 중소기업 중 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자금 및 비용 지원			○		○	KITA
타	21	한국무역협회 회비 완납 회원사	수출지원 바우처 서비스			○		○	KITA
파	11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전북인 기업 중 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자 등	제조물책임(PL)보험 가입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
파	15	도내 농생명분야 식품제조기업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 육성지원사업		○			○	바이오진흥원

주: 정책의 구분 중, ○는 단일 목적이고, ●은 특성이 중복인 경우, 그리고 ◇은 경영안정 단일 목적이며, ◆은 경영안정과 중복된 것을 의미함.

자료: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지원 시책 안내서

기초과제 2024-03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발행인 | 이 남 호

발행일 |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553-1 95320 (PDF)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2024년도 주요 연구과제

기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한계기업의 현황과 과제
전북특별자치도 물 수요량 분석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 연구
새만금국제공항 항공물류 활성화 방향 기초연구

미래전략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인구 유입방안 연구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 전략 연구
「태조 이성계」 지역 대표 자산화 방안 연구

기획연구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자치도 서남권 균형발전 지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용 대마(헵프) 산업 육성 전략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전북자치도 디지털대전환 여건분석 및 대응방향 연구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기획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테크 산업육성 전략 연구

정책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고도화 전략 연구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방안 연구
전북형 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도입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계절근로자제 관리 모델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김 육상양식 집적화 단지 사업화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인구 확대 방안 연구: 청년 여성을 중심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 특화 관광자원개발 연구
전북자치도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전략
재외동포 정착지원 및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전략수립 연구
프로스포츠클럽 창단 타당성 분석 연구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실태와 발전방안
지역자원을 활용한 반려동물산업 육성 방향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농촌특화지구 운영 및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발전 방안

현안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인권정책 방향 및 중장기 로드맵 구상
새만금 산단 전력인프라 구축 대응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활동 현황조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해외도시간 협력관계 구축 방안
건축물 대지의 조경 관리방안 연구
전북특별자치도 무인이동체산업 육성 방향



55068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주로 1696

Tel 063. 280. 7100

Fax 063. 286. 9206

www.jthink.kr

